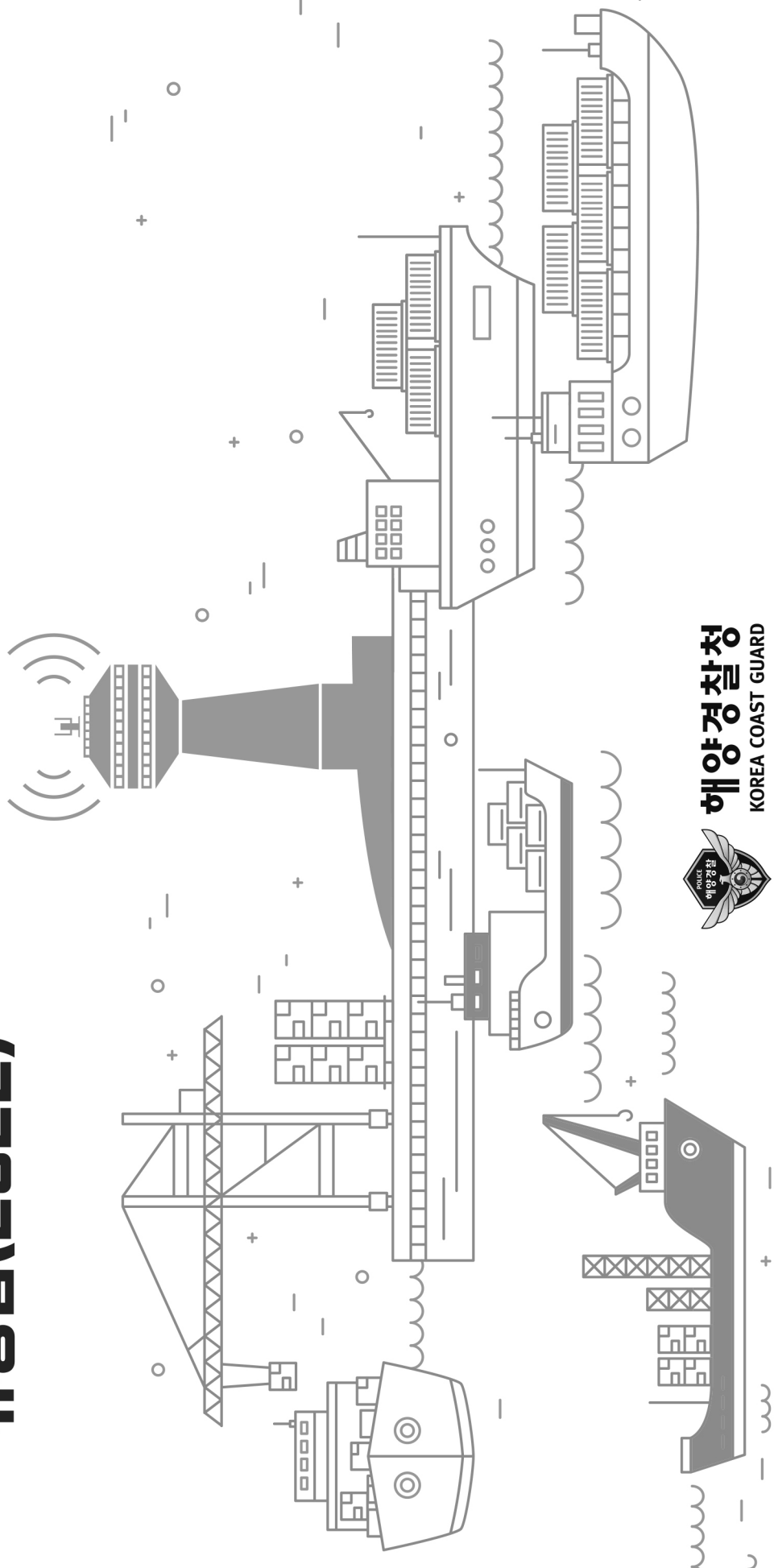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규정집(2022)



해양경찰청
KOREA COAST GUARD

해양경찰 헌장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해양경찰이다.

우리는 헌법을 준수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우리는 **해양주권 수호**와 **해상치안 확립**에 힘쓰며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에 굳은 각오로 다음을 실천한다.

- 1, **‘바다의 수호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인류의 미래 자산인 해양 보전에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 1, **‘정의의 실현자’**로서 청렴과 공정을 생활화하며
원칙과 규범을 준수하고 올바르게 법을 집행한다.
- 1, **‘국민의 봉사자’**로서 소통과 배려를 바탕으로
국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해양서비스를 제공한다.
- 1, **‘해양의 전문가’**로서 창의적 자세와 도전 정신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며 임무를 완수한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규정집(2022)

CONTENTS

I

선박교통관제 법령

- 9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3단비교표
- 26 시행령 [별표 1] ~ [별표 2]
- 28 시행규칙 [별표 1] ~ [별표 2]
- 31 시행규칙 [별지 1] ~ [별지 2]

II

선박교통관제법 해설서

- 35 법령 개요
- 39 조문별 해석 및 Q&A

III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 103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 105 [별표 1] ~ [별표 5]

IV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 지정 고시

- 135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
지정 고시



V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 139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 144 [별표 1]

VI

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147 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150 [별표 1] ~ [별표 7]
- 166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V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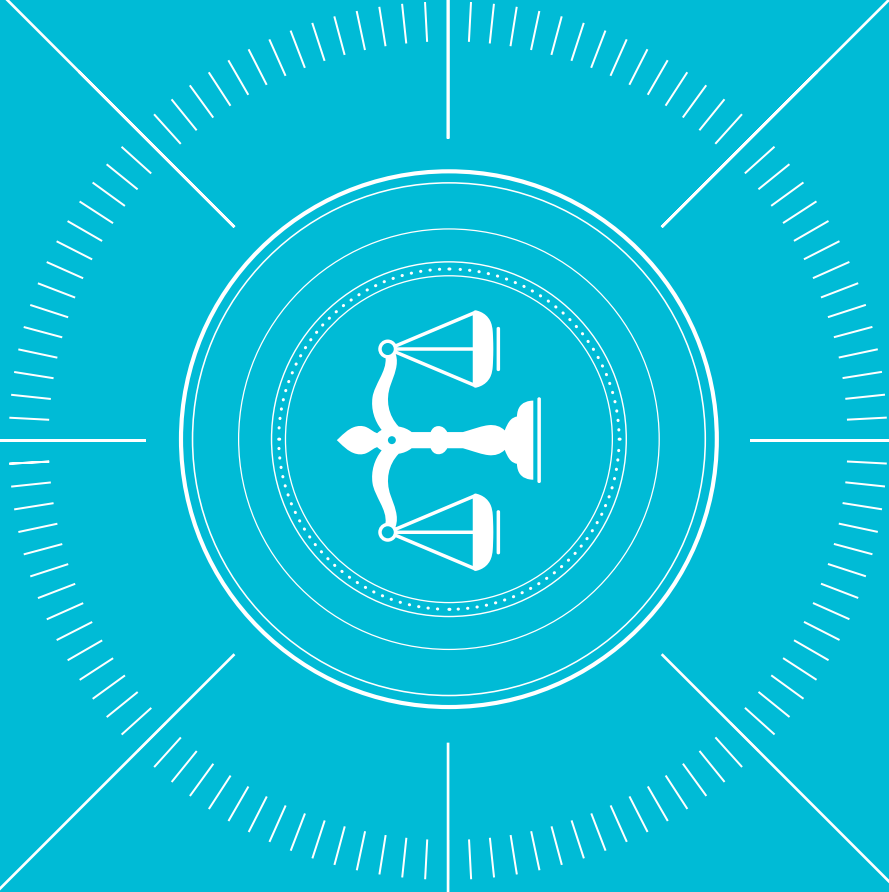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 177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 181 [별표 1] ~ [별표 7]
- 188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선박교통관제 법령

- 9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3단비교표
- 26 시행령 [별표 1]~[별표 2]
- 28 시행규칙 [별표 1]~[별표 2]
- 31 시행규칙 [별지 1]~[별지 2]



3단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선박교통관계에 관한 법률」

선박교통관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700호, 2019. 12. 3., 제정]	선박교통관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16호, 2021. 12. 14., 일부개정]	선박교통관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513호, 2021. 12. 14., 일부개정]
<p>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교통관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교통의 안전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박교통관계"란 선박교통의 안전을 증진하고 해양환경과 해양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고 선박과 통신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선박의 동정을 관찰하며 선박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정보 및 항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항만운영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선박교통관계구역"이란 선박교통관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역을 말한다. 3. "선박교통관계사"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선박교통관계를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p>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영해 및 내수(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수·늪 등은 제외한다)에 있는 선박 중에서 제13조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p> <p>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선박교통의 안전 및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교통관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p>	<p>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교통관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선박교통관계에 관한 법률 <small>[법률 제16700호, 2019. 12. 3. 제정]</small>	선박교통관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small>[대통령령 제32216호, 2021. 12. 14., 일부개정]</small>	선박교통관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small>[해양수산부령 제513호, 2021. 12. 14., 일부개정]</small>
<p>제5조(선박소유자의 책무) ① 선박소유자는 국가의 선박교통관계에 관한 정책에 협력하여 자기가 소유·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 선박교통관계에 따르도록 운항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제반 안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박교통관계의 목적·용어, 통신절차 및 정보교환 방법 2. 선박교통관계의 관련 규정 및 제반 준수사항 3. 국내 선박교통관계 운영 현황 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제1항에 따른 운항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방법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조(운항자에 대한 교육·훈련) ① 「선박교통관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p> <p>② 선박소유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계관리서(해당 선박교통관계구역에서 공사·작업·조사 등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로 한정한다) 2. 「선박직업법」 제2조제4호3에 따른 지정교육기관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3.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p>제2조(운항자에 대한 교육·훈련) 「선박교통관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항로에 관한 사항 2. 「해사안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안에서 항로지정제도에 관한 사항 3. 「해사안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p>제6조(국제 교류 협력의 증진)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계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단체 등과 선박교통관계에 관한 정보교환 및 공동 조사·연구 등 국제 교류·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선박교통관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p>		
<p>제8조(선박교통관계 기본계획) 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은 「해사안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어야 한다.</p> <p>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박교통관계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선박교통관계 운영에 관한 사항 3. 선박교통관계를 위한 시설의 구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p>제3조(선박교통관계 기본계획)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해 필요하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할구역에서의 해상교통량, 선박 이동경로, 해양사고 현황 2. 관할구역에서의 레이더, 초단파 무선전화,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무선설비의 설치·운영 현황 및 계획 3. 관할구역에서 선박이 접안(接岸)하거나 계류할 수 있는 	

선박교통관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700호, 2019. 12. 3. 제정]	선박교통관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16호, 2021. 12. 14., 일부개정]	선박교통관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513호, 2021. 12. 14., 일부개정]
<p>4. 선박교통관계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p> <p>5. 선박교통관계 관련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p> <p>6. 선박교통관계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p> <p>7. 그 밖에 선박교통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④ 해양경찰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⑤ 해양경찰청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p> <p>⑥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시설의 설치·운영 현황 및 계획</p> <p>4. 관할구역에서의 선박교통관계 시행의 필요성</p> <p>5.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해양경찰청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경찰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제9조(선박교통관계 시행계획) ① 해양경찰청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선박교통관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해양경찰청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시행계획에 포함할 내용과 수립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조(선박교통관계 시행계획)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의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정·보완 필요성을 검토한 사항 3.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1항”은 “법 제9조제1항”은 “같은 조 제2항”으로 본다.</p> <p>③ 해양경찰청은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p>	<p>제4조(선박교통관계 시행계획)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의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정·보완 필요성을 검토한 사항 3.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1항”은 “법 제9조제1항”은 “같은 조 제2항”으로 본다.</p> <p>③ 해양경찰청은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p>
<p>제10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제출 등) ① 해양경찰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p>	<p>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포) 해양경찰청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한다.</p>	

선박교통관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700호, 2019. 12. 3. 제정]	선박교통관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16호, 2021. 12. 14., 일부개정]	선박교통관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513호, 2021. 12. 14., 일부개정]
<p>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해양경찰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p>	<p>제6조(선박교통관계구역의 설정기준) 해양경찰청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역 중에서 유효한 레이다 탐지범위 내의 해상교통량 및 이동경로 등을 고려하여 선박교통관계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등 2. 「해사안전법」 제10조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3.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 	<p>제3조(선박교통관계관서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선박교통관계관서(이하 "선박교통관계관서"라 한다)는 「해양경찰청장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에 따른 해상교통관계세터로 한다.</p> <p>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교통관계관서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p>
<p>제11조(선박교통관계의 시행) ① 해양경찰청은 선박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박교통관계를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계를 시행하기 위한 선박교통관계구역의 설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해양경찰청은 효율적인 선박교통관계의 시행을 위하여 선박교통관계관서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계관서(이하 "선박교통관계관서"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제7조(선박교통관계에 관한 규정)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계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계관서(이하 "선박교통관계관서"라 한다)의 사용명칭 2. 법 제13조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이하 "관제대상선박"이라 한다)이 선박교통관계구역 안에서 이동하거나 해당 선박에 도선사가 승선·하선하는 때의 관제통신 방법 3. 기상이 악화되거나 시계(視界)가 제한된 경우의 선박은 항통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해양경찰청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선박교통관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p>	
<p>제12조(선박교통관계에 관한 규정) ① 해양경찰청은 관한 선박교통관계구역에서 제13조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이 따라야 할 선박교통관계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p> <p>② 해양경찰청장이 제1항에 따라 선박교통관계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는 경우 선박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선박교통관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700호, 2019. 12. 3., 제정]	선박교통관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16호, 2021. 12. 14., 일부개정]	선박교통관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513호, 2021. 12. 14., 일부개정]
<p>제13조(관계대상선박) 선박교통관제를 실시하는 대상 선박(이하 “관계대상선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항해에 추항하는 선박 2.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중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내항어선은 제외한다) 3. 「해사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4. 그 밖에 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이동하는 선박의 특성 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선박 		<p>제4조(관계대상선박의 무선설비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관계대상선박(이하 “관계대상선박”이라 한다)이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는 조단파 무선전화를 말하며, 같은 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관제통신 주파수는 별표 1과 같다.</p> <p>②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는 「전파법」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해야 한다.</p>
<p>제14조(선장의 의무 등) ① 관계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계에 따라야 한다. 다만, 선박교통관계에 따른 경우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박교통관계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관계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관제에도 불구하고 그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한다.</p> <p>③ 관계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출입하려는 때에는 해당 선박교통관제구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관계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출입·이동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와 관제통신 주파수를 갖추고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응답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의 장애로 인하여 선박교통관제사와 지정된 주파수로 통화가 불가능할 때에는 휴대전화 등 다른 통신주파수를 이용하여 보고할 수 있다.</p> <p>⑤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항행 중인 관계대상선박의 선장은 항로상의 장애물이나 해양사고 발생 등으로 선박교통의 안전을 해지거나 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계대상선박의 신고 절차, 관제구역별 관제통신의 제원(諸元)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조(관계대상선박의 신고) ① 관계대상선박의 선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0. 7.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입 신고: 선박교통관제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선박명, 호출부호, 통과위치 나. 선박교통관제구역 안에 있는 「항만법」 제2조제5호 가목1)에 따른 정박지(이하 “정박지”라 한다) 또는 같은 목 4)에 따른 계류시설(이하 “계류시설”이라 한다)에 입항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입항 예정 시각, 입항 시각 및 입항 장소 다.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사항 2. 진출 신고: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나가는 경우가 선박명, 통과위치 나. 선박교통관제구역 안에 있는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출항 예정 시각, 출항 시각 및 출항 장소 다.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사항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선박교통관제구역별로 정하여 고시한다.</p>	

선박교통관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700호, 2019. 12. 3., 제정]	선박교통관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16호, 2021. 12. 14., 일부개정]	선박교통관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513호, 2021. 12. 14., 일부개정]
<p>제15조(관제통신의 녹음) ① 선박교통관계관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른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통신 녹음방법 및 보존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조(관제통신의 제원) 해양경찰청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박교통관계관서별 관제통신 제원(諸元)을 고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호출부호 2. 관제통신시설 3. 조난·긴급·안전 통신용 채널 4. 관제통신용 채널 5. 운용시간 	
	<p>제10조(관제통신 녹음)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관제대상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다음 각 목의 선박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13명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 나. 가목 외의 선박으로서 총톤수 3천톤 이상의 선박 2. 「해운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여객선 ② 선박교통관계관서와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의 선장(이하 “선박교통관계관서등”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관제통신을 한 날짜 및 시간과 함께 보존해야 한다. ③ 선박교통관계관서등은 제2항에 따라 관제통신을 녹음하려는 경우 전자적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관제통신 녹음시설의 일시적인 고장 등으로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관제통신 녹음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기(手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의 보존기간은 60일로 한다. 다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선박교통관계에 관한 법률 <small>[법률 제16700호, 2019. 12. 3. 제정]</small>	선박교통관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small>[대통령령 제32216호, 2021. 12. 14., 일부개정]</small>	선박교통관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small>[해양수산부령 제513호, 2021. 12. 14., 일부개정]</small>
<p>제16조(선박교통관계자의 자격 등) ① 관계업무는 선박교통관계자가 수행하여야 한다.</p> <p>② 선박교통관계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시행하는 선박교통관계자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한다.</p> <p>③ 선박교통관계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기적인 교육 및 평가를 받아야 한다.</p> <p>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계자 교육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교통관계관서의 관계통신 녹음 및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p>	
<p>제16조(선박교통관계자의 자격 등) ① 관계업무는 선박교통관계자가 수행하여야 한다.</p> <p>② 선박교통관계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시행하는 선박교통관계자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한다.</p> <p>③ 선박교통관계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기적인 교육 및 평가를 받아야 한다.</p> <p>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계자 교육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선박교통관계자의 교육 및 평가) ① 선박교통관계사가 되려는 공무원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론 및 실습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선박교통관계사 기본교육(이하 "기본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p> <p>② 선박교통관계사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중 가장 최근에 이수한 교육의 이수일부터 5년 6개월 이내에 이론 및 실습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선박교통관계사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다만,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교육 2. 보수교육 3.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교육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는 이론 및 실습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교육참여도를 그 대상으로 하고,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론 및 실습 내용에 대한 평가점수와 교육참여도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40점 미만의 평가항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하며, 불합격 처리된 사람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p>	<p>제5조(선박교통관계자의 자격)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12. 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5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면허 취득 후 승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 또는 정보통신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개설한 선박교통관계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면허를 취득한 사람 <p>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p> <p>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p> <p>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교통관계와 관련된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 12. 14.></p>
<p>제17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교통관계사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p>		<p>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계사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선박교통관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700호, 2019. 12. 3. 제정]	선박교통관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16호, 2021. 12. 14., 일부개정]	선박교통관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513호, 2021. 12. 14., 일부개정]
<p>②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한다.</p> <p>③ 해양경찰청장은 전문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④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⑤ 해양경찰청장은 제1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생의 교육·훈련과정 이수 처리를 한 경우 ⑥ 해양경찰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교육기관의 연혁·조직 및 운영계획 2. 교육시설 현황 3. 교육강사의 이름, 학력·경력 등 자격요건, 교육강사별 담당 과목 및 시간 4. 교육과목 및 교육·평가방법 5. 연간 교육계획 6. 해당 교육기관의 예산명세 7. 정관(법인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별표 2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교육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5년마다 전문교육기관이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해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p>제18조(선박교통관계사의 업무) 선박교통관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박교통관계구역에서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에 대한 관찰확인, 안전정보의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조언·권고·지시 2. 혼잡한 교통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선박교통정보 및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상특보 등의 제공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항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선박 출입신고·선석(船席)·정박지(碇泊地)·도선 		<p>제7조(선박교통관계사의 업무) 법 제18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제업무 관련 법규 위반의 감시·적발 및 관계기관의 위법 선박 감시·적발 지원 2. 선박교통관계구역 내의 해양사고 발생 사실을 최초로 접수한 경우 관찰 해양경찰서에 해당 사실 전파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에의 자료 입력 4. 그 밖에 선박교통관계관서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업무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small>[법률 제16700호, 2019. 12. 3., 제정]</small>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small>[대통령령 제32216호, 2021. 12. 14., 일부개정]</small>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small>[해양수산부령 제513호, 2021. 12. 14., 일부개정]</small>
<p>(導船)·예선(曳船) 정보 등 항만운영정보의 제공</p> <p>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역항 질서 단속에 관한 정보의 제공</p> <p>5. 「해사안전법」 제38조에 따른 선박 출항통제 관련 정보의 제공</p> <p>6. 그 밖에 선박교통안전과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p>		
<p>제19조(관제업무 절차) 선박교통관제사가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업무 수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교통관제사가 선박이 명백한 사고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제 업무 절차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8조(관제업무 절차) ① 법 제19조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단계별 절차에 따라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관찰·확인):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관제대상 선박이 해양사고 위험이 있는지 관찰·확인 2단계(정보제공): 선박교통관제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제대상선박에서 요구하는 경우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 3단계(조언·권고): 관제대상선박에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 관한 조언·권고 4단계(지시): 관제대상선박이 명백한 해양사고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 또는 안전조치를 지시 <p>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절차의 세부 사항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따른 해역별 특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p>
<p>제20조(선박교통관제사의 권한) ①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해상기상상태, 항로상태, 해상교통량 및 해양사고 등을 고려하여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박의 입항·출항 및 이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②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비함정 출동과 도선 또는 예선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p>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small>[법률 제16700호, 2019. 12. 3., 제정]</small>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small>[대통령령 제32216호, 2021. 12. 14., 일부개정]</small>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small>[해양수산부령 제513호, 2021. 12. 14., 일부개정]</small>
<p>제21조(관제시설의 설치·관리) ① 해양경찰청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하여 레이더, 초단파 무선전화,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관제업무에 위한 시설(이하 “관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해양경찰청은 관제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관제시설의 수리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제9조(관제시설의 설치·관리) ① 해양경찰청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관제시설(이하 “관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상교통량 등 선박교통 상황 2. 지리적 조건 등 설치지역의 환경 3. 관제시설의 비상운용 <p>② 해양경찰청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관제시설의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유지·보수를 실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기점검: 관제시설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한 주기마다 실시하는 점검 2. 수시점검: 관제시설의 고장 또는 성능 저하가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 3. 조정·정비: 제1호 및 제2호의 점검 결과에 따라 원래의 기능·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제시설을 변경·수리·교체하는 작업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p>
<p>제22조(관제시설의 기술기준) ① 관제시설은 「전파법」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② 해양경찰청은 관제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그 성능을 개량하려는 때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과 기준에 따라야 한다.</p> <p>③ 해양경찰청은 관제시설의 기능 및 규격을 통일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제10조(관제시설의 기술기준)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관제시설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레이더: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으로 개설했다가 가능한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야 하며, 관제대상선박을 탐지·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2. 초단파 무선전화: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으로 개설했다가 가능한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야 하며, 관제대상선박과 음성통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선박자동식별장치: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으로 개설했다가 가능한 161.975메가헤르츠(MHz)와 162.025메가헤르츠(MHz)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야 하며, 관

선박교통관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700호, 2019. 12. 3., 제정]	선박교통관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16호, 2021. 12. 14., 일부개정]	선박교통관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513호, 2021. 12. 14., 일부개정]
<p>제23조(기술)의 개발·지원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시설의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12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관제시설의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제시설 기술개발 추진계획(이하 “기술개발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신설 2021. 12. 14.></p> <p>② 기술개발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 12. 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제시설 기술개발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관제시설 기술개발의 고도화와 기술개발성과의 이전·활용에 관한 사항 3. 관제시설 기술개발 분야의 산업계·학계·연구기관 간의 협력 및 공동연구 4. 관제시설 기술개발사업의 세부운영계획 5. 그 밖에 관제시설 기술개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③ 해양경찰청장은 기술개발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p> <p>④ 해양경찰청은 법 제2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관제시설의 기술개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제시설 관련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의 분석 2. 관제시설의 성능 향상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3. 관제시설의 국산화를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p>제대상선박의 위치 등 정보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p> <p>4. 선박교통관계 운영 시스템: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관제시설 등에서 수신한 정보를 통합·전시할 수 있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관제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p>

선박교통관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700호, 2019. 12. 3. 제정]	선박교통관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16호, 2021. 12. 14., 일부개정]	선박교통관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513호, 2021. 12. 14., 일부개정]
<p>제24조(한국선박교통관계협회) ① 선박교통관계에 대한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 해양경찰청장 등의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한국선박교통관계협회(이하 "관계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p> <p>② 관계협회는 법인으로 한다.</p> <p>③ 관계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박교통관계자의 관제업무 수행을 위한 연구 활동 2. 선박교통관계자 교육훈련 및 평가에 관한 연구 및 사업 수행 3. 관제시설의 발전과 기술향상에 관한 연구 4. 해양사고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국내외 선박교통관계 관련 법규의 제정·개정·개정에 관한 연구 6. 선박교통관계 분야 국내외 유관기관 간 학술교류, 정보 교환 및 상호협력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선박교통관계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p>④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협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협회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p> <p>⑤ 관계협회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⑥ 관계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4. 그 밖에 관제시설 외 기술개발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 12. 14.]</p>	
<p>제13조(한국선박교통관계협회) ① 법 제2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박교통관계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분석 2. 선박교통관계 관련 홍보 및 간행물의 발간 ② 해양경찰청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한국선박교통관계협회에 재정지원을 한 경우 해당 사업의 운영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small>[법률 제16700호, 2019. 12. 3., 제정]</small>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small>[대통령령 제32216호, 2021. 12. 14., 일부개정]</small>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small>[해양수산부령 제513호, 2021. 12. 14., 일부개정]</small>
<p>제2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양경찰청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14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 12. 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1의2.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제시설의 설치 및 관리 2.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평가에 관한 업무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한다. 	
<p>제26조(벌칙)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4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2.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관제통신을 청취·응답하지 아니한 사람 3. 제14조제6항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의 신고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4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부과·징수한다. 	<p>제1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부 칙 [법률 제16700호, 2019. 12. 3.]	부 칙 [대통령령 제30752호, 2020. 6. 2.]	부 칙 [해양수산부령 제414호, 2020. 6.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2조(선박교통관계사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해사안전법」 제36조의2제1항·제3항 및 제4항과 종전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및 평가를 통과한 사람은 각각 제11조에 따라 해당 교육을 이수한 사람 및 해당 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해사안전법」 제36조의2제1항·제3항 및 제4항과 종전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교육은 제11조에 따른 교육으로 본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선박교통관계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해사안전법」 제3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종전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위반하여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다목 중 “「해사안전법」 제36조의2에 따른 선박교통관계사 또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선박교통관계사”를 “「선박교통관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교통관계사”로 한다. ②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8호 중 “「해사안전법」 제36조”를 “「선박교통관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③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선박교통관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법률 제16700호, 2019. 12. 3.]	부 칙 [대통령령 제30752호, 2020. 6. 2.]	부 칙 [해양수산부령 제414호, 2020. 6. 3.]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21호를 삭제한다.</p> <p>제36조 및 제3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p> <p>제44조제2항을 삭제한다.</p> <p>제107조제2호의2를 삭제한다.</p> <p>제110조제3항제15호, 제15호의2 및 제15호의3을 각각 삭제한다.</p> <p>②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p> <p>제4장(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을 삭제한다.</p> <p>제48조제1항제1호 중 “제11조, 제20조제1항, 제22조”를 “제11조”로 한다.</p> <p>제56조제9호의2를 삭제한다.</p> <p>제59조제1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제20조 및 제22조를 위반한 자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2조제1항제32호 중 “징수(같은 조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p> <p>별표 2 제2호거목 및 너목을 각각 삭제한다.</p> <p>②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1조제5항제5호를 삭제한다.</p> <p>별표 5 제2호너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p>	
<p>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부 칙 [대통령령 제30876호, 2020. 7. 28.] (항만법 시행령)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p> <p>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p> <p>⑩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제1항제1호나목 중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을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로, “같은 목 (4)”를 “같은 목 4)”로 한다.</p> <p>⑪부터 ⑬까지 생략</p> <p>제15조 생략</p>	

25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운항자 교육·훈련의 내용(제2조제1항 관련)

구분	주요 내용
1. 선박교통관제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선박교통관제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가.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나. 국제항로표지협회 선박교통관제 매뉴얼 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2. 통신절차 및 정보교환 방법	가. 선박교통관제관서별 신고 절차 나. 일반통신, 긴급통신, 조난통신 및 안전통신의 절차 및 정보 교환 방법 다. 해양사고 발생 시 보고 및 대응 절차
3. 선박교통관제 관련 규정 및 제반 준수사항	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나. 관제대상선박의 범위 다.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의 의무 라. 관제통신의 녹음 마. 관제업무 절차 바. 선박교통관제사의 권한
4. 국내 선박교통관제 운영 현황	가. 선박교통관제관서별 관제구역 나. 선박교통관제관서별 통신주파수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1호	90	150	300
나.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갖추지 않거나 관제통신을 청취·응답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2호			
1) 무선설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300		
2) 관제통신을 청취·응답하지 않은 경우		90	150	300
다.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	60	100	200
라.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의 신고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3호	90	150	300
마.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4호	90	150	300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관제통신 주파수(제4조제1항 관련)

연번	채널번호(CH)	통신주파수(MHz)	통신방식
1	06	156.300	단신
2	08	156.400	단신
3	09	156.450	단신
4	10	156.500	단신
5	11	156.550	단신
6	12	156.600	단신
7	13	156.650	단신
8	14	156.700	단신
9	15	156.750	단신
10	16	156.800	단신
11	17	156.850	단신
12	20	(수신)157.000 (송신)161.600	복신
13	22	(수신)157.100 (송신)161.700	복신
14	67	156.375	단신
15	68	156.425	단신
16	69	156.475	단신
17	70	156.525	단신
18	71	156.575	단신
19	72	156.625	단신
20	73	156.675	단신
21	74	156.725	단신
22	75	156.775	단신
23	76	156.825	단신
24	77	156.875	단신
25	87	157.375	단신
26	88	157.425	단신

비고

- 채널번호 15번 및 17번은 해양방제업무용으로 사용한다.
- 채널번호 70번은 조난·안전 및 호출을 위한 디지털선택호출용으로 사용한다.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6조제2항 관련)

1. 조직 및 인력 기준

가. 조직: 교육·훈련·상담·자문·지도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조직이 있어야 한다.

나. 인력기준

1) 교육강사는 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과정을 총괄하는 책임교수와 교육과정별 과목을 담당하는 전임교수로 구분한다.

2) 책임교수와 전임교수의 자격은 각각 다음과 같다.

가) 책임교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제3호나목에 따른 과목과 관련된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선박직원법」 제2조제4호의3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조교수 이상으로 제3호나목에 따른 과목을 5년 이상 교육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전임교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제3호나목에 따른 과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선박직원법」 제2조제4호의3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조교수 이상으로 제3호나목에 따른 과목을 3년 이상 교육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강의실, 브리핑실, 실습실 등 선박교통관제사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충분히 확보할 것

나. 건축 관계 법규, 「소음·진동관리법」 및 「소방법」 등 관련 법규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다음의 장비를 포함한 모의 선박교통관제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장비명	보유기준
음성처리 서버	1대
초단파무선전화/디지털선택호출 송수신장비 (VHF/DSC, 헤드셋 및 스피커를 포함한다)	5대
선박교통관제 운영석	5대
평가시스템 서버	1대
통합감시제어 서버	1대

비고

1. “음성처리 서버”란 교육생 간에 가상으로 음성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환기 역할을 하는 장비를 말한다.
2. “초단파무선전화/디지털선택호출 송수신장비(VHF/DSC)”란 교육생 간의 음성통신에 사용되는 장비를 말한다.
3. “선박교통관제 운영석”이란 선박자동식별장치나 레이더 타겟 등을 이용하여 선박 동정을 감시하고 충돌위험을 파악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4. “평가시스템 서버”란 교육생의 모의 선박교통관제운영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5. “통합감시제어 서버”란 교수가 교육생의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실행 및 관리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라. 화장실, 급수시설 등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마. 그 밖에 전력설비 등 교육에 필요한 설비 및 교구를 갖추고 있을 것

3. 교육과정의 운영 기준

가. 교육계획: 전 문교육기관은 교수, 시설 및 장비 등을 고려한 연간 최대 교육인원을 반영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나. 교육과정: 전문교육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 과목 및 시간은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시간)	과목(시간)
선박교통관제사 기본교육 (300)	언어학(90), 교통관리학(30), 관제설비학(37), 항해학(20), 통신협조(10), 초단파무선통신(12), 인간학(10), 비상관제 및 실습(91)
선박교통관제사 보수교육 (60)	언어학(9), 교통관리학(18), 관제설비학(6), 초단파무선통신(6), 인간학(10), 비상관제(11)
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 (60)	인간학(14), 관제설비학(13), 항해학(6), 비상관제(13), 관제행정학(7), 관제법학(7)
현장직무교육 강사 교육 (30)	선박교통관제관서 교육프로그램 개발(3), 교육생 특별프로그램 준비(3), 현장직무교육의 진행(6), 교육생 평가(10), 교육의 이수(8)

비고

1. 과목별 교육시간은 100분의 35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교육과정별 관제업무 실습 시간은 전체 교육시간의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3. 교육과정별 과목은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유사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기관명	담당자		
	대표자 성명	이메일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지정 신청 교육과정	<input type="checkbox"/> 선박교통관제사 기본교육 <input type="checkbox"/> 선박교통관제사 보수교육 <input type="checkbox"/> 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 <input type="checkbox"/> 현장직무교육 강사 교육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신청자 (대표자) 제출서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 1. 해당 교육기관의 연혁·조직 및 운영계획 2. 교육시설 현황 3. 교육강사의 이름, 학력·경력 등 자격요건, 교육강사별 담당 과목 및 시간 4. 교육과목 및 교육·평가방법 5. 연간 교육계획 6. 해당 교육기관의 예산명세 7. 정관(법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등기부 등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첨부)	▶	접 수	서류심사	결 재	전문교육기관 지정서 발급
신청자		처 리 기 관 (해양경찰청장)	처 리 기 관 (해양경찰청장)	처 리 기 관 (해양경찰청장)	처 리 기 관 (해양경찰청장)

※ 서류심사 과정 중 자료 보완이 필요할 경우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210mmX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전문교육기관 지정서

1. 기관명: (전화번호:)

2. 대표자 성명:

3. 소재지:

4. 지정 교육과정: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청장

직인

II

선박교통관제법 해설서

35 법령 개요

39 조문별 해석 및 Q&A



II
선박교통관제법 해설서



1-1

제정배경 및 추진경과

1. 제정배경

- ▶ 선박교통관제는 선박을 탐지하고 통신장비를 운영하여 선박에 안전정보를 제공하여 선박교통의 안전과 효율성을 증진하는 중요한 제도임
- ▶ 본 법 제정 전 선박교통관제 관련 규정은 「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에서 최소 사항만을 규정하고 세부 운영규정은 해양수산부령과 행정규칙에 위임되어 있었음
- ▶ 또한, 법률 소관은 해양수산부, 집행은 해양경찰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책임과 집행기관을 일원화하고 법 체계를 간소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 이에 분산되어 있는 선박교통관제 관련 규정을 단일법으로 통합하고, 관제환경 변화에 대비·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2. 추진경과

- ▶ 법률 제정 추진계획 수립('18.9.18) 및 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18.10.19.)
- ▶ 법률 입법공청회 개최('18.10.31)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18.10.30~11.30.)
- ▶ 농해수위 전체회의 법안 상정('19.3.25), 심사소위(7.9) 및 전체회의 의결(7.15.)
- ▶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19.10.24) 및 국회 본회의 의결('19.10.31.)
- ▶ 국무회의 의결('19.11.27) 및 관보 게재·공포('19.12.3.)
- ▶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추진계획 수립('20.1.3.)
- ▶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사전규제심사('20.1.16.), 관계기관 의견조회(1.23.~2.7.), 입법예고(1.30.~3.10.), 각종 영향평가(2.10~3.17.)
- ▶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해양경찰위원회 심의('20.4.20.)
- ▶ 시행령 제정(안) 법제처 심사('20.5.14.)
- ▶ 시행령 제정(안)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20.5.21, 5.26.)
- ▶ 시행규칙 제정(안) 법제처 심사('20.5.28.)
- ▶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법제처 심사결과 해양경찰위원회 보고('20.6.1.)
- ▶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령 관보 게시('20.6.2, 6.3.)
-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시행('20.6.4.)
- ▶ 시행령 일부개정('20.7.28., 타법개정)
- ▶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21.12.14.)

1-2

체계 및
주요내용

1.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 ▶ 「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에 있던 선박교통관제 관련 조문을 통합하고, 「선박교통 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으로부터 상향 규정할 필요가 있는 조문을 법률로 정함
- ▶ 국제 교류·협력의 증진, 선박교통관제 기본·시행 계획의 수립,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운영, 선박교통관제시설의 설치·관리,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의 설립 지원 등의 조문을 신설함

제1조	▶ 목적	제15조	▶ 관제통신의 녹음
제2조	▶ 정의	제16조	▶ 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등
제3조	▶ 적용범위	제17조	▶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4조	▶ 국가의 책무	제18조	▶ 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제5조	▶ 선박소유자의 책무	제19조	▶ 관제업무 절차
제6조	▶ 국제 교류·협력의 증진	제20조	▶ 선박교통관제사의 권한
제7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1조	▶ 관제시설의 설치·관리
제8조	▶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	제22조	▶ 관제시설의 기술기준
제9조	▶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	제23조	▶ 기술의 개발·지원
제10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제출 등	제24조	▶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
제11조	▶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제25조	▶ 권한 등의 위임·위탁
제12조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26조	▶ 벌칙
제13조	▶ 관제대상선박	제27조	▶ 과태료
제14조	▶ 선장의 의무 등	부칙	▶ 시행일, 일반적 경과조치, 벌칙 등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법령의 개정, 다른 법령과의 관계

2.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15개 조문으로 구성
 - 선박운항자 교육·훈련 내용,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관제구역 설정기준, 선박 출입신고, 관제통신 세부내역을 규정(제2조~제9조)
 - 관제통신 녹음·보존, 관제사 교육, 관제기술 개발,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 설립·업무·감독에 관한 내용을 규정(제10조~제13조)
 - 권한의 위임·위탁,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제14조~제15조)

제1조	▶ 목적	제9조	▶ 관제통신의 제원
제2조	▶ 운항자에 대한 교육·훈련	제10조	▶ 관제통신 녹음
제3조	▶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	제11조	▶ 선박교통관제사의 교육 및 평가
제4조	▶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	제12조	▶ 기술개발의 추진 등
제5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제13조	▶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
제6조	▶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기준	제14조	▶ 권한 등의 위임·위탁
제7조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15조	▶ 과태료의 부과
제8조	▶ 관제대상선박의 신고	부 칙	▶ 시행일, 다른 법령의 개정

3.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10개 조문으로 구성
 -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설치 근거, 관제대상선박이 갖춰야 할 통신장비·주파수, 관제사 자격 조건을 규정(제2조~제5조)
 - 선박교통관제사 교육·평가,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심사절차, 관제사의 업무 내용과 관제절차를 규정(제6조~제9조)
 - 관제시설의 설치, 유지보수 및 기술기준을 규정(제10조)

제1조	▶ 목적	제7조	▶ 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제2조	▶ 운항자에 대한 교육·훈련	제8조	▶ 관제업무 절차
제3조	▶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설치 및 운영	제9조	▶ 관제시설의 설치·관리
제4조	▶ 관제대상선박의 무선설비 등	제10조	▶ 관제시설의 기술기준
제5조	▶ 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부 칙	▶ 시행일, 다른 법령의 폐지, 다른 법령의 개정
제6조	▶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제조 목적

이 법은 선박교통관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교통의 안전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 1974)」 제5장 제12규칙에 따르면, 선박교통관제(Vessel Traffic Services)의 목적을 “해상에서의 인명·항해의 안전 및 효율성 또한 해양환경, 해상설비 보호에 기여”라고 정하고 있다.
- ▶ SOLAS 협약국인 우리나라는 이러한 협약상의 목적을 수용하여 안전·효율·환경보호를 본 법의 목적으로 명시하였다.
- ▶ 또한, 본 법이 제정되기 전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들을 정하고 있던 「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상의 선박교통관제의 목적과도 일관성을 유지하여 법의 안정성을 도모하였다.

국내외 유사입법 사례

▶ SOLAS 제5장(항해의 안전) 제12규칙 선박교통관제(VTS)

1. 선박교통관제(VTS)는 해상에서의 인명의 안전, 항해의 안전과 효율성 또는 해상교통이 야기할 수 있는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해양환경, 인근 해안지역, 작업장 및 연안 해상설비의 보호에 기여한다.

▶ 「해사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 “선박교통관제”란 선박교통의 안전 및 효율성을 증진하고 해양환경과 해양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고 선박과 통신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선박의 동정을 관찰하며 선박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9.12.3. 삭제〉

▶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선박교통관제”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교통의 안전과 효율성 증진 및 환경 보호를 위하여 선박을 탐지하거나 선박과 통신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운영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19.12.3. 삭제〉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박교통관제”란 선박교통의 안전을 증진하고 해양환경과 해양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고 선박과 통신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선박의 동정을 관찰하며 선박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정보 및 항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항만운영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선박교통관제구역”이란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역을 말한다.
3. “선박교통관제사”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관련 하위법령〉

▶ 「선박교통관제법 시행규칙」 제5조(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5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면허 취득 후 승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 또는 정보통신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교에서 개설한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면허를 취득한 사람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선박교통관제구역은 선박교통관제가 시행되는 공간적 적용범위를 의미하며, 관제시설 신설 등으로 관제구역이 변경될 경우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해사안전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다.
- ▶ 또한, 선박교통관제사는 해양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전문성 확보를 위해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의미를 정의하였다.

유사입법 사례

▶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5. “선박교통관제사”란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9.12.3 삭제〉

▶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제19조(선박교통관제의 시행) ② 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는 수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9.12.3 삭제〉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영해 및 내수(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수·늪 등은 제외한다)에 있는 선박 중에서 제13조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 ▶ SOLAS 제5장 제12규칙에 따르면 “선박교통관제는 연안국의 영해 내 해역에서 강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 이는 국제적으로 시행하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연안국의 권한을 당국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로 한정하기 위함이다.
- ▶ 본 법에 관련 내용을 국제협약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의 적용범위를 영해와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내수(영해의 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로 정하였다.
- ▶ 한편,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A.1158(32) GUIDELINES FOR VESSEL TRAFFIC SERVICES 개정을 통해 “선박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영해 밖 해역에서의 연안국이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 법에서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을 검토 중이다.

영해 밖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 동향

▶ IMO 결의서 A.1158 (32) GUIDELINES FOR VESSEL TRAFFIC SERVICES

- IMO 제7차 항해통신수색구조 전문위원회(NCSR) 의결('20.1.24.)
- IMO 제102차 해상안전위원회(MSC) 의결('20.11.11.)
- IMO 제32차 총회 최종 승인('21.12.15)

✓ (개정 조문) 4.5 VTS may also be established beyond the territorial seas of a coastal state to provide information and advice on the basis of voluntary participation.

VTS는 또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여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연안국의 영해 밖 해역에서 시행될 수 있다.

제4조

국가의 책무

국가는 선박교통의 안전 및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교통 관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 국가나 지자체 등의 책무 등에 관한 규정은 주로 그 법령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그 법령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를 거두고, 국가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법령 집행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 ‘직무’는 구체적 업무범위를, 책무는 선언적·포괄적 업무 방향성을 나타냄

- ▶ 본 조는 선박교통관제를 ‘국가’가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가정책에 의해 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으며, SOLAS 제5장 제12규칙에 따른 협약 당사국의 선박교통관제 시행 의무와 부합하도록 하였다.

관련 국제협약

▶ SOLAS 제5장(항해의 안전) 제12규칙 선박교통관제(VTS)

2. Contracting Governments undertake to arrange for the establishment of VTS where, in their opinion, the volume of traffic or the degree of risk justifies such services.

당사국 정부는 해상교통량 또는 위험도가 선박교통관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해역에 선박교통관제 시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

선박소유자의 책무

- ① 선박소유자는 국가의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 자기가 소유·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도록 운항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제반 안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선박교통관제의 목적·용어, 통신절차 및 정보교환 방법
 2. 선박교통관제의 관련 규정 및 제반 준수사항
 3. 국내 선박교통관제 운영 현황
 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운항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방법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하위법령〉

▶ 「선박교통관제법 시행령」 제2조(운항자에 대한 교육·훈련) 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선박소유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해당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공사·작업·조사 등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로 한정한다)
2. 「선박직원법」 제2조제4호의3에 따른 지정교육기관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3.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운항자 교육·훈련의 내용(제2조제1항 관련)

구분	주요 내용
1. 선박교통관제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선박교통관제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가.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나. 국제항로표지협회 선박교통관제 매뉴얼 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2. 통신절차 및 정보 교환 방법	가. 선박교통관제관서별 신고 절차 나. 일반통신, 긴급통신, 조난통신 및 안전통신의 절차 및 정보 교환 방법 다. 해양사고 발생 시 보고 및 대응 절차
3. 선박교통관제 관련 규정 및 제반 준수사항	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나. 관제대상선박의 범위 다.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의 의무 라. 관제통신의 녹음 마. 관제업무 절차 바. 선박교통관제사의 권한
4. 국내 선박교통관제 운영 현황	가. 선박교통관제관서별 관제구역 나. 선박교통관제관서별 통신주파수

▶ 「선박교통관제법 시행규칙」 제2조(운항자에 대한 교육·훈련)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항로에 관한 사항
2. 「해사안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안에서의 항로지정제도에 관한 사항
3. 「해사안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 ▶ 우리나라는 2022년 현재 15개 주요 항만 및 5개 연안, 총 20개 수역에서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개 수역별로 관제신고 절차와 「해사안전법」등에서 정하는 항법, 제한속력 등이 상이하여 운항자들은 관련 규정들을 숙지할 필요성이 있다.
- ▶ 본 조항은 사용자인 선박소유자에게 운항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별도의 처벌조항은 두고 있지 않다.
- ▶ 본 조 및 하위법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선박소유자의 교육·훈련에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교육·훈련의 시기, 횟수 등은 정하지 않고 교육해야 할 내용, 위탁교육기관 등 법에서 정하거나 위임한 최소한의 내용만 명시하고 있다.

유사입법 사례

▶ 「해사안전법」 제5조(선박·해양시설 소유자의 책무) 선박·해양시설 소유자는 국가의 해사안전에 관한 정책에 협력하여 자기가 소유·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선박·해양시설로부터 해양사고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제반 안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Q & A

Q. 운항자에 대한 교육·훈련 미이행 시 불이익(벌칙조항 등)이 있는지?

A. 선박소유자의 책임인 운항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의무는 선주가 고용한 선원들에 대하여 관제 규정을 충분히 숙지시키기 위한 규정이며, 위반 시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음**

* 「해사안전법」(제5조), 「해적피해예방법」(제3조)도 “소유자의 종사자 교육의무”를 정하고 있으나 처벌조항은 없음

Q. 선박운항자 교육·훈련은 평생 1회만 받아도 되는건지, 선사를 옮기면 새로 받아야 되는 건지?

A. 「선박교통관제법」 제5조에 따른 관제규정 등 교육·훈련은 운항자가 아닌 ‘**선박소유자**’의 책임임. 운항자의 교육·훈련 횟수, 이직 등 상관없이, 선박소유자는 자신이 고용한 운항자가 관제절차, 항법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함

Q. 선박소유자가 운항자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경우 교육기록과 같은 증빙자료를 유지해야 하는지?

A. 교육기록은 **의무사항은 아님**. 다만, 향후 선박소유자의 의무 이행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경우, 기록자료가 **증빙용으로 활용**될 수 있음

Q. 「선박교통관제법」에서 정하는 내용을 교육할 교재가 없는데, 관련 자료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A. 본청에서 제작한 “선박운항자 교육 교재”를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홈페이지 우측 상단 검색창에서 “운항자 교육”으로 검색

Q. 선박소유자는 운항자에 대한 교육을 선박교통관제관서,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같은 「선박직원법」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에서 시행해야 하는지?

A. 운항자 교육은 **자체시행 가능**하며, 관제센터, 해경교육원, 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할 수 있음. 단, 「선박교통관제법 시행령」 제2항제1호에 의거, **관제센터에서의 교육은 관제구역내 공사·작업·조사 선박 운항자에 한함**

제6조

국제 교류·협력의 증진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단체 등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정보교환 및 공동 조사·연구 등 국제 교류·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선박교통관제는 SOLAS에 따라 시행되는 국제적 제도이며, 협약에 따른 국제기준을 국내법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지속적으로 국제동향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국제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
- ▶ 본 조는 선박교통관제 주무부처인 해양경찰청이 국제 교류·협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서 일관성 있는 대외정책 수행을 위해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 다른 기관의 의견을 들어 조치하도록 하였다.
 - * 해양경찰청은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국제회의 및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는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위한 실무회의에 정례적 참석·대응 중
 - ** 선박교통관제 관련 타 부처와 협조가 필요한 분야
 - 외교부: 국제회의 참석시 훈령안 승인, 결과보고 등 협조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적으로 채택된 관제시설·장비 도입 시, 협조 필요

유사입법 사례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3(국제협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선박교통관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 선박교통관제에 관하여 본 법 이외에 다른 법률이 있는 경우 본 법과 그 법률 간 관계를 규정한 것이다.
 - 본 법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 ▶ 다만, 다른 법률에서 본 법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다른 법률의 목적, 취지,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본 법의 적용을 배제할 의도가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또는, 본 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본 법과 다른 법률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거나 불합리한 상황 또는 왜곡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특별법·신법 우선원칙 판례(대법원 '16.11.25. 선고 2014도14166 판결)

- ✓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고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 ✓ 이때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지는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별한 규정' 판단 기준(보호위원회 결정 제2018-02-006호)

- ✓ 판례 등의 의견을 종합하면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의 **'특별한 규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① **상호 모순·저촉되는 규정의 존재 여부** ② **보호법 관련 조항을 배제하고자 하는 내용의 포함 여부**라고 판단됨

- ▶ 또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법률의 규정이 본 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고시, 조례 등에 본 법과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다고 하여도 그 시행령 등은 우선 적용되지 않고 당연히 본 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유사입법 사례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선박 입항·출항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8조~제10조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국회제출 등

제8조(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 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해사안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어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교통관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선박교통관제 운영에 관한 사항
3. 선박교통관제를 위한 시설의 구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선박교통관제사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선박교통관제 관련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6. 선박교통관제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 ①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행계획에 포함할 내용과 수립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제출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관련 하위법령〉

▶ 「선박교통관제법 시행령」

제3조(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해 필요하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할구역에서의 해상교통량, 선박 이동경로, 해양사고 현황
 2. 관할구역에서의 레이더, 초단파 무선전화,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무선설비의 설치·운영 현황 및 계획
 3. 관할구역에서 선박이 접안(接岸)하거나 계류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현황 및 계획
 4. 관할구역에서의 선박교통관제 시행의 필요성
 5.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경찰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정·보완 필요성을 검토한 사항
 3.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1항”은 “법 제9조제1항”으로, “기본계획”은 “시행계획”으로, “같은 조 제5항”은 “같은 조 제2항”으로 본다.
- ③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 ▶ “기본계획”이란 국가 정책의 중장기 계획을 의미하며, 건설·교통·환경·해양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에서 주무부처의 장이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 국가의 책무인 “선박교통관제” 역시 5년 단위 중장기 정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이러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 ▶ “기본계획”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자료조사, 협의를 거쳐 수립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 특히, 국가 해사안전을 총괄하는 「해사안전법」 제6조에 따른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과 부합하여 일관성 있는 국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에 대한 연차별 세부계획으로서 매년 이행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 기본계획에 대한 수정·보완의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대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또한,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된 기본계획 등은 국회 상임위에 제출, 관보에 게시하도록 하고,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력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도 통보하도록 하였다.
- * '20.12.31. 제1차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2021~2025) 수립
- ** '21.2.26. 2021년도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 수립, '22.1.19. 2022년도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 수립

제1차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2021~2025년) 주요내용 〈5대 분야 20개 실천과제〉	
1. 통합관제	1-1. 관제해역 확대를 위한 연안 VTS 확충 1-2. 효율적 관제를 위한 항만 및 연안 VTS 통합 1-3. 관제시스템 이중화로 음영구역 최소화 1-4. 클라우드 활용 관제정보 통합 및 공유 활성화
2. 관제고도화	2-1. 빅데이터·AI 활용 관제사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 2-2. 레이더 탐지능력 확대를 위한 첨단기술 도입 2-3. 관제업무 간소화를 위한 자동화 기술 개발 2-4. VTS 연구개발 강화 및 산업 활성화
3. 역량강화	3-1. 관제사 「교육훈련센터」 구축 3-2.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3-3. 관제사 현장실무 및 정책역량 강화 3-4. 전문인력 양성·채용을 위한 교육기관 협업
4. 제도개선 및 협력강화	4-1. 법령·제도·운영지침 등 개정 4-2. 대국민 소통 및 홍보 강화 4-3. 글로벌 위상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4-4. 관제협회 설립을 통한 민·관 협력체계 마련
5. 선진조직	5-1. 미래 지향적 조직명칭 변경 5-2. 선박교통관제 조직확대 개편 5-3. 관제 및 시설관리 인력 확대 5-4. 전문 관제인력 관리운영제도 시행

유사입법 사례

- ▶ 「**해사안전법**」 제6조(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증진을 위한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 「**건설기술 진흥법**」 제3조(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 「**항공안전법**」 제6조(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항공 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1조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 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한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해양경찰청장은 효율적인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하여 선박교통관제관서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이하 “선박교통관제관서”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하위법령〉

▶ 「선박교통관제법 시행령」 제6조(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기준)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역 중에서 유효한 레이더 탐지범위 내의 해상교통량 및 이동경로 등을 고려하여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등
2. 「해사안전법」 제10조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3.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

▶ 「선박교통관제법 시행규칙」 제3조(선박교통관제관서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이하 “선박교통관제관서”라 한다)는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에 따른 해상교통관제센터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 본 조는 선박교통관제 주무부처가 해양경찰청임을 명시하고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설정하는 기준 및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는 관서인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정하고 있다.
- ▶ 제3조에 따라 본 법은 우리나라 영해 및 내수에 적용되지만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고 선박과 통신할 수 있는 설비”의 기능적 한계로 모든 영해 및 내수에서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 ▶ 따라서, 본 조 제2항 및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제2조제1호에 따른 설비의 기능적 범위 내에서 선박교통관제가 시행되는 구역을 정하되, ①무역항의 수상구역·교통안전특정해역·연안해역 중에서, ②레이더 탐지범위 내의, ③해상교통량 및 이동경로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교통안전특정해역·연안해역
 - “무역항의 수상구역”과 “교통안전특정해역”은 해상교통량이 집중되는 해역으로써 해양사고 위험이 높아 선박교통관제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하였다.
 - * 舊선박입출항법, 舊해사안전법에서 무역항 등을 관제구역에 포함하도록 명시

- “연안해역”은 이미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인·태안·진도·여수·통영연안과 제1차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관제시설이 신규 설치되는 군산·목포·제주·동해권 연안해역에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설정하기 위해 포함되었다.

② 레이더 탐지범위

- 제21조에 따른 관제시설 중 레이더는 선박을 탐지하는 가장 중요한 시설이다. 따라서 레이더로 탐지가 어려운 해역은 선박교통관제사가 선박을 관찰할 수 없으므로 레이더 탐지범위는 관제구역 설정기준에 필수적 요소이다.

③ 해상교통량 및 이동경로 등

- 해상교통량이 밀집되고 선박 간 이동경로가 교차되는 해역일수록 선박충돌 등 해양사고 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관제구역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유사입법 사례

- ▶ 「해사안전법」 제36조(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하여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19.12.3. 삭제>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선박교통관제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경찰청장과 공동으로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을 포함하는 수역에서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할 수 있다. <‘19.12.3. 삭제>
- ② 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는 수역(이하 “선박교통관제구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9.12.3. 삭제>

제12조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 ① 해양경찰청장은 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제13조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이 따라야 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 ② 해양경찰청장이 제1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는 경우 선박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관련 하위법령〉

▶ 「선박교통관제법 시행령」 제7조(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이하 “선박교통관제관서”라 한다)의 사용명칭
2. 법 제13조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이하 “관제대상선박”이라 한다)이 선박교통관제구역 안에서 이동하거나 해당 선박에 도선사가 승선·하선하는 때의 관제통신 방법
3. 기상(weather)이 악화되거나 시계(視界)가 제한된 경우의 선박운항통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 관제구역 확대, 신고절차 변경 등 관제업무 환경 변화,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제통신, 운항통제 등에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 규정으로 고시하도록 하였다.
- ▶ 또한, 선박교통과 관련된 다른 법령, 해상 공사·작업 등 선박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본 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른 부처의 의견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해양경찰청고시 제2021-8호)에는 관서별 선박교통관제구역·관제대상선박·사용명칭·출입신고 사항, 선박운항통제, 관제통신의 제원·녹음 보존기간 등을 정하고 있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주요내용】

조문	주요 내용
제2조(적용범위)	▶ 선박교통관제관서 및 관제대상선박
제4조(관제구역)	▶ 선박교통관제관서별 관제구역을 별표로 명시
제5조(관제대상선박)	▶ 선박교통관제관서별 관제대상선박을 별표로 명시
제6조(사용명칭)	▶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사용명칭을 해양경찰청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함(○○ 해상교통관제센터)
제7조(진입·진출 신고 등)	▶ 선박교통관제구역별 ① 관제대상선박의 이동 및 도선사 승선·하선시 관제통신 절차, ② 관제대상선박의 진입·진출하려는 경우 신고 절차, ③ 관제통신 또는 신고시 초단파 무선전화 이용, ④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이용한 신고방법
제8조(선박운항 통제)	▶ 기상특보(풍랑·폭풍해일·태풍), 시계제한(500미터 이내) 등에 따른 출항통제 시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선박운항통제에 따르도록 함
제9조(선장의 준수사항)	▶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제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지정된 항로·항법 및 제한속력) 명시
제10조(관제통신 제원)	▶ 선박교통관제관서별 관제통신 제원(호출부호, 통신시설, 채널, 운용시간)을 별표로 명시
제11조(관제통신 녹음 보존기간)	▶ 시행령 제10조제4항에서 위임한 관제통신 녹음자료 보존기간을 60일로 정하고, 해양사고 조사·심판 기관(해경서, 해심 등)에서 요청시 조사·심판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기간 연장

유사입법 사례

- ▶ 「해사안전법」 제31조(항로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의 지형·조류, 그 밖에 자연적 조건 또는 선박 교통량 등으로 해양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그 수역의 범위, 선박의 항로 및 속력 등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할 수 있다.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제10조(항로 지정 및 준수) ① 관리청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역항과 무역항의 수상구역 밖의 수로를 항로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Q & A

Q. 선박운항통제 중에 선박이 고장, 조종불능, 인명구조 등 특별한 상황 발생 시에는 적용 관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A. 「선박교통관제법」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음

특별한 규정의 예로 「해사안전법」 제38조(선박 출항통제)*, 「수상구조법」 제18조(인근 선박 등의 구조지원)** 등을 들 수 있음

* 내항여객선 외 선박은 출항통제권자가 선박의 안전한항 확보 등 필요한 경우 통제 완화 또는 미적용 가능

** 조난현장의 부근에 있는 선박의 선장은 관할 구조본부의 장의 구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지시에 따라야 함

선박운항통제는 「선박교통관제법」 제12조에 따라 고시로 위임되었으며,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고시) 제3조(다른 법령·규칙과의 관계)에서 타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선박에 대한 운항 통제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음

* '특별한 상황 발생 시 선박운항통제 적용 제외'를 고시에 반영 검토 중

Q. 법 제12조에 따라 고시된 선박교통관제운영에 따른 선박운항통제에 관제대상선박이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

A. 「선박교통관제법」 제12조에서는 관제대상선박이 따라야 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고시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선박운항통제 역시 선장이 따라야 할 의무이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아니할 경우 제26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Q. 「해사안전법」 제38조(선박 출항통제)에 근거한 해당선박에 대해 출항통제를 선박교통관제관서에서 대행할 수 있는지?

A. 「해사안전법」 제38조에 따른 기상특보시 선박출항통제권자는 지방해수청장 또는 해경서장이며 동 법에서 통제권을 선박교통관제관서가 소속된 지방해경청장에게 위임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선박교통관제관서가 통제를 '대행'한다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음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호에 따른 선박운항통제는 「선박교통관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관제업무 관련 법규(ex. 「해사안전법」 제38조) 위반 선박 감시 적발 업무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8조(선박운항통제)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선박운항통제(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야 한다.
 - 2. 「해사안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출항이 통제된 경우
- ✓ 「선박교통관제법」 시행규칙 제7조(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법 제18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1. 관제업무 관련 법규 위반의 감시·적발 및 관계기관의 위법 선박 감시·적발 지원

제13조 관제대상선박

선박교통관제를 실시하는 대상 선박(이하 “관제대상선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2.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중 국내항사만을 항행하는 내항어선은 제외한다)
3. 「해사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4. 그 밖에 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이동하는 선박의 특성 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선박

▶ 舊 해양수산부령「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상의 선박교통관제 적용대상 선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였다.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 SOLAS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는 선박교통관제 특성상 국제항해선박을 관제대상에 포함
2.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내항어선 제외)
 - SOLAS 제4장(무선통신) 적용대상인 총톤수 300톤 이상 선박을 일반적인 관제대상선박으로 규정, 내항어선은 조업특성 상 관제통신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제외
3. 「해사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 대형 해양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화물운반선을 관제대상선박에 포함
4.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선박
 - 예인선, 여객선, 유선 등 관제구역 별로 다르게 정해야 할 관제대상선박은 고시로 위임

유사규칙 사례

▶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대상 선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3항 및 「해사안전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 적용대상 선박은 법 제19조제2항 및 「해사안전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는 구역(이하 “선박교통관제구역”이라 한다)에 출입하거나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이동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2. 총톤수 300톤 이상인 선박(내항 어선은 제외한다)
3. 「해사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4. 그 밖에 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이동하는 선박의 특성 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20.6.3. 폐지>

Q & A

Q. 중국어선(활어운반선 등) 및 소형레저요트 등이 국제항해 취항선박으로 등록된 경우 관제대상선박인지?

A.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에 따르면, ‘국제항해’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항구에 이르는 항해를 의미하며, 중국어선 등이 국제항해 취항선박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관제대상선박으로 적용하여야 함

Q. 「선박법」, 「선박안전법」 상에는 군함은 법령 적용에서 제외하는데, 군함을 관제대상선박으로 포함해야 하는지?

A. 「선박법」 제1조의2(정의)에 따라 군함도 선박에 포함되며, 선박톤수 측정, 등기·등록 등 일부 규정만 적용 제외됨

「선박교통관제법」 제13조(관제대상선박)에서 군함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동 조 각호에 해당되는 군함은 관제대상선박에 포함됨

* 군용차량이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적용

** 전시 외 평시에 군함이 관제대상선박에 제외된다는 규정은 타 법에도 없음

Q. 부선만 단독으로 정박하고 있을 경우 관제통신 청취·응답이 어려운데, 관제대상선박에 포함해야 하는지?

A. 「선박교통관제법」 제13조제2호에 따라 총톤수 300톤 이상 등의 부선은 관제대상선박에 포함됨

다만, 「선박교통관제법」 제14조(선장의 의무 등)에 따라 관제에 따라야 할 주체는 ‘선장’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선원법」 제3조(적용범위) 및 제10조(재선의무)에 따라 부선에는 선장의 재선의무가 없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72조(무선설비의 설치)에 따라 부선과 같이 추진기관 미설치 선박은 무선설비 설치 의무가 없어 본 법의 적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향후 선장의 재선 의무가 없는 부선과 같은 선박은 관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 개정 검토 중

제14조

선장의 의무 등

- ①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선박교통관제에 따라 경우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관제에도 불구하고 그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한다.
- ③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출입하려는 때에는 해당 선박교통관제구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출입·이동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와 관제통신 주파수를 갖추고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응답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의 장애로 인하여 선박교통관제사와 지정된 주파수로 통화가 불가능할 때에는 휴대전화 등 다른 통신주파수를 이용하여 보고할 수 있다.
- ⑤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항행 중인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항로상의 장애물이나 해양사고 발생 등으로 선박교통의 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대상선박의 신고 절차, 관제구역별 관제통신의 제원(諸元)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하위법령〉

▶ 「선박교통관제법 시행령」

제8조(관제대상선박의 신고) ①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1. 진입 신고: 선박교통관제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가. 선박명, 호출부호, 통과위치

나. 선박교통관제구역 안에 있는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에 따른 정박지(이하 “정박지”라 한다) 또는 같은 목 4)에 따른 계류시설(이하 “계류시설”이라 한다)에 입항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입항 예정 시각, 입항 시각 및 입항 장소

다.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사항

2. 진출 신고: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나가는 경우

가. 선박명, 통과위치

나. 선박교통관제구역 안에 있는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출항 예정 시각, 출항 시각 및 출항 장소

다.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선박교통관제구역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관제통신의 제원)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박교통관제관서별 관제통신 제원(諸元)을 고시해야 한다.

1. 호출부호
2. 관제통신시설
3. 조난·긴급·안전 통신용 채널
4. 관제통신용 채널
5. 운용시간

▶ 「선박교통관제법 시행규칙」 제4조(관제대상선박의 무선설비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이하 “관제대상선박”이라 한다)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갖춰야 하는 무선설비는 초단파 무선전화를 말하며, 같은 항에 따라 갖춰야 하는 관제통신 주파수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는 「전파법」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시행규칙 [별표 1] 관제통신 주파수(제4조제1항 관련)

	채널번호(CH)	통신주파수(MHz)	통신방식
1	06	156.300	단신
2	08	156.400	단신
3	09	156.450	단신
4	10	156.500	단신
5	11	156.550	단신
6	12	156.600	단신
7	13	156.650	단신
8	14	156.700	단신
9	15	156.750	단신
10	16	156.800	단신
11	17	156.850	단신
12	20	(수신)157.000 (송신)161.600	복신
13	22	(수신)157.100 (송신)161.700	복신
14	67	156.375	단신
15	68	156.425	단신
16	69	156.475	단신
17	70	156.525	단신
18	71	156.575	단신
19	72	156.625	단신
20	73	156.675	단신
21	74	156.725	단신
22	75	156.775	단신
23	76	156.825	단신
24	77	156.875	단신
25	78	157.375	단신
26	79	157.425	단신

비고

1. 채널번호 15번 및 17번은 해양방제업무용으로 사용한다.
2. 채널번호 70번은 조난·안전 및 호출을 위한 디지털선택호출용으로 사용한다.

- ▶ 국제해사기구(IMO) 결의서 A.1158(32) GUIDELINES FOR VESSEL TRAFFIC SERVICES 및 「선원법」 등 다른 국내법에서 공통적으로 정한 바와 같이 선박안전에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이 있는 선장에게 선박교통관제에 따라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였다.

선장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국내의 규정

▶ IMO Res A.1158(32) GUIDELINES FOR VESSEL TRAFFIC SERVICES 7.1

Nothing in these Guidelines changes the ultimate responsibility of the master for all aspects of the operation of the ship including the responsibility for safe navigation.

이 지침의 어떤 내용도 선박 운항의 모든 측면에 대한 선장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 ▶ 「선원법」 제2장(제6조~제21조)에서 선장의 지휘명령권, 출항전 검사·보고, 직접 지휘, 항해안전 확보 등 선박안전에 관한 선장의 책임과 권한을 명시

- ▶ 「해사안전법」 제45조·「선박안전법」 제31조(선장의 권한) 누구든지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또한, 선박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선장이 선박안전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 이는 레이더, 초단파무선전화 등 관제시설로 선박위치를 파악하는 선박교통관제사보다 선교에 있는 선장이 선박교통환경을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며,
 - 「선원법」 등 선장의 책임과 권한을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과 본 법이 상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 ▶ 본 조에서는 관제구역 출입신고, 관제통신 청취·응답, 사고위험 신고에 관한 선장의 의무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1. 출입신고

- ▶ 출입신고는 관제구역에 진입하여 관제통신망에 참가하겠다는 선장의 의도를 해상교통 관제센터와 관제구역 내 운항선박에 알리는 조치로써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신고제도 중 하나이다.
- ▶ 이러한 신고는 관제대상선박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초단파무선전화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최근 해양 IT 기술의 발달로 신고내용을 간소화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대체하는 추세이다.
- ▶ 이에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해양경찰청고시 제2021-8호) 제7조제5항에서는 선장이 해상교통관제센터와 사전에 협의한 후 신고사항을 선박자동식별장치에 입력하고, 이를 선박교통관제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본 조에 따른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2. 관제통신 청취·응답

- ▶ 제18조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사가 선박에 대한 안전정보의 제공 등 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선박과의 통신”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선장에게 관제통신의 청취·응답의 의무를 부여하였다.
- ▶ 또한, 초단파무선전화로 이뤄지는 관제통신의 특성상, 혼선·장비고장·전송버튼 고착 등으로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휴대전화 등 다른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관제통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위험상황의 신고

- ▶ 항로상 장애물, 해양사고 등 해상에서의 위험상황은 선박교통관제사가 레이더 등 관제시설만으로는 식별하기가 어려우며,
- ▶ 해양사고를 당한 선장은 초단파무선전화 등의 고장, 인명구조 등으로 그러한 상황을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신속히 신고하지 못할 수 있다.
- ▶ 또한, 항로상 장애물을 방치할 경우 다른 선박과의 충돌 등으로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
- ▶ 해상에서의 위험상황을 발견한 선장은 즉시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신고하도록 정하였다.

4. 관제대상선박의 신고 절차 등

- ▶ 선박이 관제구역 출입시 신고해야 할 내용·시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시행령 제8조, 호출부호·관제통신시설 등 관제통신 제원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였다.
- ▶ 또한, 시행령 제8조, 제9조에 따라 관제구역 별 출입신고, 해상교통관제센터별 관제통신 제원은 선박교통환경, 관제통신 기술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해양경찰청고시 제2021-8호)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유사입법 사례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제22조(선박교통관제 통신) 제20조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 적용대상 선박이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운항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갖추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호출응답용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응답하여야 한다. <‘19.12.3. 삭제>
- ▶ 「해사안전법」 제43조(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의 조치) ①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해양사고가 일어나 선박이 위험하게 되거나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양사고의 발생 사실과 조치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서장이나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선원법」 제14조(기상 이상 등의 통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장은 폭풍우 등 기상 이상이 있거나 떠돌아다니는 얼음덩이, 떠다니거나 가라앉은 물건 등 선박의 항해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것과 마주쳤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가까이 있는 선박의 선장과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폭풍우 등 기상 이상의 경우 기상기관 또는 해양경찰관서(대한민국 영해 밖에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의 해상보안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예보(豫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 A

Q.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은 관제사의 업무 및 권한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적용하는 것인지?

A. 「선박교통관제법」 제14조에 따른 ‘선장이 따라야 할 선박교통관제’란 제18조(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및 제20조(선박교통관제사의 권한)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는 의미

Q. 도선사가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지?

A. 「선박교통관제법」 제14조에 따라 관제에 따라야 할 주체는 선장으로 되어 있으며 도선사가 관제에 따라야 할 의무 및 위반에 따른 처벌조항은 없음

또한, 「도선법」 제18조에 따라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하더라도 선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못하며,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책임은 선장에게 있음

*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법률(시행령·시행규칙)로 규정되어야 함

Q. 관제대상선박은 관제구역 출입·이동 시 관제통신을 청취·응답해야 하는데, 정박선은 청취·응답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A. 관제대상선박이 정박하는 경우 관제구역 내에서 출입·이동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관제통신 청취·응답의 의무가 있음

* 정박선은 좌주, 충돌 등 사고 위험성이 있어 지속적인 관제통신 체계 유지 필요

Q. 선장이 아닌 당직항해사가 제14조(선장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대상은 선장인지 당직항해사인지?

A. 「선원법」 제6조에 따라 선장은 해원(당직항해사)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며, 「선박교통관제법」 제14조에서 선장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은 선장임

Q.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 진·출입하려는 때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관제구역 내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이동하는 여객선의 경우 매번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지?

A. 「선박교통관제법」 제14조 및 다른 조항에서 정기 또는 부정기 여객선의 진·출입 신고를 면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매번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함

Q. 본선이 해양사고 발생 시 사고대응을 위해 불가피하게 관제센터에 신고를 늦게 하거나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

A.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해양사고 대응을 위해 불가피한 신고 의무 위반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행위로 볼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사고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였는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제15조

관제통신의 녹음

- ① 선박교통관제관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른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통신 녹음방법 및 보존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하위법령〉

▶ 「선박교통관제법 시행령」 제10조(관제통신 녹음)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관제대상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다음 각 목의 선박
 - 가. 13명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
 - 나. 가목 외의 선박으로서 총톤수 3천톤 이상의 선박
2. 「해운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여객선
- ② 선박교통관제관서와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의 선장(이하 “선박교통관제관서등”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관제통신을 한 날짜 및 시각과 함께 보존해야 한다.
- ③ 선박교통관제관서등은 제2항에 따라 관제통신을 녹음하려는 경우 전자적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관제통신 녹음시설의 일시적인 고장 등으로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관제통신 녹음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기(手記)로 대체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의 보존기간은 60일로 한다. 다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교통관제관서의 관제통신 녹음 및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 관제통신은 운항자 의도, 선박교통관제사가 제공한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해양사고 조사, 선박교통분석 등을 위한 중요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해상교통관제센터와 선박설비기준(해양수산부고시제2021-114호)제108조의7에 따른 항해자료기록장치를 설치한 선박에서 녹음·보존하도록 하였다.
- ▶ 舊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20.6.3. 폐지)에서는 관제통신 보존 의무를 국내 선박에만 한정하고 있었는데,
 - 관제대상선박 중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외국 선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 SOLAS에 따라 외국 선박도 관제통신을 녹음·보존할 수 있는 항해자료기록장치(VDR)를 이미 설치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본 법에서는 외국 선박도 관제통신을 보존하도록 하였다.

- ▶ 관제통신은 녹음시설 등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보존하도록 하였으며, 시설 고장 등으로 녹음이 불가할 경우 지속적인 기록 유지를 위해 수기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또한, 명확한 해양사고 조사 등을 위해 관제통신을 시행한 일시를 함께 보존하도록 하였으며, 보존기간은 해상교통관제센터 및 해당 선박에 설치된 녹음장치의 저장용량을 고려하여 60일로 정하였다.
- 다만,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 등 관련 기관(해양안전심판원, 해양경찰서 등)이 해상교통관제센터 및 해당 선박에 녹음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해당 조사 및 심판 등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였다.

유사입법 사례

- ▶ 「해사안전법」 제36조(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 ⑥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한 기관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제5항에 따른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9.12.3. 삭제>
- ▶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관제통신 녹음 등) ① 「해사안전법」 제36조제6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제대상선박 중 대한민국 선박[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 중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2.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천톤 이상의 선박
 3. 「해운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선박 중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여객선
- ②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는 기관과 제1항에 따른 선박(이하 이 조에서 “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제통신을 녹음하여야 한다.
 1. 초단파 무선전화를 사용하는 관제통신
 2. 선교(船橋)에서 발생하는 관제통신 <‘20.6.3. 폐지>

Q & A

Q. 항해자료기록장치(VDR)는 SOLAS 규정상 30일까지만 VHF 등 정보를 저장하도록 되어 있어, 외장하드 등 보조기록장치에 60일간 관제통신을 저장한다면, 이를 시행령 제10조(관제통신 녹음)를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

A. 「선박교통관제법」에서는 녹음장치의 규격 등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동 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관제통신을 저장할 수 있다면 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음

*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저장매체가 생길 수 있음을 고려, 저장장치의 규격은 정하지 않음

Q. 운항자(선장 등)가 「선박교통관제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선박교통관제관서에서 녹음된 교신내용과 항적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지?

A. 교신내용에 관제사와 청구인 음성 외에 제3자 음성이 포함되어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제3자 의견수렴 후 공개 또는 부분공개 가능

항적은 선박위치발신장치로부터 수집한 선박위치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사안전법」 제37조(선박위치정보의 공개 제한 등)에 따라 원칙상 비공개

* 단, 「해사안전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 조사 등의 목적으로는 공개 가능

✓ 「개인정보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해사안전법」 제37조(선박위치정보의 공개 제한 등) ① 항해자료기록장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으로 선박의 항적(航跡) 등을 기록한 정보(이하 “선박위치정보”라 한다)를 보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박위치정보의 보유권자가 그 보유 목적에 따라 사용하려는 경우

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조사관 등이 해양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 급박한 위험에 처한 선박 또는 승선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의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항만시설의 보안, 여객선의 안전운항 관리, 「통합방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의 수행 또는 관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의3. 선박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4.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난 선박위치정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Q. 관제통신 녹음을 수기로 대체할 경우 작성양식, 보관방법은?

A. 관제통신을 수기로 작성할 경우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관제통신을 실시한 날짜·시간 등은 함께 기록되어야 함

Q. 관제통신 녹음 시 관제센터와의 통신만 녹음하면 되는지, 선박이 관제구역 진입부터 진출까지 다른 선박의 통신을 포함한 모든 통신사항을 녹음하여야 하는지?

A. 「선박교통관제법」 제14조제4항에서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관제통신 주파수를 갖고 추고 항상 청취·응답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5조제1항은 관제통신 주파수에서 운항자, 선박교통관제사가 통신하는 내용을 보존하여 사고 조사·심판시 현장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이므로,

관제대상선박이 운항하는 관제구역에서 사용하는 관제주파수 내 모든 통신사항을 녹음해야 함

제16조

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등

- ① 관제업무는 선박교통관제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선박교통관제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시행하는 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한다.
- ③ 선박교통관제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기적인 교육 및 평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교육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하위법령〉

▶ 「선박교통관제법 시행령」 제11조(선박교통관제사의 교육 및 평가) ① 선박교통관제사가 되려는 공무원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론 및 실습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선박교통관제사 기본교육(이하 “기본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② 선박교통관제사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중 가장 최근에 이수한 교육의 이수일부터 5년 6개월 이내에 이론 및 실습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선박교통관제사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다만,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기본교육
2. 보수교육
3.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교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는 이론 및 실습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교육참여도를 그 대상으로 하고,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론 및 실습 내용에 대한 평가 점수와 교육참여도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40점 미만의 평가항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하며, 불합격 처리된 사람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선박교통관제법 시행규칙」 제5조(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12. 14.>

1.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5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면허 취득 후 승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훈자법」에 따른 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 또는 정보통신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교에서 개설한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면허를 취득한 사람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 12. 14.>

- ▶ 제18조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사는 선장에게 선박안전 등에 관한 정보제공, 조언·권고·지시 등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선박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 선박교통관제사가 부적절한 관제업무를 수행할 경우 바로 사고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선박교통관제사에게는 선박교통에 관한 전문 지식과 역량이 요구된다.
- ▶ 이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국제기준 등을 정하는 국제항로표지협회(IALA)에서는 선박교통관제사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 IALA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이러한 권고를 수용하여 5급 항해사 이상 등의 자격을 갖추고 법령에서 정하는 교육·평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따라서, 우리나라 선박교통관제사는 해양경찰청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해양경찰청이 주관하는 기본교육을 이수·통과하여야 하며 적절한 자격 유지를 위해 5년 6개월 주기로 보수교육을 이수·통과하여야 한다.
- ▶ 다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등 국가적인 재난·재해로 보수교육을 정해진 시기에 이수·통과하기 어려울 경우, 1년 이내 기간에서 그 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또한, 제정 당시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는 5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를 취득하고 1년 이상의 승무경력을 보유한 사람 등을 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으로 정하고, 채용시험도 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이후, 선박교통관제사의 채용경로의 다양화, 채용 전 전문교육의 필요성 등이 대두되면서 고교·대학교에서 선박교통관제 관련 교육을 받고 5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승무경력이 없이도 선박교통관제사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2021.12.14. 동 조문을 개정하였다.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개정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변경】

기 준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급 이상 항해사+1년 이상 승무경력 ▶ 무선설비 등 자격 소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급 이상 항해사+1년 이상 승무경력 ▶ 무선설비 등 자격 소지자 ▶ 5급 이상 항해사+고교·대학 VTS 교육 이수자

국제기준 및 국내 유사입법 사례

▶ IALA RECOMMENDATION R0103 TRAINING AND CERTIFICATION OF VTS PERSONNEL 선박교통관제 직원 교육 및 자격에 관한 권고서

6.2. MODEL COURSES 모델 교육과정

Authorities are encouraged to adopt the IALA model courses as part of the basis for mandatory training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ir domestic legal framework.

당국은 국내 법률 체계와 일관된 방식으로 IALA 모델 교육과정을 의무 훈련의 기초의 일부로 채택할 것을 권장한다.

The training and assessment of VTS personnel should be undertaken in accordance with IALA model courses. The basis of VTS training is set out in the following IALA model courses:

VTS 직원의 교육 및 평가는 IALA 모델 교육과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VTS 교육의 기본은 다음 IALA 모델 코스에 나와 있다.

- V-103/1 - VTS Operator training(후략)
- V-103/1 - 선박교통관제사 교육훈련

9.2. RECURRENT TRAINING 자격갱신교육

Recurrent training provides a mechanism to reassess the competency and proficiency of VTS personnel through a structured and standardised programme. (중략) It is recommended that recurrent training should be carried out at intervals not exceeding five years.

자격갱신교육은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VTS 직원의 역량과 숙련도를 재 평가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중략)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자격갱신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제21조(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및 업무) ① 선박교통관제사는 해양수산부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시행하는 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한다. <‘19.12.3. 삭제>

- ▶ 「해사안전법」 제36조의2(선박교통관제사) ① 제36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를 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선박교통관제사”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한다. <‘19.12.3. 삭제>

제17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 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해양경찰청장은 전문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⑤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생의 교육·훈련과정 이수 처리를 한 경우
- ⑥ 해양경찰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관련 하위법령〉

▶ 「선박교통관제법 시행규칙」 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교육기관의 연혁·조직 및 운영계획
2. 교육시설 현황
3. 교육강사의 이름, 학력·경력 등 자격요건, 교육강사별 담당 과목 및 시간
4. 교육과목 및 교육·평가방법
5. 연간 교육계획
6. 해당 교육기관의 예산명세
7. 정관(법인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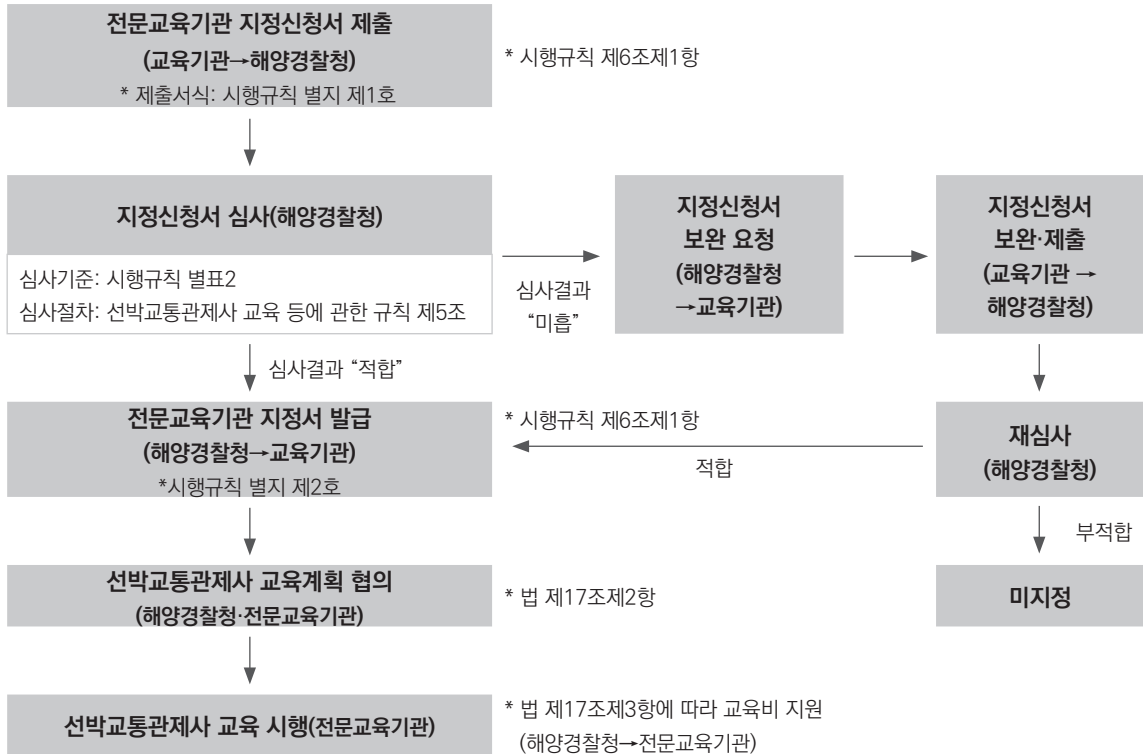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별표 2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교육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⑤ 해양경찰청장은 5년마다 전문교육기관이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해야 한다.
-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 본 법 제정 전, 선박교통관제사 교육기관은 舊 「선박교통관제사 자격인증 교육 등에 관한 규정」(해양경찰청훈령 제1호, '20.6.4. 일부개정)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었으나,
- ▶ 선박교통관제법 제정 시 교육기관의 전문성 확보 및 검증을 위해 선박교통관제사 전문 교육기관 지정 기준·절차 등을 법령으로 정하였다.
- ▶ 본 조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해양경찰청훈령 제260호)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여부 심사를 거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다.
- ▶ 「전문교육기관은 해양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선박교통관제사 교육계획을 수립·이행하며, 교육 횟수·인원 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 또한, 전문교육기관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매 5년마다 지정기준 적합여부 심사를 받아야 하며, 지정기준 부적합 등의 사유 발생시 청문을 거쳐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전문교육기관 지정 절차】



유사입법 사례

▶ IALA GUIDELINE 1014 ACCREDITATION AND APPROVAL PROCESS FOR VTS TRAINING 선박교통관제 교육 인증 및 승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전략)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Competent Authority to accredit and audit VTS training organisations as well as approve VTS training courses.

책임당국은 선박교통관제 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을 승인하고 심사할 책임이 있다.

▶ 「항공안전법」 제4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려는 자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과목, 교육방법,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훈련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 교관의 인원·자격 및 교육평가방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명시된 훈련운영기준을 전문교육기관지정서와 함께 해당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

선박교통 관제사의 업무

선박교통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에 대한 관찰확인, 안전정보의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조언·권고·지시
2. 혼잡한 교통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선박교통정보 및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상특보 등의 제공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항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선박 출입신고·선석(船席)·정박지(碇泊地)·도선(導船)·예선(曳船) 정보 등 항만운영정보의 제공
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역항 질서 단속에 관한 정보의 제공
5. 「해사안전법」 제38조에 따른 선박 출항통제 관련 정보의 제공
6. 그 밖에 선박교통안전과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관련 하위법령〉

▶ 「선박교통관제법 시행규칙」 제7조(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법 제18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관제업무 관련 법규 위반의 감시·적발 및 관계기관의 위법 선박 감시·적발 지원
2.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의 해양사고 발생 사실을 최초로 접수한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에 해당 사실 전파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에의 자료 입력
4. 그 밖에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업무

- ▶ 본 조에서는 국제해사기구(IMO)·국제항로표지협회(IALA) 지침 등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시행하는 관제업무 및 국내 선박교통환경에 따라 필요한 관제업무들을 명시하고 있다.

1. 관찰확인, 안전정보의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조언·권고·지시

- ▶ IMO 결의서 A.1158(32) GUIDELINES FOR VESSEL TRAFFIC SERVICES에 따르면 선박 이동의 안전과 효율을 보장하기 위한 관찰(monitoring)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또는 조언 제공, 경고 및 지시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 이러한 국제기준에 따라 본 조에서는 관찰확인과 국제기준에 따른 정보제공, 안전에 관한 조언·권고·지시를 관제업무로 명시하였다.

2. 혼잡한 교통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선박교통정보 및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상특보 등의 제공

3. 항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선박 출입신고·선석·정박지·도선·예선 정보 등 항만운영정보의 제공

- ▶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지침 1089 'VTS 규정' 상 선박교통관제사가 제공하는 정보(선박교통상황, 항행경보, 기상특보, 수로환경, 도선·예선 등 항만정보)를 국내법에 반영하였다.

4. 항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선박 출입신고·선석·정박지·도선·예선 정보 등 항만운영정보의 제공

5. 「해사안전법」 제38조에 따른 선박 출항통제 관련 정보 제공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8조는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의 항법, 「해사안전법」 제38조는 기상악화 시 항내에서 출항을 통제하는 규정으로써 위반한 사람에게에는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 선박교통관제의 목적은 운항자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 ▶ 이러한 목적에 따라 운항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박교통관제사가 무역항 질서위반 행위 또는 출항통제 정보를 선장, 관련 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그 밖에 선박교통안전과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 법률에서 정한 업무 외 관련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업무 등은 시행규칙 제7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관제업무 관련 법규 위반의 감시·적발 및 관계기관의 위법 선박 감시·적발 지원

- “선박교통의 안전”이라는 법의 목적 상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관제업무 관련 법규”란 「해사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의 선박교통과 관련된 항법 조문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 ‘관련 법규’의 범위는 관제시설로 감시·적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현장 상황에 따라 해사안전법 등 외에 다른 법률까지 포함될 수 있음

- 또한, 해양수산부 등 선박교통과 관련된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 관련 기관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해상위법행위의 감시·적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②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의 해양사고 발생 사실을 최초로 접수한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에 해당 사실 전파
- 관제대상선박에 사고가 발생하여 해상교통관제센터가 인지한 경우 「수상구조법」 제5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인 해양경찰서에 전파하여 신속한 구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③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에의 자료 입력
- 항만운영정보시스템 자료 입력은 선박의 항만 입출항 시각·장소 등에 관한 정보를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에 입력하는 업무이다.
 - 항만운영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는 선박의 항만사용료를 산정하는 근거로써 항만 운영 상 필수자료이며, 선박교통관제업무가 해양수산부 소관일 때부터 선박교통관제사가 수행하여 왔다.
 - 2014.11.19. 정부조직 개편으로 항만 선박교통관제업무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항만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 이에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는 항만운영정보시스템 자료 입력을 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에 포함하도록 선박교통관제법 하위법령에 명시하도록 합의*하여 본 조에서 정하고 있다.
- *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 간 선박교통관제사의 소속 일원화 조치에 따른 업무협약서('19.8.9.)
- ④ 그 밖에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업무
- 관제업무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는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해양경찰청훈령 제258호)에서 정하고 있다.
- * 기상특보 등 항행안전방송, 접근선박의 침로·속력 등 선박운항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항만국 통제 출항정지선박 확인 등

국제기준 및 국내 유사입법 사례

▶ IMO Res A.1158(32) GUIDELINES FOR VESSEL TRAFFIC SERVICES

3.1 The purpose of VTS is to contribute to the safety of life at sea, improve the safety and efficiency of navigation and support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within a VTS area by mitigating the development of unsafe situations through:

.1 providing timely and relevant information on factors that may influence ship movements and assist onboard decision-making. This may include:

- .1 position, identity, intention and movements of ships;
- .2 maritime safety information;
- .3 limitations of ships in the VTS area that may impose restrictions on the navigation of other ships (e.g. manoeuvrability), or any other potential hindrances;
- .4 other information such as reporting formalities and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 (ISPS Code) details; and
- .5 support for, and cooperation with, allied services;

.2 monitoring and managing ship traffic to ensure the safety and efficiency of ship movements. This may include:

- .1 planning ship movements in advance;
- .2 organizing ships under way;
- .3 organizing space allocation;
- .4 establishing a system of traffic clearances;
- .5 establishing a system of voyage or passage plans;
- .6 providing route advice; and
- .7 ensuring compliance with and enforcement of regulatory provisions for which they are empowered;

3.2 To achieve their purpose, VTS should provide information or issue advice, warnings and instructions, as deemed necessary.

3.1 선박교통관제의 목적은 관제구역내에서 위험 상황 발생을 예방하여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에 기여와 항행의 안전성과 효율성 향상 및 해양환경 보호를 지원하는 것이다.

.1 선박 항행의 영향과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시기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1 선박의 위치, 선종, 의도 및 이동;
- .2 해사안전정보
- .3 관제구역에서 다른 선박의 항행을 제한할 수 있는 선박의 한계(예시: 조종성) 또는 기타 잠재적 장애물

국제기준 및 국내 유사입법 사례

- .4 보고 형식 및 ISPS 세부 정보와 같은 기타 정보
- .5 연계 서비스에 대한 지원 및 협력
- 3.2 선박 이동의 안전과 효율을 보장하기 위한 관찰 및 관리.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1 사전 선박이동계획
 - .2 항행 선박 정리
 - .3 여유수역 정리
 - .4 항행허가 시스템 구축
 - .5 선박이동 계획 또는 항행계획 시스템 구축
 - .6 항로 조연 제공
 - .7 권한이 부여된 규제 조항의 준수 및 집행 보장
- 3.2 VTs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또는 조연 제공, 경고 및 지시를 해야 한다.
- ▶ 「해사안전법」 제36조의2(선박교통관제사) ② 선박교통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9.12.3. 삭제>
 - 1. 관제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관찰확인·안전정보제공·조연 및 지시
 - 2. 기상특보의 발표나 혼잡한 교통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 3. 그 밖에 선박교통 안전과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 「항공안전법」 제83조(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비행장, 공항, 관제권 또는 관제구에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등에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비행정보구역에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위하여 비행장,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상태 등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조연 및 정보를 조종사 또는 관련 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하는 업무(이하 “항공교통업무”라 한다)의 제공 영역, 대상,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Q & A

Q. 관제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지시’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A. 선박교통관제사(공무원)의 지시로 인한 손해배상(구상)은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관제업무 수행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한다면, 해양사고 시 관제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관제사에게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례는 없음 또한, 관제사 지시에 따른 사고책임의 최종적인 결정은 법원 판결에 따라야 할 것임

✓ 해심 재결서에서 부적절한 관제 등을 언급한 바 있으나,

- * (중해심 재결 제2018-009호) 여객선·낚시어선 충돌사고시 부적절한 관제
- * (중해심 재결 제2020-004호) 오륙도 방파제 해저케이블 손상사고 관제 소홀

✓ 대법원은 국가책임은 인정하되 공무원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부정(대법원 95다 38677)

- * 운전병이 군용버스 운전 중, 전방차량을 늦게 발견하여 충돌, 법원은 전방차량의 운전자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했으나 운전병에 대한 손해배상은 기각함

Q. 「해사안전법」 제38조(선박 출항통제)에 근거한 해당선박에 대해 출항통제를 선박교통관제관서에서 대행할 수 있는지?

A. 「해사안전법」 제38조에 따른 기상특보 시 선박 출항통제권자는 지방해수청장 또는 해양서장이며,

동법에서 통제권을 선박교통관제관서가 소속된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선박교통관제관서가 통제를 ‘대행’한다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음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호에 따른 선박운항통제는 「선박교통관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관제업무 관련 법규(ex. 「해사안전법」 제38조) 위반 선박감시 적발 업무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8조(선박운항통제)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선박운항통제(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야 한다.

2. 「해사안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출항이 통제된 경우

✓ 「선박교통관제법 시행규칙」 제7조(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법 제18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관제업무 관련 법규 위반의 감시·적발 및 관계기관의 위법 선박 감시·적발 지원

제19조 관제업무 절차

선박교통관제사가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교통관제사가 선박이 명백한 사고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제업무 절차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관련 하위법령〉

▶ 「선박교통관제법 시행규칙」 제8조(관제업무 절차) ① 법 제19조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단계별 절차에 따라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한다.

1. 1단계(관찰·확인):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관제대상선박이 해양사고 위험이 있는지 관찰·확인
2. 2단계(정보제공): 선박교통관제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제대상선박에서 요구하는 경우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
3. 3단계(조언·권고): 관제대상선박에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 관한 조언·권고
4. 4단계(지시): 관제대상선박이 명백한 해양사고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 또는 안전조치를 지시

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절차의 세부 사항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따른 해역별 특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 일반적인 절차에 의해 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찰확인 → 정보제공 → 조언·권고 → 지시 단계별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제사의 업무 절차를 명시하였다.
- ▶ 또한, 선박에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을 경우 관제사가 정보제공 또는 조언·권고로 그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바로 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두었다.
- ▶ 한편,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해양경찰청훈령 제258호) 제12조에서는 무역항의 수상구역 외 교통안전특정해역 및 연안해역에서는 정보제공, 조언·권고 위주로 관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 이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보다 선박교통밀집도가 낮고, 면적이 넓은 교통안전특정해역 등에서는 선장에게 시정 또는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지시'를 최소화함으로써,
 - 동 해역 내에서 관제사는 선박안전에 관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주로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국제기준

▶ IMO Res A.1158(32) GUIDELINES FOR VESSEL TRAFFIC SERVICES

3.2 To achieve their purpose, VTS should provide information or issue advice, warnings and instructions, as deemed necessary.

3.2 VTS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또는 조언 제공, 경고 및 지시를 해야 한다.

제20조

선박교통 관제사의 권한

- ①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해상기상상태, 항로상태, 해상교통량 및 해양사고 등을 고려하여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박의 입항·출항 및 이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비함정 출동과 도선 또는 예선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 관제사의 업무는 사고 예방 및 대응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업무수행을 위한 권한을 법령에 명시하였다.
- ▶ 우선, 해양사고 위험이 우려될 경우 관제사가 선박 입·출항, 이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 ▶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비함정, 도선사, 예선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법령에 명시하였다.
- ▶ 또한, 이러한 권한은 관제사의 판단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재량행위에 해당된다.
- ▶ 한편, 국제해사기구(IMO) 등에서도 관제사에게 선박교통 조정 등의 권한을 부여하도록 관련 규정에 명시하고 있다.

국제기준 및 해외 유사 입법사례

▶ IMO Res A.1158(32) GUIDELINES FOR VESSEL TRAFFIC SERVICES

.2 monitoring and managing ship traffic to ensure the safety and efficiency of ship movements. This may include:

- .1 planning ship movements in advance;
- .2 organizing ships under way;
- .3 organizing space allocation;
- .4 establishing a system of traffic clearances;
- .5 establishing a system of voyage or passage plans;
- .6 providing route advice; and
- .7 ensuring compliance with and enforcement of regulatory provisions for which they are empowered;

.3 responding to developing unsafe situations, which may include:

- .1 a ship unsure of its route or position;
- .2 a ship deviating from the route;
- .3 a ship requiring guidance to an anchoring position;
- .4 a ship that has defects or deficiencies, such as navigation or manoeuvring equipment failure;
- .5 severe meteorological conditions (e.g. low visibility, strong winds);
- .6 a ship at risk of grounding or collision; and

- .7 emergency response or support for emergency services.
- .2 선박 이동의 안전과 효율을 보장하기 위한 관찰 및 관리.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1 사전 선박이동계획
 - .2 항행 선박 정리
 - .3 여유수역 정리
 - .4 항행허가 시스템 구축
 - .5 선박이동 계획 또는 항행계획 시스템 구축
 - .6 항로 조언 제공;과
 - .7 권한이 부여된 규제 조항의 준수 및 집행 보장
- .3 위험 상황 대응,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1 항로나 위치를 확실히 알지 못하는 선박;
 - .2 항로를 이탈한 선박;
 - .3 정박 위치로 안내가 필요한 선박;
 - .4 항해 또는 조타장비의 고장과 같은 결함 또는 문제가 있는 선박;
 - .5 악천후(예시: 저시정, 강풍);
 - .6 좌초 또는 충돌 위험의 선박;과
 - .7 비상대응 또는 응급 서비스 지원

▶ IALA G1141 Operational Procedures for delivering VTS

5. EXTERNAL VTS PROCEDURES 대외적 관제 절차

5.1 Routine Procedures 일상적 절차

5.1.12 Adverse Environmental Conditions 열악한 환경 조건

In situations of adverse environmental conditions within the VTS area, such as poor visibility, strong currents or tidal streams, high winds, ice etc. special processes and procedures may be required. These may include:

제한시계, 강한 해류 또는 조류, 강풍, 빙하 등 관제구역 내 열악한 환경 조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 Restriction or prohibition on movement; 이동제한 또는 금지
- Additional separation between vessels; and 선박 간 안전거리 유지
- Additional requirements (e.g. mandatory tug service, pilot, etc.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사항 (예: 의무적인 예선, 도선 등)

5.2 Emergency Procedures 비상절차

5.2.1 Collision, Capsizing, Sinking, Grounding, Fire Onboard, Man Overboard

충돌, 전복, 침몰, 좌초, 선박 화재, 익수자 사고

Procedures should be established to deal with incidents such as collision, capsizing, sinking, grounding, fire on vessel, 'man overboard', which may include the following actions:

충돌, 전복, 침몰, 좌초, 선박 화재, 익수자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포함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 Alert MRCC; 구조본부에 경보발령
- Restrict traffic in the area; 사고구역 내 선박교통 제한
- Alert allied services and other support units; and; 연계 서비스 및 지원부서에 상황전파(후략)

▶ **캐나다 Shipping Act 3.(관제사의 권한)** 항해의 안전과 효율성, 환경보호를 위해 제정된 의회법의 적용을 받는 항만에 관한 규정 136조 또는 의회법의 규칙에 따라 관제사는 명시된 선박 중 관제 구역에 들어오려는 선박이나 구역 내 선박에 대하여

- (a) 관제구역 진출입, 항해 허가를 내릴 권한이 있다.
- (d) 지침상에 명시된 어떤 상황이나 그 전후 간에 직접 선박에게,
 - (i) 관제구역 밖으로 이동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 (ii) 또는 진입 중단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 (iii) 관제구역에서 항진을 지시하거나 어떤 지점에 대기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21조 관제시설의 설치·관리

- 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하여 레이더, 초단파무선전화, 선박자동 식별장치 등 관제업무를 위한 시설(이하 “관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해양경찰청장은 관제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관제시설의 수리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하위법령〉

▶ 「선박교통관제법 시행규칙」 제9조(관제시설의 설치·관리) ① 해양경찰청장은 예 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관제시설(이하 “관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1. 해상교통량 등 선박교통 상황
2. 지리적 조건 등 설치지역의 환경
3. 관제시설의 비상운용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관제시설의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유지·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1. 정기점검: 관제시설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한 주 기마다 실시하는 점검
2. 수시점검: 관제시설의 고장 또는 성능 저하가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 실시 하는 점검
3. 조정·정비: 제1호 및 제2호의 점검 결과에 따라 원래의 기능·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제시설을 변경·수리·교체하는 작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 2022년 기준 전국 선박교통관제구역의 면적은 약 28,458km²로 서울특별시의 약 47배에 달하며,
- ▶ 이처럼 넓은 관제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고 선박과 통신하기 위해서는 레이더, 초단파무선전화와 같은 관제시설이 필요하다.
- ▶ 본 조에서는 제11조에 따라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는 해양경찰청장이 이러한 관제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 또한,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적절한 장소에 관제시설을 설치하고 정기·수시로 유지보수 하도록 하였다.

1. 해상교통량 등 선박교통 상황

- ▶ 선박교통 안전을 위해 교통이 혼잡하여 해양사고 위험이 큰 해역 내 운항선박을 탐지·통신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가 필요함

2. 지리적 조건 등 설치지역의 환경

- ▶ 레이더, 초단파무선전화 등 관제시설의 전파를 가로막거나 혼선을 일으키는 장애물 등이 없어야 함

3. 관제시설의 비상운용

- ▶ 장비 고장, 정전 등으로 관제시설이 중단될 경우 유지보수 인력이 현장에서 수리하거나 비상운용이 가능한 여건이어야 함

국제기준 및 국내 유사입법 사례

▶ IALA R0128—Operational and Technical Performance of VTS Systems

VTS 시스템의 운영 및 기술 성능에 관한 권고서

Annex 부속서

3.1 Responsibilities 책임

In planning and establishing a VTS, the Government or the Competent Authority should: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한 계획 수립시 정부 또는 책임당국은 다음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 establish appropriate standards for shore- and offshore-based equipment
해안선에 설치되는 장비에 관한 적절한 기준 마련
- ensure that the VTS authority is provided with the equipment and facilities necessary
해상교통관제센터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비

▶ 「공항시설법」 제43조(항행안전시설의 설치) ① 항행안전시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 허가기준 등 항행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

관제시설의 기술기준

- ① 관제시설은 「전파법」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② 해양경찰청장은 관제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그 성능을 개량하려는 때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과 기준에 따라야 한다.
- ③ 해양경찰청장은 관제시설의 기능 및 규격을 통일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하위법령〉

▶ 「선박교통관제법 시행규칙」 제10조(관제시설의 기술기준)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관제시설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레이더: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으로 개설허가가 가능한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야 하며, 관제대상선박을 탐지·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2. 초단파 무선전화: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으로 개설허가가 가능한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야 하며, 관제대상선박과 음성통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선박자동식별장치: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으로 개설허가가 가능한 161.975메가헤르츠(MHz)와 162.025메가헤르츠(MHz)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야 하며, 관제대상선박의 위치 등 정보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4. 선박교통관제 운영 시스템: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관제시설 등에서 수신한 정보를 통합·전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제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 레이더, 초단파무선전화 등 관제시설은 전파를 사용하여 선박 탐지·통신하는 시설이므로 전파의 이용·관리·기술개발에 관한 국내법인 「전파법」 제45조 등의 기술기준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 ▶ 외국선박과의 통신 등을 위해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등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규격·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 ▶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관제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시행규칙 제10조에서 레이더, 초단파무선전화 등 관제시설 별로 통일된 기술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 ▶ 세부 기술기준은 첨단기술 개발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해양경찰청훈령 제259호)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 「ALA VTS 시스템 운영 및 기술 성능요구 조건의 준비에 관한 지침서 1111」의 기술기준을 국내 규칙에 반영하여 제정

국제기준 및 국내 유사입법 사례

▶ IALA R0128—Operational and Technical Performance of VTS Systems

VTS 시스템의 운영 및 기술 성능에 관한 권고서

THE COUNCIL: 이사회는,

RECOMMENDS that Competent Authorities providing Vessel Traffic Services take into consideration the operational and technical performance of VTS systems contained in this recommendation when establishing appropriate standards for VTS systems.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는 책임당국이 VTS 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표준을 수립할 때 본 권고서에 포함된 VTS 시스템 운영 및 기술 성능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RECOMMENDS ALSO that the VTS authorities consider this recommendation, in conjunction with the standards set by the Competent Authority, and the information for planning and operating VTS systems provided in IALA Guideline 1111 on Preparation of Operational and Technical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VTS Systems.

또한, 해상통관제센터가 책임당국에 의해 설정된 기준, IALA의 VTS 시스템 운영 및 기술 성능요구 조건의 준비에 관한 지침서 1111에서 제공하고 있는 VTS 시스템 기획 및 운영 정보 및 본 권고서를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 ▶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무선설비(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주파수 허용편차와 안테나공급전력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3조

기술의 개발·지원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시설의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관련 하위법령〉

▶ 「선박교통관제법 시행령」 제12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관제시설의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제시설 기술개발 추진계획(이하 “기술개발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기술개발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제시설 기술개발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관제시설 기술개발의 고도화와 기술개발성과의 이전·활용에 관한 사항
3. 관제시설 기술개발 분야의 산업계·학계·연구기관 간의 협력 및 공동연구
4. 관제시설 기술개발사업의 세부운영계획
5. 그 밖에 관제시설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경찰청장은 기술개발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관제시설의 기술개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관제시설 관련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의 분석
2. 관제시설의 성능 향상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3. 관제시설의 국산화를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4. 그 밖에 관제시설의 기술개발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최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산업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등 해양 IT 기술도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
- ▶ 또한, 레이더 등 주요 관제시설은 외산에 의존하고 있고, 외국 관제시설 제조업체에 비해 국내 업체는 그 규모가 영세하여,
 - 우리나라 관제시설 산업의 육성을 위해 국가 주도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 ▶ 따라서,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고 관제시설을 설치·관리하는 해양경찰청이 관련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기술개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 협력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또한,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 성능향상, 국산화 연구 등에 관한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등에 예산·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제기준 및 유사입법 사례

▶ IMO Res A.1158(32) GUIDELINES FOR VESSEL TRAFFIC SERVICES

5.1 The Contracting Government should:

.4 take account of future technical and other developments recognized by the Organization relating to VTS.

5.1 협약국 정부는:

.4 VTS와 관련한 기구가 인정하는 미래기술 및 기타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기술개발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1조(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촉진 등) ① 정부는 국가기관등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화·자동화·고도화하는 응용서비스(이하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라 한다)를 개발·운영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부문에 의한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

한국선박교통 관제협회

- ① 선박교통관제에 대한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 해양경찰청장 등의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이하 “관제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관제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관제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1. 선박교통관제사의 관제업무 수행을 위한 연구 활동
 2. 선박교통관제사 교육훈련 및 평가에 관한 연구 및 사업수행
 3. 관제시설의 발전과 기술향상에 관한 연구
 4. 해양사고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국내외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규의 제정·개정에 관한 연구
 6. 선박교통관제 분야 국내외 유관기관 간 학술교류,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선박교통관제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④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제협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관제협회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관제협회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관제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하위법령〉

- ▶ 「선박교통관제법 시행령」 제13조(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 ① 법 제2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1.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분석
 2. 선박교통관제 관련 홍보 및 간행물의 발간
-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에 재정지원을 한 경우 해당 사업의 운영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선박교통관제라는 특정한 국가적 정책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연구·조사, 교육·홍보 등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이하 ‘관제협회’)의 설치·운영 규정을 마련하였다.
- ▶ 관제협회는 특수법인으로 민법, 상법상의 법인에 관한 규정이 아닌 동 법에 따른 별도의 근거 규정에 기반을 두도록 하였다.
- ▶ 또한, 관제협회는 본 조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해양경찰청은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관제협회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경찰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유사입법 사례

- ▶ **제41조(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립 등)** ① 항로표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항로표지 관련 시설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기술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항로표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2. 국제항로표지협회와의 협력 등 항로표지 관련 국제협력 지원
 3. 국제기구의 항로표지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4.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연구·개발 및 시험·검사
 5. 항로표지 분야에 관한 전문인력(이하 “항로표지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 교육 지원 및 관리
 6. 외국과의 항로표지 관련 개발협력 지원
 7.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관리하는 부표류의 제작 및 수리
 8. 이 법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기술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이하 생략)

제25조

권한의 위임·위탁

- ① 이 법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양경찰청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관련 하위법령〉

▶ 「선박교통관제법 시행령」 제14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 1의2.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제시설의 설치 및 관리
2.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평가에 관한 업무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한다.

- ▶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관제시설의 설치·관리 및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은 현장집행 기관인 해상교통관제센터가 소속되어 있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하였다.
- 본 법 제정 전, 해사안전법 및 선박임출항법에서는 선박교통관제 관련 과태료 처분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하고 있었으나,
-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위반행위 적발과 처분 기관을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일원화하였다.
- ▶ 또한, 제17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이 선박교통관제사 교육·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위탁하였다.

유사입법 사례

- ▶ 「해사안전법」 제9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양경찰청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제3항에 따른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등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사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 벌칙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벌칙은 법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충적이며 최종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수단으로서, 행정법에서는 '행정벌'이라 불리며 처벌 내용을 기준으로 행정형벌(벌금·징역 등)과 행정질서벌(과태료)로 크게 구별된다.
- ▶ 벌칙은 행정형벌로써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따른 경찰관의 수사를 거쳐 법원에서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진행되고,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경우 「즉결심판법」에 따른 즉결심판절차에 따른다.
- ▶ 또한, 본 법 제정 전 선박교통관제 관련 규정을 정하고 있던 「해사안전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상 벌칙 기준은 500만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 ▶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양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기준을 상향 규정하여 선장의 선박교통관제 준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였다.

유사입법 사례

- ▶ 「해사안전법」 제10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의2.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19.12.3. 삭제>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의2.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아니한 자 <’19.12.3. 삭제>

Q & A

Q. 법 제12조에 따라 고시된 선박교통관제운영규정에 따른 선박운항통제에 관제대상선박이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A. 「선박교통관제법」 제12조에서는 관제대상선박이 따라야 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고시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선박운항통제 역시 선장이 따라야 할 의무이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아니할 경우 제26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Q.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데, 따르지 않는 횟수를 별도로 정한 규정이 있는지? 정당한 사유란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A. 「선박교통관제법」에서는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위반에 대한 횟수는 정하고 있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란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에 따를 경우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라고 볼 수 있음

* 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불확정 개념으로 사안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case by case)

Q. 도선사가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인지?

A. 「선박교통관제법」 제14조에 따라 관제에 따라야 할 주체는 선장으로 되어 있으며 도선사가 관제에 따라야 할 의무 및 위반에 따른 처벌조항은 없음

또한, 「도선법」 제18조에 따라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하더라도 선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못하며,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책임은 선장에게 있음

*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법률(시행령 x, 시행규칙 x)로 규정해야 함

제27조

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2.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관제통신을 청취·응답하지 아니한 사람
 3. 제14조제6항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의 신고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지 아니한 사람
- ② 제14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부과·징수한다.

〈관련 하위법령〉

▶ 「선박교통관제법 시행령」 제1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시행규칙 [별표 1] 관제통신 주파수(제4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1호	90	150	300
나.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갖추지 않거나 관제통신을 청취·응답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2호			
1) 무선설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300		
2) 관제통신을 청취·응답하지 않은 경우		90	150	300
다.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	60	100	200
라.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의 신고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3호	90	150	300

- ▶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이나 사회공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행정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을 정도의 단순한 의무 태만에 대하여 과하는 금전벌이다.
- ▶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법적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최대 한도금액을 명시하고 있으며, 시행령 별표 2호와 같이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되어 처분된다.
- ▶ 과태료 부과기준은 본 법에서 정하고 있으나, 사전통지, 부과, 감경, 이의제기, 체납처분 등과 관련된 세부적인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라야 한다.

유사입법 사례

- ▶ 「해사안전법」 제110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5. 제36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9.12.3. 삭제>
 - 15의2. 제36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또는 호출응답용 관제통신을 청취·응답하지 아니한 자 <‘19.12.3. 삭제>
 - 15의3. 제36조제6항을 위반하여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지 아니한 선박의 선장 <‘19.12.3. 삭제>
 - 25. 제106조제17호 외의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로서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게을리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Q & A

Q. 관제통신 미청취 및 미응답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정하고 있는데, 미청취-미응답으로 두 차례 적발된 경우, 과태료를 두 번 납부해야 하는지?

A. 1차 위반 시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 시행령 별표2에 따라 2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150만원)가 부과됨

만약 2차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이 1차 위반 과태료를 처분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1차 위반에 상응하는 과태료(90만원)가 부과됨

Q. 예인선, 통선 등 2인 이하 승선하는 소형선박이 운항 중 작업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관제통신을 미청취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A.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제구역 내에서 항상 관제통신을 청취·응답하여야 하며, 2인 이하 승선선박에 대한 예외 조항은 없음

Q. 관제구역 내에서 이동하는 선박이 관제통신을 하지 않고 이동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A. 법 제27조(과태료) 각 호에서는 법 제14조(선장의 의무) 제3항~제6항, 제15조(관제통신의 녹음)을 위반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동선박 관제통신은 제12조(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님

* 과태료 부과대상인 제14조제3항은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관제구역을 출입하려는 때에 관제센터에 신고하는 의무이며, 이에 선박이동 관제통신은 포함되지 않음

Q. 관제대상선박이 무선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해양사고 위험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2가지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A.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에 따라 1개 행위가 2개 이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금액을 부과함

따라서, 무선설비 미설치(3백만원 이하) 및 위험 미신고(2백만원 이하)에 따른 과태료 중 무선설비 미설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됨

[선박교통관제법 해설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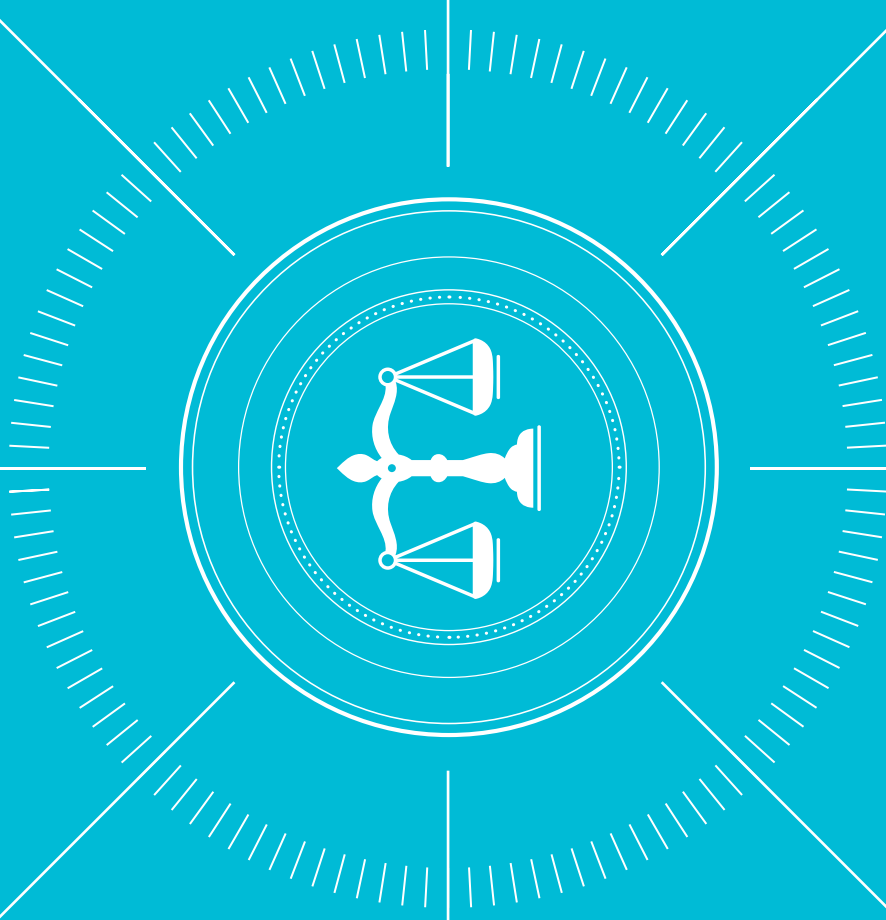
집필자	해상교통관제과장	허학선
	해양수산사무관	홍석인
	해양수산주사	정병우
	해양수산주사보	정재연
감수위원	변호사	성우린
	한국법제연구원	홍의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103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105 [별표 1] ~ [별표 5]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1. 1.] [해양경찰청고시 제2021-8호, 2021. 12. 28., 일부개정.]



해양경찰청(해상교통관제과), 032-835-238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12조제1항,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4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이하 "선박교통관제관서"라 한다)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구역(이하 "선박교통관제구역"이라 한다)에서의 법 제13조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이하 "관제대상선박"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규칙과의 관계)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선박교통관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선박교통관제구역) 선박교통관제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관제대상선박) 관제대상선박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사용명칭)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사용명칭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다.

제7조(진입·진출 신고 등) ①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박교통관제구역 안에서 이동하거나 해당 선박에 도선사가 승선·하선하는 경우 별표 3에 따라 관할 선박교통관제관서와 관제통신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도선사가 승선·하선하는 경우 관할 선박교통관제관서와의 관제통신을 도선사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영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구역에 진입하거나 진출하려는 경우 별표 4에 따라 관할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④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항을 선박교통관제관서와 관제통신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초단파 무선전화를 사용해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사전에 관할 선박교통관제관서와 협의를 거쳐 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선박자동식별장치 등에 입력하고, 관할 선박교통관제관서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8조(선박운항통제)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선박운항통제(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야 한다.

1.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기상특보(풍랑·폭풍해일·태풍)가 발효되거나 시계(視界)가 500미터 이하로 제한된 경우
2. 「해사안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출항이 통제된 경우

제9조(선장의 준수사항)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영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정된 항로 및 항법 준수
2. 지정된 최고속력의 범위에서 항행

제10조(관제통신 제원) 영 제9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별 관제통신의 제원은 별표 5와 같다.

제11조(관제통신 녹음 보존기간) ①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제통신 녹음정보의 보존기간은 60일로 한다. 다만, 선박교통관제관서와 관제대상선박으로서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등에 관한 업무와 관련된 기관으로부터 관제통신 녹음정보의 보존기간 연장을 요청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등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②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관제통신 녹음을 수기(手記)로 대체한 경우에도 보존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제1항을 준용한다.

제12조(재검토키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2021-8호, 2021. 12. 28.〉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표 1] 선박교통관제구역(제4조 관련)

[별표 2] 관제대상선박(제5조 관련)

[별표 3] 관제대상선박 이동 및 도선사 승선·하선 관제통신 방법(제7조 제1항 관련)

[별표 4] 선박교통관제구역별 관제대상선박 신고 방법(제7조 제2항 관련)

[별표 5] 선박교통관제관서별 관제통신 제원(제10조 관련)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별표 1]

선박교통관제구역(제4조 관련)

구 분	선박교통관제구역(WGS-84)
경인연안 구역	▶ 다음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01 북위 37도 57분 00초, 동경 124도 44분 00초
	02 북위 37도 50분 30초, 동경 124도 43분 48초
	03 북위 37도 45분 30초, 동경 124도 41분 00초
	04 북위 37도 43분 18초, 동경 124도 29분 00초
	05 북위 37도 24분 00초, 동경 124도 37분 00초
	06 북위 37도 04분 00초, 동경 125도 52분 30초
	07 북위 37도 11분 30초, 동경 125도 54분 30초
	08 북위 37도 17분 30초, 동경 126도 04분 30초
	09 북위 37도 20분 27초, 동경 126도 21분 24초
	10 북위 37도 25분 00초, 동경 126도 00분 00초
	11 북위 37도 38분 30초, 동경 125도 43분 30초
	12 북위 37도 38분 30초, 동경 125도 41분 00초
	13 북위 37도 26분 00초, 동경 125도 41분 00초
	14 북위 37도 26분 00초, 동경 125도 07분 00초
	15 북위 37도 47분 00초, 동경 124도 46분 00초
	16 북위 37도 57분 00초, 동경 124도 46분 00초
태안연안 구역	▶ 다음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01 북위 37도 00분 12초, 동경 126도 04분 24초
	02 북위 36도 51분 47초, 동경 126도 04분 24초
	03 북위 36도 51분 47초, 동경 126도 07분 03초
	04 북위 36도 50분 45초, 동경 126도 09분 00초
	05 북위 36도 40분 00초, 동경 126도 02분 00초(가의도 서방)
	06 북위 36도 20분 00초, 동경 126도 20분 30초(삼시도 서방)
	07 북위 36도 20분 00초, 동경 125도 57분 00초
	08 북위 36도 34분 00초, 동경 125도 44분 40초
	09 북위 36도 48분 00초, 동경 125도 44분 40초
	10 북위 37도 00분 00초, 동경 125도 52분 30초(반서 북방)

구 분	선박교통관제구역(WGS-84)
대산항 구역	▶ 다음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대산항 관제구역)
	01 북위 36도 50분 45초, 동경 126도 08분 57초(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정자두)
	02 북위 36도 51분 47초, 동경 126도 07분 03초(신도 도선점)
	03 북위 36도 57분 32초, 동경 126도 10분 05초(안도 등대)
	04 북위 37도 03분 32초, 동경 126도 18분 41초(장안·대산 도선점)
	05 북위 37도 05분 57초, 동경 126도 23분 35초(풍도 남단)
	06 북위 37도 07분 39초, 동경 126도 26분 41초(말록 도선점)
	07 북위 37도 07분 52.2초, 동경 126도 27분 12.6초(당진화력 항만시설 항로)
	08 북위 37도 07분 26.2초, 동경 126도 27분 30.6초(당진화력 항만시설 항로)
	09 북위 37도 06분 29.2초, 동경 126도 28분 05.6초(당진화력 항만시설 항로)
	10 북위 37도 05분 14.5초, 동경 126도 29분 16.8초(당진화력 항만시설 항로)
	11 북위 37도 04분 41.3초, 동경 126도 29분 58.4초(당진화력 항만시설 항로)
	12 북위 37도 04분 41.3초, 동경 126도 31분 30.6초(당진화력 항만시설 구역)
	13 북위 37도 03분 07.8초, 동경 126도 31분 30.6초(당진화력 항만시설 구역)
	▶ 다음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장안 관제구역)
	01 북위 36도 51분 47초, 동경 126도 07분 03초(신도 도선점)
	02 북위 36도 51분 47초, 동경 126도 04분 24초
	03 북위 37도 00분 12초, 동경 126도 04분 24초
	04 북위 37도 06분 42초, 동경 126도 12분 30초
	05 북위 37도 02분 34초, 동경 126도 17분 18초
	06 북위 36도 57분 32초, 동경 126도 10분 05초(안도 등대)
	07 북위 36도 51분 47초, 동경 126도 07분 03초(신도 도선점)
	▶ 다음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보령항 관제구역)
	01 북위 36도 27분 14.52초, 동경 126도 29분 12.63초(면화박골 서단)
	02 북위 36도 24분 36.54초, 동경 126도 28분 10.64초(월도 동단)
	03 북위 36도 21분 19.48초, 동경 126도 27분 23.11초(저두 남단)
	04 북위 36도 16분 24초, 동경 126도 20분 40초(상홍서 등부표)
	05 북위 36도 11분 00초, 동경 126도 18분 00초(보령 도선점)
	06 북위 36도 11분 00초, 동경 126도 30분 03.63초
	07 북위 36도 19분 28.57초, 동경 126도 30분 03.63초
	08 북위 36도 23분 07.55초, 동경 126도 28분 45.64초(송도 서단)
	09 북위 36도 26분 17.53초, 동경 126도 31분 00.62초(오천국교 서단)
	10 북위 36도 26분 24.53초, 동경 126도 30분 44.63초(혜동동 동단)

구 분	선박교통관제구역(WGS-84)
평택·당진항 구역	▶ 다음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01 북위 37도 11분 45초, 동경 126도 32분 10초
	02 북위 37도 12분 36초, 동경 126도 26분 48초
	03 북위 37도 10분 18초, 동경 126도 26분 54초
	04 북위 37도 10분 00초, 동경 126도 24분 54초
	05 북위 37도 10분 36초, 동경 126도 24분 36초
	06 북위 37도 10분 36초, 동경 126도 23분 24초
	07 북위 37도 03분 24초, 동경 126도 16분 24초
	08 북위 37도 02분 34초, 동경 126도 17분 18초
	09 북위 37도 03분 32초, 동경 126도 18분 41초
	10 북위 37도 05분 57초, 동경 126도 23분 35초
	11 북위 37도 07분 39초, 동경 126도 26분 41초
	12 북위 37도 07분 52.2초, 동경 126도 27분 12.6초
	13 북위 37도 07분 26.2초, 동경 126도 27분 30.6초
	14 북위 37도 06분 29.2초, 동경 126도 28분 05.6초
	15 북위 37도 05분 14.5초, 동경 126도 29분 16.8초
	16 북위 37도 04분 41.3초, 동경 126도 29분 58.4초
	17 북위 37도 04분 41.3초, 동경 126도 31분 30.6초
	18 북위 37도 03분 07.8초, 동경 126도 31분 30.6초
	19 북위 37도 00분 06초, 동경 126도 41분 43초(성구미)
	20 북위 36도 58분 26초, 동경 126도 47분 00초(한진각)
	21 북위 36도 56분 29초, 동경 126도 49분 54초(서부두 끝단)
	22 북위 36도 56분 24초, 동경 126도 50분 44초(내항항로 끝단)
	23 북위 36도 56분 34초, 동경 126도 51분 07초(내항항로 연장선 끝단)
	24 북위 37도 01분 06초, 동경 126도 47분 48초(남양만 끝단)
	25 북위 37도 07분 02초, 동경 126도 40분 28초(궁평항)
	26 북위 37도 09분 30초, 동경 126도 37분 12초(제부도)
인천항 구역	▶ 다음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인천항 항만구역 밖)
	01 북위 37도 05분 00초, 동경 126도 04분 12초(선갑도)
	02 북위 37도 11분 36초, 동경 126도 11분 00초(소야도)
	03 북위 37도 16분 39초, 동경 126도 14분 12초
	04 북위 37도 20분 06초, 동경 126도 20분 00초
	05 북위 37도 21분 42초, 동경 126도 26분 24초(해녀도)

구 분	선박교통관제구역(WGS-84)
인천항 구역	06 북위 37도 18분 54초, 동경 126도 28분 48초(남장자서)
	07 북위 37도 17분 16초, 동경 126도 32분 03초(타구봉도)
	08 북위 37도 16분 47초, 동경 126도 32분 10초
	09 북위 37도 15분 14.5초, 동경 126도 30분 38.5초
	10 북위 37도 13분 36초, 동경 126도 30분 13초
	11 북위 37도 11분 59.49초, 동경 126도 30분 38.5초
	12 북위 37도 12분 36초, 동경 126도 26분 48초(갑죽도)
	13 북위 37도 10분 18초, 동경 126도 26분 54초
	14 북위 37도 10분 00초, 동경 126도 24분 54초
	15 북위 37도 10분 36초, 동경 126도 24분 36초
	16 북위 37도 10분 36초, 동경 126도 23분 24초
	17 북위 37도 03분 24초, 동경 126도 16분 24초
	18 북위 37도 06분 42초, 동경 126도 12분 30초
	19 북위 37도 00분 12초, 동경 126도 04분 24초
	▶ 다만, 다음의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은 제외(자월도 부근)
	01 북위 37도 09분 19초, 동경 126도 10분 48초
	02 북위 37도 16분 00초, 동경 126도 15분 18초
	03 북위 37도 19분 36초, 동경 126도 23분 30초
	04 북위 37도 16분 48초, 동경 126도 24분 00초
	05 북위 37도 14분 24초, 동경 126도 24분 00초
	06 북위 37도 12분 18초, 동경 126도 23분 03초
	07 북위 37도 11분 12초, 동경 126도 22분 00초
	08 북위 37도 09분 06초, 동경 126도 19분 24초
	09 북위 37도 07분 27초, 동경 126도 18분 12초
	▶ 다만, 다음의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은 제외(영흥도 부근)
	01 북위 37도 14분 06초, 동경 126도 25분 39초
	02 북위 37도 12분 36초, 동경 126도 26분 48초
	03 북위 37도 13분 57초, 동경 126도 29분 02초
	04 북위 37도 15분 20초, 동경 126도 29분 56초
	05 북위 37도 16분 23초, 동경 126도 30분 45초
	06 북위 37도 17분 15초, 동경 126도 29분 54초
	07 북위 37도 17분 12초, 동경 126도 26분 38.95초
	08 북위 37도 15분 45초, 동경 126도 25분 42초

구 분	선박교통관제구역(WGS-84)
인천항 구역	▶ 인천항 제1항로 북단선부터 인천항 항만구역의 수상구역 남측 경계선까지 다음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인천항 항만구역)
	01 북위 37도 17분 16초, 동경 126도 32분 03초(타구봉도)
	02 북위 37도 18분 54초, 동경 126도 28분 48초(남장자서)
	03 북위 37도 21분 42초, 동경 126도 26분 24초(해녀도)
	04 북위 37도 25분 26초, 동경 126도 32분 58초(인천대교)
	05 북위 37도 30분 35초, 동경 126도 35분 44초
	06 북위 37도 30분 36초, 동경 126도 36분 15초
경인항 구역	▶ 인천항 제1항로 북단선부터 인천항 항만구역의 수상구역 북측 경계선까지의 해역과 다음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01 북위 37도 35분 36.3초, 동경 126도 34분 08.5초
	02 북위 37도 34분 45.7초, 동경 126도 33분 21.2초
	03 북위 37도 36분 52.8초, 동경 126도 32분 37.7초
	04 북위 37도 36분 54.2초, 동경 126도 33분 16.6초
진도연안 구역	▶ 인천·김포터미널 및 아라뱃길을 포함한 경인항 항만구역의 수상구역
	▶ 다음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01 북위 34도 39분 48초, 동경 125도 56분 18초(도초도)
	02 북위 34도 39분 48초, 동경 125도 32분 00초(흑산도 동방)
	03 북위 34도 31분 12초, 동경 125도 32분 00초(흑산도 남방)
	04 북위 34도 08분 06초, 동경 125도 35분 06초(남매물 수로 서방)
	05 북위 34도 03분 48초, 동경 125도 43분 12초(남매물 수로 남방)
	06 북위 34도 03분 48초, 동경 126도 21분 00초(보길도 서방)
	07 북위 34도 21분 00초, 동경 126도 28분 18초(어란진)
	08 북위 34도 20분 54초, 동경 126도 11분 18초(대소당도)
	09 북위 34도 21분 24초, 동경 126도 07분 24초(진도 신도)
	10 북위 34도 26분 24초, 동경 126도 03분 48초(불도)
	11 북위 34도 27분 48초, 동경 126도 02분 06초(가사도)
	12 북위 34도 34분 45초, 동경 125도 58분 06초(하의도 신도)
여수연안 구역	▶ 다음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01 북위 34도 24분 30초, 동경 128도 00분 00초(작도 동방)
	02 북위 34도 12분 00초, 동경 128도 00분 00초(간여암 남동방)
	03 북위 34도 04분 00초, 동경 127도 35분 00초(상백도)

구 분	선박교통관제구역(WGS-84)	
여수연안 구역	04	북위 33도 54분 00초, 동경 127도 35분 00초(하백도 남방)
	05	북위 33도 54분 00초, 동경 127도 00분 00초(여서도 남동방)
	06	북위 34도 13분 00초, 동경 127도 00분 00초(구도)
	07	북위 34도 18분 00초, 동경 127도 08분 00초(섬도)
	08	북위 34도 22분 50초, 동경 127도 16분 15초(시산도)
	09	북위 34도 24분 40초, 동경 127도 30분 00초(외나로도)
	10	북위 34도 24분 30초, 동경 127도 48분 15초(소리도)
여수 · 광양항 구역	▶ 여수항 및 광양항 항만구역의 수상구역과 다음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01	북위 34도 50분 06초, 동경 127도 46분 30초
	02	북위 34도 50분 50초, 동경 127도 48분 12초
	03	북위 34도 43분 30초, 동경 127도 51분 30초
	04	북위 34도 41분 15초, 동경 128도 00분 00초
	05	북위 34도 24분 30초, 동경 128도 00분 00초
	06	북위 34도 24분 30초, 동경 127도 50분 30초
	07	북위 34도 30분 00초, 동경 127도 50분 30초
	08	북위 34도 35분 00초, 동경 127도 49분 00초
	09	북위 34도 40분 42초, 동경 127도 49분 00초
	10	북위 34도 45분 35초, 동경 127도 45분 25초
완도항 구역	▶ 완도항 항만구역의 수상구역과 다음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완도항 및 인근 해역)	
	01	북위 34도 17분 32초, 동경 126도 31분 30초
	02	북위 34도 18분 00초, 동경 126도 27분 00초
	03	북위 34도 11분 55초, 동경 126도 24분 24초
	04	북위 34도 14분 40초, 동경 126도 33분 45초
	05	북위 34도 13분 00초, 동경 127도 00분 00초
	06	북위 34도 16분 54초, 동경 127도 06분 20초
	07	북위 34도 18분 24초, 동경 127도 06분 20초
	08	북위 34도 18분 24초, 동경 127도 00분 00초
	09	북위 34도 17분 52초, 동경 126도 57분 15초
	10	북위 34도 19분 45초, 동경 126도 57분 20초
	11	북위 34도 19분 45초, 동경 126도 53분 55초

구 분	선박교통관제구역(WGS-84)	
완도항 구역	12	북위 34도 17분 00초, 동경 126도 52분 06초
	13	북위 34도 19분 33초, 동경 126도 47분 00초
	14	북위 34도 18분 46초, 동경 126도 46분 12초
	15	북위 34도 17분 17초, 동경 126도 46분 38초
	16	북위 34도 16분 30초, 동경 126도 32분 30초
	▶ 다음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청산·소안도 남방 해역)	
	01	북위 34도 08분 13초, 동경 126도 22분 51초
	02	북위 34도 05분 38초, 동경 126도 36분 12초
	03	북위 34도 08분 30초, 동경 126도 45분 15초
	04	북위 34도 13분 49초, 동경 126도 47분 19초
	05	북위 34도 13분 36초, 동경 126도 50분 34초
	06	북위 34도 08분 30초, 동경 126도 50분 52초
	07	북위 34도 08분 30초, 동경 127도 00분 00초
	08	북위 33도 59분 43초, 동경 127도 00분 00초
	09	북위 33도 59분 43초, 동경 126도 25분 39초
	10	북위 34도 03분 48초, 동경 126도 21분 00초
목포항 구역	▶ 다음 01부터 07까지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과 08부터 10까지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목포항 항만구역 내)	
	01	북위 34도 48분 51초, 동경 126도 22분 12초
	02	북위 34도 48분 48초, 동경 126도 21분 34초(정주도)
	03	북위 34도 48분 25초, 동경 126도 21분 03초(구례도)
	04	북위 34도 47분 41초, 동경 126도 20분 26초(장좌도)
	05	북위 34도 46분 55초, 동경 126도 20분 20초
	06	북위 34도 45분 34초, 동경 126도 19분 06초(달리도)
	07	북위 34도 45분 01초, 동경 126도 19분 02초(양화리)
	08	북위 34도 43분 47초, 동경 126도 19분 48초
	09	북위 34도 44분 13초, 동경 126도 20분 25초
	10	북위 34도 42분 52초, 동경 126도 22분 43초
	▶ 다음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목포항 항만구역 밖)	
	01	북위 34도 45분 34초, 동경 126도 19분 06초(달리도)
	02	북위 34도 45분 01초, 동경 126도 19분 02초(양화리)

구 분	선박교통관제구역(WGS-84)
목포항 구역	03 북위 34도 45분 45초, 동경 126도 17분 51초
	04 북위 34도 45분 24초, 동경 126도 17분 09초
	05 북위 34도 40분 33초, 동경 126도 15분 00초(작도도)
	06 북위 34도 36분 44초, 동경 126도 15분 30초(임하도)
	07 북위 34도 35분 16초, 동경 126도 17분 57초(양도/동)
	08 북위 34도 34분 54초, 동경 126도 17분 48초(양도/서)
	09 북위 34도 35분 21초, 동경 126도 14분 25초
	10 북위 34도 29분 23초, 동경 126도 10분 06초(신도)
	11 북위 34도 27분 17초, 동경 126도 06분 37초(소장도)
	12 북위 34도 25분 02초, 동경 126도 04분 46초
	13 북위 34도 26분 24초, 동경 126도 03분 48초(불도)
	14 북위 34도 27분 28초, 동경 126도 02분 32초(대소동도)
	15 북위 34도 29분 24초, 동경 126도 06분 37초(양덕도)
	16 북위 34도 33분 48초, 동경 126도 09분 10초(고사도)
	17 북위 34도 37분 28초, 동경 126도 13분 08초(마진도)
	18 북위 34도 40분 15초, 동경 126도 12분 36초(치도)
	19 북위 34도 42분 00초, 동경 126도 12분 09초
	20 북위 34도 43분 45초, 동경 126도 11분 24초(변도)
	21 북위 34도 50분 18초, 동경 126도 10분 18초(암치도)
	22 북위 34도 50분 51초, 동경 126도 13분 06초(역도)
	23 북위 34도 49분 30초, 동경 126도 19분 36초(압해도)
	24 북위 34도 46분 39초, 동경 126도 17분 24초(외달도)
군산항 구역	▶ 군산항 항만구역의 수상구역과 다음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01 북위 36도 00분 14초, 동경 126도 31분 00초
	02 북위 36도 07분 30초, 동경 126도 24분 00초
	03 북위 36도 04분 43초, 동경 126도 20분 00초
	04 북위 35도 57분 00초, 동경 126도 16분 30초
	05 북위 35도 51분 30초, 동경 126도 18분 45초
	06 북위 35도 51분 30초, 동경 126도 30분 00초
	07 북위 35도 56분 00초, 동경 126도 31분 56초
	08 북위 35도 58분 15초, 동경 126도 31분 17초

구 분	선박교통관제구역(WGS-84)	
군산항 구역	09	북위 35도 58분 39초, 동경 126도 37분 01초
	10	북위 35도 58분 14초, 동경 126도 37분 05초
	11	북위 35도 58분 15초, 동경 126도 37분 28초
	12	북위 35도 58분 40초, 동경 126도 37분 26초
	13	북위 35도 59분 39초, 동경 126도 42분 24초
	14	북위 35도 59분 06초, 동경 126도 43분 58초
	15	북위 35도 59분 16초, 동경 126도 44분 30초
	16	북위 36도 00분 01초, 동경 126도 43분 36초
	17	북위 36도 00분 31초, 동경 126도 41분 00초
	18	북위 36도 00분 33초, 동경 126도 39분 47초
	19	북위 36도 00분 24초, 동경 126도 37분 46초
통영연안 구역	▶ 다음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01	북위 34도 45분 00초, 동경 128도 10분 00초
	02	북위 34도 49분 54.46초, 동경 128도 7분 16.03초
	03	북위 34도 54분 1.32초, 동경 128도 6분 7.14초
	04	북위 34도 54분 9.26초, 동경 128도 6분 39.68초
	05	북위 34도 54분 47.75초, 동경 128도 6분 8.36초
	06	북위 34도 54분 47.75초, 동경 128도 5분 9.76초
	07	북위 34도 54분 32.67초, 동경 128도 5분 9.76초
	08	북위 34도 53분 46.51초, 동경 128도 5분 6.61초
	09	북위 34도 52분 46.35초, 동경 128도 5분 6.38초
	10	북위 34도 51분 49.48초, 동경 128도 5분 6.91초
	11	북위 34도 49분 47.69초, 동경 128도 5분 22.21초
	12	북위 34도 45분 00초, 동경 128도 5분 54초
	13	북위 34도 45분 00초, 동경 128도 00분 00초(남해도 금산 남방)
	14	북위 34도 23분 00초, 동경 128도 00분 00초(세존도 남서방)
	15	북위 34도 23분 00초, 동경 128도 47분 00초(홍도 남동방)
	16	북위 34도 45분 00초, 동경 128도 47분 00초(서이말 남동말)
울산항 구역	▶ 다음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01	북위 35도 33분 51.9초, 동경 129도 27분 28.4초
	02	북위 35도 34분 00초, 동경 129도 28분 24초(이덕서 등부표)

구 분	선박교통관제구역(WGS-84)	
울산항 구역	03	북위 35도 32분 47.1초, 동경 129도 38분 03.7초
	04	북위 35도 21분 09.6초, 동경 129도 36분 19.6초
	05	북위 35도 15분 24초, 동경 129도 31분 12.8초
	06	북위 35도 19분 46.4초, 동경 129도 18분 41.5초
부산항 구역	▶ 다음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01	북위 35도 01분 56초, 동경 128도 57분 57초(물운대 남단)
	02	북위 34도 58분 46.4초, 동경 128도 59분 22.2초(나무섬 등대)
	03	북위 34도 50분 30초, 동경 129도 02분 30초
	04	북위 34도 56분 00초, 동경 129도 15분 00초
	05	북위 35도 05분 00초, 동경 129도 20분 00초
	06	북위 35도 11분 48초, 동경 129도 13분 45초
	▶ 다음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01	북위 35도 01분 56초, 동경 128도 57분 57초(물운대 남단)
	02	북위 34도 58분 46.4초, 동경 128도 59분 22.2초(나무섬)
	03	북위 34도 50분 30초, 동경 129도 02분 30초
	04	북위 34도 45분 00초, 동경 128도 50분 00초
	05	북위 34도 55분 00초, 동경 128도 50분 00초
	06	북위 34도 58분 27초, 동경 128도 45분 22초(갈산도)
	07	북위 35도 03분 36초, 동경 128도 45분 45초(연도 서남단)
	08	북위 35도 05분 06초, 동경 128도 43분 24초(우도 남동단)
	09	북위 35도 05분 43초, 동경 128도 43분 11초(진해구 명동 신명 남단)
마산항 구역	▶ 다음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마산항, 진해항, 고현항, 안정항, 진해만해역 포함)	
	01	북위35도 05분 43초,동경128도 43분 11초(진해구 명동 신명 남단)
	02	북위35도 05분 06초, 동경128도 43분 24초(우도 남동단)
	03	북위35도 03분 36초, 동경128도 45분 45초(연도 서남단)
	04	북위34도 58분 27초, 동경128도 45분 22초(갈산도)
	05	북위34도 58분 06초, 동경128도 44분 12초(이수도 동단)
	06	북위34도 54분 53초, 동경128도 33분 51초(고현항 사두도 북단)
	07	북위34도 56분 36초, 동경128도 26분 08초(안정항 저도 동단)

구 분	선박교통관제구역(WGS-84)
마산항 구역	<div>※ 관제 제외구역</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해항 부근 부도북측 항행금지구역 ● 북위 35도 03분 12초, 동경128도 34분 03초(저도 남단)과 북위 35도 00분 45초, 동경 128도 30분 03초(호암산 동측)을 연결한 북서쪽 해상 ● 레이더가 탐지되지 않는 고현항 항내
	▶ 다음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옥포항, 장승포항, 지세포 원유기지 포함)
	01 북위34도 58분 06초, 동경128도 44분 12초(이수도 동단)
	02 북위34도 58분 27초, 동경128도 45분 22초(갈산도)
	03 북위34도 55분 00초, 동경128도 50분 00초(제9도선점 남동단)
	04 북위34도 45분 00초, 동경128도 50분 00초(지심도 부근 정박 제한구역 동단)
	05 북위34도 47분 12초, 동경128도 44분 24초(서이말 등대)
동해항 구역	<div>※ 관제 제외구역</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이더가 탐지되지 않는 옥포·장승포항 항내
	▶ 다음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동해·묵호항, 삼척항, 옥계항 해역)
	01 북위37도 40분 36.736초, 동경129도 03분 05.895초
	02 북위37도 45분 15.735초, 동경129도 04분 03.664초
	03 북위37도 44분 01.203초, 동경129도 13분 44.394초
	04 북위37도 26분 40.393초, 동경129도 24분 32.015초
	05 북위37도 21분 23.978초, 동경129도 18분 11.956초
	06 북위37도 22분 58.217초, 동경129도 15분 21.689초
	▶ 다음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호산항 해역)
	01 북위37도 15분 00초, 동경 129도 20분 30초
	02 북위37도 15분 00초, 동경 129도 29분 05초
	03 북위37도 04분 00초, 동경 129도 32분 41초
	04 북위37도 04분 00초, 동경 129도 25분 19초

구 분	선박교통관제구역(WGS-84)
포항항 구역	▶ 다음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01 북위 36도 07분 16초, 동경 129도 25분 00초(용한리 동단)
	02 북위 36도 07분 16초, 동경 129도 26분 00초(용한리 동방)
	03 북위 36도 19분 11초, 동경 129도 26분 00초(구계항 동방)
	04 북위 36도 19분 11초, 동경 129도 43분 52초(구계항 동방)
	05 북위 35도 53분 32초, 동경 129도 43분 52초(양포항 동방)
	06 북위 35도 53분 32초, 동경 129도 37분 30초(양포항 동방)
	07 북위 36도 00분 11초, 동경 129도 37분 30초(삼정항 동방)
	08 북위 36도 00분 11초, 동경 129도 34분 25초(삼정항 동단)
제주항 구역	▶ 다음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제주항 및 인근 해역)
	01 북위 33도 31분 18초, 동경 126도 32분 47초
	02 북위 33도 34분 46초, 동경 126도 46분 25초
	03 북위 33도 41분 26초, 동경 126도 40분 20초
	04 북위 33도 43분 00초, 동경 126도 29분 35초
	05 북위 33도 37분 41초, 동경 126도 20분 37초
	06 북위 33도 28분 53초, 동경 126도 18분 41초
	▶ 다음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서귀포항 강정지구 및 인근 해역)
	01 북위 33도 13분 50초, 동경 126도 29분 03초
	02 북위 33도 13분 23초, 동경 126도 39분 20초(지귀도 남방)
	03 북위 33도 08분 23초, 동경 126도 39분 20초
	04 북위 33도 08분 23초, 동경 126도 24분 49초
	05 북위 33도 13분 23초, 동경 126도 24분 49초

※ 비교: 상기 선박교통관제구역 중 레이더 음영구역은 제외한다.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별표 2]

관제대상선박(제5조 관련)

구 분 (선박교통관제구역)	관제대상선박
경인연안 구역, 태안연안 구역, 진도연안 구역, 여수연안 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다만, 내항어선은 제외한다) ● 「해사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 「해운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여객선 ● 총톤수 300톤 미만의 선박 중 「선박설비기준」 제108조의5에 따른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선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박안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 3.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4. 해양조사선·순찰선·표지선·측량선·어업지도선·시험조사선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소유·운영하는 관공선
통영연안 구역, 대산항 구역, 평택·당진항 구역, 인천항 구역, 경인항 구역, 여수·광양항 구역, 완도항 구역, 목포항 구역, 군산항 구역, 울산항 구역, 부산항 구역, 부산신항 구역, 마산항 구역, 동해항 구역, 포항항 구역, 제주항 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다만, 내항어선은 제외한다) ● 「해사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 「해운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여객선 ● 총톤수 300톤 미만의 선박 중 「선박설비기준」 제108조의5에 따른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선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박안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예선 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급수선·급유선·도선선·통선 5.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6. 해양조사선·순찰선·표지선·측량선·어업지도선·시험조사선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소유·운영하는 관공선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별표 3]

관제대상선박 이동 및 도선사 승선·하선 관제통신 방법(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제통신 시점	관제통신 내용
선박 이동	● 이동예정 10분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호출부호 ● 이동예정 시각 ● 출발지 및 목적지 ● 다음 각 호의 경우 선박의 수면상 최고높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면상 최고높이가 50미터 이상인 선박이 인천대교를 통과할 예정일 경우 2. 수면상 최고높이가 30미터 이상인 선박이 영종대교를 통과할 예정일 경우 3. 수면상 최고높이가 62미터 이상인 선박이 서해대교를 통과할 예정일 경우
	● 이동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 이동 시작 시각 ● 출발지 및 목적지
	● 이동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호출부호 ● 이동 완료 시각 및 장소
도선사 승선·하선	● 도선사가 관제대상선박에 승선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 도선사 성명 또는 약호 ● 승선 시각 및 장소 ● 목적지 ● 다음 각 호의 경우 선박의 수면상 최고높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면상 최고높이가 50미터 이상인 선박이 인천대교를 통과할 예정일 경우 2. 수면상 최고높이가 30미터 이상인 선박이 영종대교를 통과할 예정일 경우 3. 수면상 최고높이가 62미터 이상인 선박이 서해대교를 통과할 예정일 경우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 도선사가 관제대상선박에서 하선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 하선 시각 및 장소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별표 4]

선박교통관제구역별 관제대상선박 신고 방법(제7조제3항 관련)

구 분	신고시점		신고내용
경인연안 구역	진입 신고	● 관제구역 진입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호출부호 ● 통과위치 ● 입항예정 시각 및 장소(관제구역 내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에 입항하는 선박만 해당)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태안연안 구역	진입 신고	● 관제구역 진입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호출부호 ● 통과위치 ● 입항예정 시각 및 장소(관제구역 내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에 입항하는 선박만 해당)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대산항 구역	진입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제구역 진입 시 ※ 대산항·장안·보령항 관제구역으로 진입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호출부호 ● 통과 위치 ● 입항예정 시각 및 장소(관제구역 내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에 입항하는 선박만 해당)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 입항시 ● 장안서 제2입항대기 정박지에 정박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호출부호 ● 입항 시각 및 장소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진출 신고	● 출항예정 10분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호출부호 ● 출항예정 시각 및 장소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 출항 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호출부호 ● 출항 시각 및 장소 ● 목적지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구 분	신고시점		신고내용
평택·당진항 구역	진입 신고	● 관제구역 진입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호출부호, 통과위치 ● 입항예정 시각 및 장소(관제구역 내 정박지 또는 계류 시설에 입항하는 선박만 해당) ● 수면상 최고 높이(서해대교를 통과하는 수면상 최고 높이가 62미터 이상 선박만 해당)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 입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호출부호 ● 입항 시각 및 장소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진출 신고	● 출항예정 10분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호출부호 ● 출항예정 시각 및 장소 ● 수면상 최고 높이(서해대교를 통과하는 수면상 최고 높이가 62미터 이상 선박만 해당)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 출항 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호출부호 ● 출항 시각 및 장소 ● 목적지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인천항 구역	진입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제구역 진입 시 ※ 장안서 관제구역을 통과하는 선박의 경우 장안서 등표 2해리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호출부호, 통과위치 ● 입항예정 시각 및 장소(관제구역 내 정박지 또는 계류 시설에 입항하는 선박만 해당) ● 수면상 최고 높이(인천대교를 통과하는 수면상 최고 높이가 50미터 이상 선박만 해당) ● 인천대교 통과예정 시각(크루즈선 및 재화중량톤수 175,000톤 이상 300,000톤 이하 유조선만 해당) ● 북장자서 통과예정 시각(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천연 가스를 운반하는 선박만 해당)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 입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호출부호 ● 입항 시각 및 장소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구 분	신고시점		신고내용
인천항 구역	진출 신고	● 출항예정 10분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호출부호 ● 출항예정 시각 및 장소 ● 수면상 최고 높이(인천대교를 통과하는 수면상 최고 높이가 50미터 이상 선박만 해당) ● 인천대교 통과예정 시각(크루즈선 및 재화중량톤수 175,000톤 이상 300,000톤 이하 유조선만 해당) ● 복장자서 통과예정 시각(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천연 가스를 운반하는 선박만 해당)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 출항 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호출부호 ● 출항 시각 및 장소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경인항 구역	진입 신고	● 관제구역 진입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호출부호, 통과위치 ● 입항예정 시각 및 장소(관제구역 내 정박지 또는 계류 시설에 입항하는 선박만 해당) ● 갑문 도착 예정시각 ● 수면상 최고 높이(영종대교를 통과하는 수면상 최고 높이가 30미터 이상 선박만 해당)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 입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호출부호 ● 입항 시각 및 장소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진출 신고	● 출항예정 10분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호출부호 ● 출항예정 시각 및 장소 ● 목적지 ● 수면상 최고 높이(영종대교를 통과하는 수면상 최고 높이가 30미터 이상 선박만 해당)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 출항 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 출항 시각 및 장소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구 분	신고시점		신고내용
진도연안 구역	진입 신고	● 관제구역 진입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호출부호, 통과위치, 목적지 ● 입항예정 시각 및 장소(관제구역 내 정박지 또는 계류 시설에 입항하는 선박만 해당)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여수연안 구역	진입 신고	● 관제구역 진입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호출부호, 통과위치, 목적지 ● 입항예정 시각 및 장소(관제구역 내 정박지 또는 계류 시설에 입항하는 선박만 해당)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여수· 광양항 구역	진입 신고	● 관제구역 진입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호출부호, 통과위치 ● 목적지 ● 입항예정 시각 및 장소(관제구역 내 정박지 또는 계류 시설에 입항하는 선박만 해당)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 북측위치보고선(북위34도48분 26초를 지나는 위도선) 통과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통과위치, 목적지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 입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호출부호 ● 입항 시각 및 장소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진출 신고	● 출항예정 10분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 출항예정 시각 및 장소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 출항 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호출부호 ● 출항 시각 및 장소, 목적지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 북측위치보고선(북위34도48분 26초를 지나는 위도선) 통과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통과위치, 목적지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구 분	신고시점		신고내용
완도항 구역	진입 신고	● 관제구역 진입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호출부호, 통과위치 ● 목적지 ● 입항예정 시각 및 장소(관제구역 내 정박지 또는 계류 시설에 입항하는 선박만 해당)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 입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호출부호 ● 입항 시각 및 장소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진출 신고	● 출항예정 10분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 출항예정 시각 및 장소, 목적지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 출항 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호출부호 ● 출항 시각 및 장소, 목적지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목포항 구역	진입 신고	● 관제구역 진입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호출부호, 통과위치 ● 목적지 ● 입항예정 시각 및 장소(관제구역 내 정박지 또는 계류 시설에 입항하는 선박만 해당)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 입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호출부호 ● 입항 시각 및 장소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진출 신고	● 출항예정 10분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 출항예정 시각 및 장소, 목적지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 출항 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호출부호 ● 출항 시각 및 장소, 목적지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구 분	신고시점		신고내용
군산항 구역	진입 신고	● 관제구역 진입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호출부호, 통과위치 ● 목적지 ● 입항예정 시각 및 장소(관제구역 내 정박지 또는 계류 시설에 입항하는 선박만 해당)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 입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호출부호 ● 입항 시각 및 장소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진출 신고	● 출항예정 10분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 출항예정 시각 및 장소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 출항 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호출부호 ● 출항 시각 및 장소, 목적지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통영연안 구역	진입 신고	● 관제구역 진입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호출부호, 통과위치 ● 출항지, 목적지 ● 입항예정 시각 및 장소(관제구역 내 정박지 또는 계류 시설에 입항하는 선박만 해당)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 입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호출부호 ● 입항 시각 및 장소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진출 신고	● 출항예정 10분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호출부호 ● 출항예정 시각 및 장소 ● 목적지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 출항 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 출항 시각 및 장소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구 분	신고시점		신고내용
울산항 구역	진입 신고	● 관제구역 진입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호출부호 ● 출항지, 목적지 ● 진입위치 ● 입항예정 시각 및 장소(관제구역 내 정박지 또는 계류 시설에 입항하는 선박만 해당)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 입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호출부호 ● 입항 시각 및 장소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진출 신고	● 출항예정 10분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호출부호 ● 출항예정 시각 및 장소 ● 목적지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 출항 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 출항 시각 및 장소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부산항 구역	진입 신고	● 관제구역 진입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호출부호, 통과위치 ● 출항지, 목적지 ● 입항예정 시각 및 장소(관제구역 내 정박지 또는 계류 시설에 입항하는 선박만 해당)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 입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호출부호 ● 입항 시각 및 장소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진출 신고	● 출항예정 10분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호출부호 ● 출항예정 시각 및 장소 ● 목적지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 출항 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 출항 시각 및 장소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구 분	신고시점		신고내용
부산신항 구역	진입 신고	● 관제구역 진입 시	● 선박명, 호출부호, 통과위치 ● 출항지, 목적지 ● 입항예정 시각 및 장소(관제구역 내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에 입항하는 선박만 해당)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 입항 시	● 선박명, 호출부호 ● 입항 시각 및 장소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진출 신고	● 출항예정 10분 전	● 선박명, 호출부호 ● 출항예정 시각 및 장소 ● 목적지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 출항 즉시	● 선박명 ● 출항 시각 및 장소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마산항 구역	진입 신고	● 관제구역 진입 시	● 선박명, 호출부호, 통과위치 ● 출항지, 목적지 ● 입항예정 시각 및 장소(관제구역 내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에 입항하는 선박만 해당)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 입항 시	● 선박명 ● 입항 시각 및 장소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진출 신고	● 출항예정 10분 전	● 선박명, 호출부호 ● 출항예정 시각 및 장소 ● 목적지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 출항 즉시	● 선박명 ● 출항 시각 및 장소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구 분	신고시점		신고내용
동해항 구역	진입 신고	● 관제구역 진입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호출부호 ● 출항지, 목적지 ● 화물 종류 및 적재량 ● 입항예정 시각 및 장소(관제구역 내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에 입항하는 선박만 해당)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 목적지 항만구역의 수상구역 경계선 도착 2해리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 입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항 시각 및 장소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진출 신고	● 출항예정 10분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호출부호 ● 출항예정 시각 및 장소
		● 출항 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호출부호 ● 출항 시각 및 장소 ● 목적지 ● 화물 종류 및 적재량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포항항 구역	진입 신고	● 관제구역 진입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호출부호 ● 출항지, 목적지 ● 입항예정 시각 및 장소(관제구역 내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에 입항하는 선박만 해당) ● 화물 종류 및 적재량(정박지로 이동하는 경우)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 입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호출부호 ● 입항 시각 및 장소
	진출 신고	● 출항예정 10분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호출부호 ● 출항예정 시각 및 장소 ● 화물 종류 및 적재량(정박지로 이동하는 경우)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 출항 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 출항 시각 및 장소 ● 목적지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구 분	신고시점	신고내용
제주항 구역	진입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제구역 진입 시 ※ 서귀포항 강정지구 입항선박의 경우 항만구역의 수상구역 경계선 도착 1 시간 전 또는 관제구역 진입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호출부호 ● 출항지, 목적지, 통과위치 ● 입항예정 시각, 화물 종류 및 적재량(관제구역 안에 있는 항만 또는 정박지에 입항하지 않고 통과하는 선박은 제외) ● 승선인원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등대로부터 5해리 전 ※ 제주항으로 입항하는 선박만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통과위치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 입항 시
	진출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호출부호 ● 입항 시각 및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항예정 30분 전 ● 출항예정 5분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호출부호 ● 출항예정 시각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항 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호출부호 ● 출항 시각 및 장소 ● 목적지 ● 승선인원 ● 화물 종류 및 적재량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 비교:“출항”은 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 안에 있는「항만법」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정박지, 계류시설 등(이하 “계류시설 등”이라 함)에서 나가는 것을 의미하며,“입항”은 계류시설 등에 도착하는 것을 의미함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별표 5]

선박교통관제관서별 관제통신 제원(제10조 관련)

구 분		호출부호 (명칭)	관제통신 제원			운용 시간
			관제통신시설	조난·긴급·안전 통신용 채널	관제통신용 채널	
경인연안 구역		경인 연안 브이티에스 또는 Gyeongin Coastal VTS	초단파 무선전화	CH 16	CH 71	24 시간
			디지털 선택호출장치 (VHF/DSC)	CH 70	-	24 시간
태안연안 구역		태안 연안 브이티에스 또는 Taean Coastal VTS	초단파 무선전화	CH 16	CH 09	24 시간
			디지털 선택호출장치 (VHF/DSC)	CH 70	-	24 시간
대산항 구역	대산항	대산 브이티에스 또는 Daesan VTS	초단파 무선전화	CH 16	CH 12	24 시간
			디지털 선택호출장치 (VHF/DSC)	CH 70	-	24 시간
	장안 관제 구역	장안 브이티에스 또는 Jangan VTS	초단파 무선전화	CH 16	CH 67	24 시간
	보령항	보령 브이티에스 또는 Boryeong VTS	초단파 무선전화	CH 16	CH 69	24 시간
평택·당진항 구역		평택 브이티에스 또는 Pyeongtaek VTS	초단파 무선전화	CH 16	CH 10 CH 88 (예비 채널)	24 시간
			디지털 선택호출장치 (VHF/DSC)	CH 70	-	24 시간
인천항 구역		인천 브이티에스 또는 Incheon VTS	초단파 무선전화	CH 16	CH 14, 68	24 시간
			디지털 선택호출장치 (VHF/DSC)	CH 70	-	24 시간

구 분	호출부호 (명칭)	관제통신 자원			운용 시간
		관제통신시설	조난·긴급·안전 통신용 채널	관제통신용 채널	
경인항 구역	경인 브이티에스 또는 Gyeongin VTS	초단파 무선전화	CH 16	CH 09	24 시간
		디지털 선택호출장치 (VHF/DSC)	CH 70	-	24 시간
진도연안 구역	진도 연안 브이티에스 또는 Jindo Coastal VTS	초단파 무선전화	CH 16	CH 67	24 시간
		디지털 선택호출장치 (VHF/DSC)	CH 70	-	24 시간
여수연안 구역	여수 연안 브이티에스 또는 Yeosu Coastal VTS	초단파 무선전화	CH 16	CH 71	24 시간
		디지털 선택호출장치 (VHF/DSC)	CH 70	-	24 시간
여수·광양항 구역	여수 브이티에스 또는 Yeosu VTS	초단파 무선전화	CH 16	CH 10, 12, 67	24 시간
		디지털 선택호출장치 (VHF/DSC)	CH 70	-	24 시간
완도항 구역	완도 브이티에스 또는 Wando VTS	초단파 무선전화	CH 16	CH 10	24 시간
		디지털 선택호출장치 (VHF/DSC)	CH 70	-	24 시간
목포항 구역	목포 브이티에스 또는 Mokpo VTS	초단파 무선전화	CH 16	CH 14	24 시간
		디지털 선택호출장치 (VHF/DSC)	CH 70	-	24 시간
군산항 구역	군산 브이티에스 또는 Gunsan VTS	초단파 무선전화	CH 16	CH 12	24 시간
		디지털 선택호출장치 (VHF/DSC)	CH 70	-	24 시간

구 분		호출부호 (명칭)	관제통신 자원			운용 시간
			관제통신시설	조난·긴급·안전 통신용 채널	관제통신용 채널	
통영 연안 구역	통영 연안	통영 연안 브이티에스 또는 Tongyeong Coastal VTS	초단파 무선전화	CH 16	CH 69 CH 87,88 (예비 채널)	24 시간
			디지털 선택호출장치 (VHF/DSC)	CH 70	-	24 시간
	삼천포항	삼천포 브이티에스 또는 Samcheonpo VTS	초단파 무선전화	CH 16	CH 69 CH 87,88 (예비 채널)	24 시간
	통영항	통영 브이티에스 또는 Tongyeong VTS	초단파 무선전화	CH 16	CH 69 CH 87,88 (예비 채널)	24 시간
	울산항 구역	울산 브이티에스 또는 Ulsan VTS	초단파 무선전화	CH 16	CH 14	24 시간
			디지털 선택호출장치 (VHF/DSC)	CH 70	-	24 시간
부산항 구역		부산 브이티에스 또는 Busan VTS	초단파 무선전화	CH 16	CH 09, 12	24 시간
			디지털 선택호출장치 (VHF/DSC)	CH 70	-	24 시간
부산신항 구역		부산신항 브이티에스 또는 Busan new port VTS	초단파 무선전화	CH 16	CH 10	24 시간
			디지털 선택호출장치 (VHF/DSC)	CH 70	-	24 시간
마산항 구역	마산항	마산 브이티에스 또는 Masan VTS	초단파 무선전화	CH 16	CH 14	24 시간
			디지털 선택호출장치 (VHF/DSC)	CH 70	-	24 시간
	옥포항	옥포 브이티에스 또는 Okpo VTS	초단파 무선전화	CH 16	CH 67	24 시간
			디지털 선택호출장치 (VHF/DSC)	CH 70	-	24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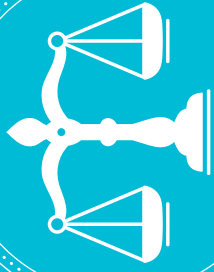
구 분		호출부호 (명칭)	관제통신 자원			운용 시간
			관제통신시설	조난·긴급·안전 통신용 채널	관제통신용 채널	
동해항 구역	동해항	동해 브이티에스 또는 Donghae VTS	초단파 무선전화	CH 16	CH 12	24 시간
			디지털 선택호출장치 (VHF/DSC)	CH 70	-	24 시간
	속초항	속초 브이티에스 또는 Sokcho VTS	초단파 무선전화	CH 16	CH 14	24 시간
			디지털 선택호출장치 (VHF/DSC)	CH 70	-	24 시간
	호산항	호산 브이티에스 또는 Hosan VTS	초단파 무선전화	CH 16	CH 14	24 시간
			디지털 선택호출장치 (VHF/DSC)	CH 70	-	24 시간
포항항 구역		포항 브이티에스 또는 Pohang VTS	초단파 무선전화	CH 16	CH 06, 12	24 시간
			디지털 선택호출장치 (VHF/DSC)	CH 70	-	24 시간
제주항 구역	제주항	제주 브이티에스 또는 Jeju VTS	초단파 무선전화	CH 16	CH 12	24 시간
			디지털 선택호출장치 (VHF/DSC)	CH 70	-	24 시간
	서귀포항	서귀포 브이티에스 또는 Seogwipo VTS	초단파 무선전화	CH 16	CH 12	24 시간

※ 비고: 별표 1의 선박교통관제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속초항, 통영항, 서귀포항의 관제통신 자원은 해당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단순 출입보고 접수 업무 용도로 사용한다.

IV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 지정 고시

135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 지정 고시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 지정 고시

[시행 2020. 7. 24.] [해양경찰청고시 제2020-4호, 2020. 7. 24., 제정.]



해양경찰청(해상교통관제과), 032-835-2786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찰교육원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의 교육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2020-4호, 2020. 7. 24.〉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V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139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144 [별표 1]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시행 2022. 1. 1.] [해양경찰청훈령 제258호, 2021. 12. 28., 일부개정.]



해양경찰청(해상교통관제과), 032-835-238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선박교통관제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상교통관제센터”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32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관서를 말한다.
2. “관제업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구역(이하 “선박교통관제구역”이라 한다)에서 운항하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선박교통관제사가 법 제18조 각 호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3. “교대근무”란 근무조를 나누거나 일정 인원을 편성하여 계획에 의한 반복 주기에 따라 교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4. “비번”이란 교대근무자가 다음 근무시작 전까지 자유롭게 쉬는 것을 말한다.
5. “휴무”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교대근무자의 누적된 피로 회복 등 건강 유지를 위하여 근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쉬는 것을 말한다.
6. “관제근무”란 선박교통관제사가 해상교통관제센터 내의 지정된 관제석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대기근무”란 관제근무 후 사무처리, 다음 업무수행의 준비, 사고 대응 등을 위하여 해상교통관제센터 내에서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또는 관제팀장의 지휘·감독하에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8. “휴게”란 선박교통관제사의 관제집중도 유지 및 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근무 중 해상교통관제센터 내에서 자유롭게 쉬는 것을 말한다.
9. “센터장”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32조제3항에 따라 관제센터 소관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의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관제팀장”이란 선박교통관제사 중 센터장이 지정한 사람으로서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대근무조의 관제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선박교통관제사”란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12. “시설행정팀장”이란 관제시설 설치·관리, 행정, 정보보호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시설담당자”란 제17조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관제시설 설치·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4. “행정담당자”란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5. “정보보호담당자”란 제17조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관제시설의 정보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소속된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규칙과의 관계)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운용시간)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운용시간은 「전파법」에서 정한 무선국 허가증에 기재된 운용시간에 따른다.

제6조(사용언어) 선박교통관제사가 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한다.

제7조(선박교통관제구역의 분리 운영) 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관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설정된 선박교통관제구역을 해상교통관제센터 별로 섹터(sector)와 관제통신용 채널(channel)로 나누어 관제할 수 있다.

제8조(선박교통관제구역 경계 관리) 지방청장은 소속 해상교통관제센터 간 선박교통관제구역이 서로 맞닿아 있거나 인접하여 해양사고 위험이 높은 경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제방법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경계를 관할하는 지방해양경찰청이 다른 경우에는 지방청장 간 협의해야 한다.

제9조(관제통신) ① 선박교통관제사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응답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교통관제사는 통신의 장애로 인하여 지정된 주파수로 직접 통화가 불가능할 때에는 휴대전화 등 다른 통신망을 이용 할 수 있다.

제10조(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교통관제구역을 통항하는 선박의 항행안전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지한 경우 또는 필요한 시간에 항행안전방송의 시행
 - 가. 기상특보 사항
 - 나.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에 관한 사항
 - 다. 항행경보에 관한 사항
 - 라. 공사 및 장애물 등으로 인한 항행제한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해상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
2. 관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에 대한 항법 관련 법규 준수여부를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선박운항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인
 - 가. 접근선박의 침로와 속력 또는 항행 방향
 - 나. 항행로와 변침점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
 - 다. 위험화물운반선, 흡수제약선, 조종불능선 및 조종제한선의 위치 등
 - 라. 위험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는 선박에 대한 경고방송
3. 유관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요청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지원 및 정보의 제공
 - 가. 「선박안전법」제68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출항정지 명령을 받은 선박에 대한 확인요청
 - 나. 태풍 내습 시 피항 선박 현황 정보의 제공
 - 다. 해양사고 발생 시 사고수습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
 - 라.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자료 입력(다만, 항만공사 등 항만운영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직원이 있을 경우 업무를 대신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선박운항통제) ① 센터장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른 선박운항통제를 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박운항을 통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도 서식에 따라 기록·유지해야 한다.

1. 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에 발효된 기상특보의 종류, 발효·해제 시각
2. 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시계(視界)
3. 선박운항통제 및 해제 시각

제12조(관제업무 절차) ① 선박교통관제사는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단계별 절차에 따라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한다. 다만, 사고 위험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체 판단에 따라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하고, 다음 단계를 시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조제2호 또는 제3호의 해역을 담당하는 선박교통관제사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의 관제업무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경비합정 출동요청) 선박교통관제사는 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관할 해양경찰서장(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을 포함한다)에게 경비합정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1. 해양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관제업무 관련 법규를 위반한 선박의 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4조(관제운영매뉴얼) ① 센터장은 관제업무, 관제시설 운용, 소속직원의 복무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및 절차를 별표 1에 따른 관제운영매뉴얼로 정하여 업무에 활용해야 한다.

- ② 센터장은 관제운영매뉴얼에 대해 법령의 제·개정, 신규 제도의 도입 등으로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개정해야 한다.
- ③ 지방청장은 연1회 이상 해상교통관제센터별 소관 관제운영매뉴얼에 대해 구성 체계, 체계적 관리 및 활용도 등을 점검하고 개선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소속직원 업무지정 등) ① 센터장은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업무처리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담당자를 지정한다. 다만, 제1호의 관제팀장은 제16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계급을 고려하여 적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관제팀장
2. 선박교통관제사
3. 시설행정팀장
4. 시설담당자
5. 행정담당자
6. 정보보호담당자

- ② 센터장은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1항 각 호의 담당자에게 다른 직무를 겸임시키거나, 다른 담당자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관제팀장의 자격) 관제팀장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중 센터장이 지정한다.

1. 선박교통관제사 중 최상위 계급인 사람
2. 관제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제3항에 따른 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이수한 사람

제17조(시설관리자의 자격) 시설담당자 및 정보보호담당자(이하 "시설관리자"라 한다)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등급 이상 자격증 또는 경력을 가지고 해양경찰청장이 시행하는 시설관리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 전자기기·통신기기·통신선로·정보기기운용·전파전자통신·무선설비·방송통신·정보처리 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2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
2. 전자·정보통신·통신선로·사무자동화·전파전자통신·무선설비·방송통신·정보처리·전자계산기제어·정보보안 산업기사
3. 전자·정보통신·전파전자통신·무선설비·방송통신·정보처리·전자계산기·전자계산기조직응용·정보보안 기사
4. 전자응용·정보통신·컴퓨터시스템응용·정보관리 기술사
5.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제18조(근무방법 및 운영기준) ① 센터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다음 달 근무계획표를 매월 작성하고 그에 따라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 ② 선박교통관제사의 근무방법은 3개조 또는 4개조로 나누어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임산부는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 ③ 센터장은 선박교통관제사가 교육·출장·휴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근무계획표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24시간 교대근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체 근무자를 지정하거나 제1항에 따른 근무계획표를 변경할 수 있다.
- ④ 센터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관제근무 시간이 주간에는 2시간, 야간에는 3시간을 초과하여 연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⑤ 센터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관제근무, 대기근무, 휴게 시간을 지정해야 한다. 이때 제4항에 따른 관제근무 시간을 고려하여 휴게 시간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 ⑥ 센터장은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번·휴무 중인 소속직원에게 비상소집 또는 보강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장은 비상소집에 동원된 소속직원에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제2항에 따라 대체휴무를 주거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⑦ 지방청장은 소속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선박교통량, 관제업무량, 근무인원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근무방법, 제4항에 따른 관제근무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인계·인수) 선박교통관제사는 근무 교대 30분 전에 출근하여 이전 근무자와 15분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인수하고 15분간 합동근무 후 교대한다.

1. 해상교통상황 등 관제업무 현황
2. 기상상태 및 특보사항
3. 관제시설 일일점검 결과 등 특이사항
4. 각종 지시사항
5. 그 밖에 관제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상황 보고 등)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해양사고 등 각종 사고 상황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사고 해역 관할 해양경찰서 종합상황실을 포함한다)과 유관기관에 보고 및 전파해야 한다. 다만, 긴급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선(先) 조치 후(後) 보고할 수 있다.

제21조(근무일지 등의 작성) ① 선박교통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내용이 포함된 근무일지와 관제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1. 근무일지: 근무자명, 근무시간, 관제장비 운용상태, 기상특보사항, 일일관제 통계, 인계·인수사항, 그 밖의 특이사항 등
2. 관제일지: 선박명, 교신시각, 선박이동사항, 항행안전 지원 및 조치사항, 담당자, 전산입력사항 등(다만, 선박교통관제사가 수기의 특성상 미처 기재하지 못한 세부사항은 필요한 경우 녹취록 등을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 ② 전자적 수단으로 근무일지를 입력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근무일지를 작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근무일지와 관제일지에 기록된 모든 항목들은 명백하게 식별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표시나 주석이 없어야 한다.
- ④ 관제일지에 작성된 항목을 정정할 경우에는 최초 작성한 선박교통관제사가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해당 글자의 중앙에 가로로 두 선을 긋고 서명한 후 정정날짜·시간을 기록해야 한다.

제22조(관제통신 녹음시설 고장 시 기록) 영 제10조제5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사는 관제통신 녹음시설의 고장 등으로 녹음 및 보존이 불가능하다고 인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제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1. 관제통신 녹음시설의 고장 시각 및 사유
2. 고장 당시 사용한 관제통신용 채널 또는 채널 변경 사유
3. 관제시설 고장 시 중단기간·통신상태·취해진 조치
4. 그 밖에 선박교통관제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정보 사항

제23조(녹음정보 등의 보존기간 및 활용) ① 관제통신 녹음정보 및 관제운영상황 녹화정보(이하 “녹음정보 등”이라 한다)와 제20조에 따른 각종 일지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음정보 등: 60일
2. 근무일지: 1년

3. 관제일자: 3년

- ② 센터장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수사 등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으로부터 녹음정보 등의 보존기간 연장을 요청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수사 등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 ③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관제통신 녹음정보를 수기(手記)로 대체한 경우에도 보존기간에 관하여 제2항을 준용한다.
- ④ 센터장은 관제통신 녹음정보 및 관제운영상황 녹화정보를 다음 각 호와 같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 1. 선박교통관제사의 직무교육
- 2. 관제사례 발표
- 3. 학술연구
- 4. 관제시설 기술개발

제24조(지도점검) ① 해양경찰청장과 지방청장은 소속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바로 조치하고 중·장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해야 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258호, 2021. 12. 28.〉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표 1] 관제운영매뉴얼 목차(제14조 관련)

■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별표 1]

관제운영매뉴얼 목차(제14조 관련)

구분	내 용	비 고
1. 운영목표 및 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목표·방침 등 	
2. 용어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의 정의 	
3. 운영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교통관제센터 조직도, 선박교통관제구역, 관제대상선박, 관제통신 ● 항만시설·도선구 현황 등 	
4. 근무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분장, 책임 및 권한, 근무방식 ● 인수인계, 당직근무 기본지침 ● 초단파무선전화, 레이더 운용 지침 	
5. 관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역별 관제지침 ● 선종별 관제지침 ● 기상별 관제지침 ● 특별상황별 관제지침 ● 법 위반선박 관제지침 및 처분절차 	
6. 해양사고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별 조치사항 ● 보고 계통도 ● 비상연락망 등 	
7. 관제시설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교통관제 운영 시스템 ● 비상발전기·무정전전원장치(UPS) 	
8. 관련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일지 ● 관제일지 ● 선박운항통제일지 	

※ 센터장은 해상교통관제센터 실정에 맞도록 상기 목차를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관제운영매뉴얼을 정할 수 있음

VI

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

147 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

163 [별표 1] ~ [별표 7]

154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1. 1.] [해양경찰청훈령 제259호, 2021. 12. 28., 일부개정.]

해양경찰청(해상교통관제과), 032-835-238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관리자”란 관제시설의 설치·관리 또는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유지보수”란 관제시설을 점검 또는 조정·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보호”란 관제시설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로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2조제3호의 사이버안전을 포함한다.
4. “조정”이란 관제시설에 설정된 값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정비”란 관제시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관제시설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소속 지방해양경찰청의 경찰공무원·일반직공무원 및 관제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규칙과의 관계) 관제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관제시설의 구분) ① 관제시설은 필수·보조·그 밖의 관제시설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수 관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교통관제 운영 시스템
2. 레이더
3. 선박자동식별장치
4. 초단파 무선전화

③ 제1항에 따른 보조 관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선전송 시스템
2. 초단파 방향탐지 시스템
3. 초단파 자동방송 시스템

④ 관제업무를 위해 설치되는 관제시설 중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지 않은 관제시설은 그 밖의 관제시설로 분류한다.

제6조(관제시설의 설치 및 검사)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관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관제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는지 검사해야 한다. 이 경우 「전파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인증을 받은 관제시설은 검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관제시설의 기술기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세부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교통관제 운영 시스템 기술기준: 별표 1
2. 레이더 기술기준: 별표 2
3. 선박자동식별장치 기술기준: 별표 3
4. 초단파 무선전화 기술기준: 별표 4

5. 무선전송 시스템 기술기준: 별표 5

6. 초단파 방향탐지 시스템 기술기준: 별표 6

7. 초단파 자동방송 시스템 기술기준: 별표 7

제8조(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 업체의 선정) 지방청장은 민간업체를 통해 관제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행능력이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관제시설의 점검·기록) ①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관제시설의 관리를 위해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 및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시점검(이하 “수시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② 센터장은 관제시설의 정기점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해상교통관제센터별 자체실정에 따라 해당 서식의 점검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1. 일일점검: 선박교통관제사를 통한 점검 실시 및 그 결과 기록(별지 제1호서식)

2. 주간점검: 시설관리자를 통한 점검 실시 및 그 결과 기록(별지 제2호서식)

3. 월간·분기점검: 유지보수업체를 통한 점검 실시 및 그 결과 기록(별지 제3호서식)

③ 센터장은 관제시설의 수시점검을 시설관리자 또는 유지보수업체를 통해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유지보수 상세 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④ 센터장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외에 해빙기, 동절기, 우기 및 태풍 등 기상변화를 고려하여 관제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관제시설의 조정·정비) 센터장은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관제시설을 점검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원래의 기능·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 및 정비를 해야 한다.

제11조(관제시설의 이력관리) ① 센터장은 해상교통관제센터 등에 설치된 관제시설의 제원 및 특이 이력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관제시설 이력카드에 기록해야 한다.

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유지보수 상세 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조정·정비를 실시한 경우

2. 관제시설의 운용을 중지하거나 중지된 경우

3. 그 밖에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제12조(예비품의 확보 및 관리) ① 센터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관제시설의 수리 등에 필요한 예비품을 확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관제시설 운용의 중요도

2. 유지보수 이력 및 장애발생 빈도

3. 관제시설의 사용기간 및 내용연수

4. 기존 운용 중인 관제시설과의 호환성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품을 확보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예비품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제13조(전산기록) 센터장은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2항의 조치사항을 전산입력으로 같음할 수 있다.

제14조(관제시설의 내용연수) ① 관제시설의 내용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관제시설은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1. 선박교통관제 운영 시스템: 10년

2. 레이더: 10년

3. 선박자동식별장치: 10년

4. 초단파 무선전화: 7년

5. 무선전송 시스템: 8년

6. 초단파 방향탐지 시스템: 10년

7. 초단파 자동방송 시스템: 10년

② 관제시설이「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15조(정보보호 대책) 센터장은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 규칙」,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안 관리·운영 지침」에 따라 관제시설의 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16조(함정 지원요청) 센터장은 관제시설의 긴급한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장(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을 포함한다)에게 함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보고) ① 센터장은 관제시설의 고장으로 관제업무가 중지된 경우 소속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관제시설을 설치하거나 관제시설의 고장으로 관제업무가 불가능한 경우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칙

〈제259호, 2021. 12. 28.〉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표 1] 선박교통관제 운영 시스템 기술기준(제7조 관련)

[별표 2] 레이더 기술기준(제7조 관련)

[별표 3] 선박자동식별장치 기술기준(제7조 관련)

[별표 4] 초단파 무선전화 기술기준(제7조 관련)

[별표 5] 무선전송 시스템 기술기준(제7조 관련)

[별표 6] 초단파 방향탐지 시스템 기술기준(제7조 관련)

[별표 7] 초단파 자동방송 시스템 기술기준(제7조 관련)

[별지 1] 일일점검 기록부

[별지 2] 주간점검 기록부

[별지 3] 월간·분기점검 기록부

[별지 4] 유지보수 상세 기록부

[별지 5] 관제시설 이력카드

[별지 6] 예비품 관리대장

■ 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1]

선박교통관제 운영 시스템 기술기준(제7조 관련)

1. 관제화면 전시 기능

- (1) 배경(바탕)화면은 국제수로기구(IHO) S-63 표준에 따라 제작한 전자해도(ENC) 데이터를 이용하여 표시되어야 한다.
- (2) 레이더 영상은 배경화면상의 전자해도와 실시간으로 중첩되어 표현되어야 한다.
- (3) 전자해도상의 각종 정보는 독립적인 레이어별로 구성되어야 하며, 레이어별로 화면표시의 On/Off 기능이 가능해야 하며 확대, 축소, 이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 (4) 전자해도 정보는 최신정보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해도자료 갱신이 가능하도록 구현되어야 한다.
- (5) 감시해역내의 모든 선박의 이동상황을 실시간 자료로 선명하게 전시되어야 한다.

2. 물표데이터 통합 기능

- (1) 연계된 모든 레이더에서 탐지한 물표와 선박자동식별장치에서 수신한 물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 (2) 물표상관관계 자동평가분석능력을 보유해야 하며, 한 레이더의 추적물표와 다른 레이더의 추적물표를 통합 비교 분석하여 동일한 물표일 때 물표에 대한 추적상황을 한 개 레이더에서 단일물표를 추적한 상황처럼 전시되어야 한다.
- (3) 통합된 정보를 각 장치에 분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 (4) 정해진 경고발생 조건을 벗어나는 대상을 감시하고 위반하였을 때는 경고가 발생 되어야 한다.
- (5) 가용성 확보를 위해 Hot/Stand-by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Active/Stand-by 방식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3. 외부센서 데이터 수집 기능

외부의 각종 센서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수집, 변환하여 관제화면에 전시할 수 있어야 한다.

4. 저장재생 기능

- (1) 선박교통관제 운영 시스템에서 처리된 신호와 자료는 관제운영 상태 기준으로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 (2) 저장된 과거의 관제운영 자료는 화면일부 또는 전체를 재생할 수 있어야 한다.
- (3) 현재시점에서 정지화면을 나타내고 재생 또는 종료를 시킬 수 있어야 한다.
- (4) 연·월·일·시를 입력하여 과거의 저장된 관제운영 자료를 자동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 (5) 항상 관제운영 화면과 초단파 무선전화 시스템을 통해 실시한 음성 통신 정보를 완전히 동기화시킨 상태로 저장 및 재생되어야 한다.

5. 선박교통관제 운영 시스템 규격 및 기능

- (1) 운영체제(OS)는 본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최신 버전이어야 한다.

- (2) 중앙 컴퓨터 통합기능
 - (가) 전체 시스템 부팅기능
 - (나) 외부 인터페이스 관리기능
 - (다) 항로감시 및 선박추적정보 관리
 - (라) 레이더 및 각종 파라미터 제어
 - (마)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실행상태감시 및 재구성시 초기화
 - (바) 중앙시간장치와의 연동 및 시간동기화
- (3) 단위별 데이터 처리기능
 - (가) 레이더 추적신호 및 지도자료 전시
 - (나) 가시 및 가청경보 제공
 - (다) 자료저장 및 재생
 - (라) 다른 위치에서의 전시를 위한 연동
- (4) 선박교통관제 운영 시스템 기능
 - (가) 20,000대 이상의 선박자료 연동
 - (나) 미확인 추적물표 탐색
 - (다) 선박추적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갱신
- (5) 데이터 적용 및 생성 기능
 - (가) 각종 파라미터 설정·입력·수정
 - (나) 항로의 지정
 - (다) 관제구역 지정
 - (라) 비디오 영상 모자이크 및 마스크(Mask) 지원
 - (마) 차트 데이터 입력 및 편집기능
- (6) 그 밖의 소프트웨어 기능
 - (가) 시스템 에러 및 모니터링 기록, 재생기능
 - (나) 유지보수용 메시지 출력 기능

■ 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2]

레이더 기술기준(제7조 관련)

1. 일반 조건

- 가. 제3호 “성능검사 절차”에서 정한 탐지능력(탐지거리, 분해능, 정확도 등)을 갖추어야 하며, 관제화면에 전시되는 상황을 기준으로 한다.
- 나. 해당 관제구역 내 탐지 가능한 선박의 식별능력을 보유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관측할 수 있어야 한다.
- 다. 전파 간섭억제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기술규격

가. 송수신기

- 1) 주파수는 X밴드 대역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세부 주파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하는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및 매년 수립하는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에 따름
- 2) 펄스 반복주파수(PRF): 3개 이상
- 3) 펄스폭: 3개 이상
- 4) 최대펄스 송신출력: 50kW 이하
- 5) 수신기 잡음지수: 4dB 이하
- 6) 송수신기 운용방식: 이중송수신 운용방식
- 7) 제어방식: 자동주파수 제어

나. 주 안테나

- 1) 안테나: X-Band
- 2) 편 파: 원형편파 또는 수평편파 또는 수직편파
- 3) 길 이: 18ft 이상
- 4) 안테나 형식: Slot Array 또는 Parabolic
- 5) 안테나 이득: 34dB 이상
- 6) 빔폭(-3dB): 수평 0.43° 이내
- 7) 안테나 회전수: 1분당 20회 이상

다. 예비 안테나

- 1) 안테나: X-Band
- 2) 편파: 원형편파 또는 수평편파 또는 수직편파
- 3) 길이: 9ft 이상
- 4) 안테나 형식: Slot Array
- 5) 안테나 이득: 30dB 이상

6) 빔폭(-3dB): 수평 0.8° 이내

7) 안테나 회전수: 1분당 20회 이상

라. 안테나 구동기

1) 일반사항: 아래의 혹독한 환경조건에도 정상 운용되어야 한다.

가) 운영온도: -30~55°C

나) 최대운영풍속: 최소 40m/s 이상(회전수 1분당 20회 이상), 최대보존풍속: 최소 75m/s 이상

2) 신뢰도: 구동부는 별도의 정비 없이 설치 후 1 년간(약 9,000시간) 운용되어야 한다.

3) 전원공급: 구동모터 AC 3상 220V, 380V, 440V

4) 연속 구동시간: 20,000시간 이상

마. 레이더 조정 시스템

1) 일반사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레이더 송수신기·안테나 또는 구동기 등을 원격 조정·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2) 자동복구 기능: 전원공급 중단 후, 복전 시 자동으로 정전 이전의 설정된 값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바. 레이더 추적장치

1) 완전한 선박교통관제 운영 시스템의 일부분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야 한다.

2) 레이더 송수신기, 안테나, 구동기와 연계되어야 하고, 연계된 레이더 신호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3) 수신한 레이더 비디오(Radar video)를 디지털 비디오 형식(Digital video format)으로 변환하여 LAN을 통한 전송을 가능하게 하고 또한 레이더 신호로부터 선박 등 목표물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이들 목표물의 위치를 자동으로 추적하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4) 디지털 비디오 출력(Digital video output)은 선박교통관제 운영 시스템으로 전송되어 처리되어야 한다.

5) 반사파나 잡음은 물표 신호처리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하며, 에러가 발생하여 재시동할 경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정상운영 모드로 변환되어야 한다.

6) 고정물표 200개, 이동물표 200개 이상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7) 레이더 입력채널: 6채널 이상

8) 추적방식: 자동 또는 수동추적

9) 입력방식: VTA 혼합방식(Video, Trigger, Azimuth) 또는 LAN방식

10) 처리방식: 실시간 처리

사. 근거리 해역을 탐지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소형 레이더는 상위 나항에서 라항까지의 기술규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3. 성능검사 절차

가. 성능검사 목적 및 방법

(1) 레이더 성능검사는 레이더 설치 시 탐지거리, 거리·방위분해능, 위치정확도의 최소 성능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2) 성능검사 시 레이더의 설정(펄스반복주파수 등)은 검사항목 별 목적에 맞게 설정하여 실시한다.

나. 레이더 탐지거리 검사

- (1) 탐지거리 검사대상은 탐지거리 기준표 비고 4의 탐지물표 형태 1~5번 중 하나에 해당하는 형태로 선정한다.
- (2) 탐지거리 검사는 기준 탐지거리에서 항해 중인 선박의 레이더 영상이 관제화면에 표시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3) 레이더 탐지거리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레이더 설치 높이	물표형태	주 안테나		예비 안테나	
		탐지거리 (해리)	해면상태	탐지거리 (해리)	해면상태
해발 20m	1	해당없음		해당없음	
	2	0.02~7.0	0~5	해당없음	
	3	0.02~8.0	0~6	0.02~7.0	0~3
	4	0.02~11.0	0~7	0.02~9.0	0~4
	5	0.02~13.0	0~8	0.02~12.0	0~5
해발 30m	1	해당없음		해당없음	
	2	0.03~8.0	0~5	해당없음	
	3	0.03~9.3	0~6	0.03~8.0	0~3
	4	0.03~12.3	0~7	0.03~10.3	0~4
	5	0.03~14.7	0~8	0.03~13.3	0~5
해발 40m	1	해당없음		해당없음	
	2	0.04~9.0	0~5	해당없음	
	3	0.04~10.7	0~6	0.04~8.0	0~3
	4	0.04~13.7	0~7	0.04~11.7	0~4
	5	0.04~16.3	0~8	0.04~14.7	0~5
해발 50m	1	해당없음		해당없음	
	2	0.05~10.0	0~5	해당없음	
	3	0.05~12.0	0~6	0.05~10.0	0~3
	4	0.05~15.0	0~7	0.05~13.0	0~4
	5	0.05~18.0	0~8	0.04~16.0	0~5
해발 60m	1	해당없음		해당없음	
	2	0.06~10.6	0~5		
	3	0.06~13.0	0~6		
	4	0.06~16.0	0~7		
	5	0.06~19.0	0~8		
해발 70m	1	해당없음			
	2	0.07~11.2	0~5		
	3	0.07~14.0	0~6		
	4	0.07~17.0	0~7		
	5	0.07~20.0	0~8		

레이더 설치 높이	물표형태	주 안테나		예비 안테나	
		탐지거리 (해리)	해면상태	탐지거리 (해리)	해면상태
해발 80m	1	해당없음		해당없음	
	2	0.08~11.8	0~5		
	3	0.08~15.0	0~6		
	4	0.08~18.0	0~7		
	5	0.08~21.0	0~8		
해발 90m	1	해당없음			
	2	0.09~12.4	0~5		
	3	0.09~16.0	0~6		
	4	0.09~19.0	0~7		
	5	0.09~22.0	0~8		
해발 100m	1	해당없음			
	2	0.10~13.0	0~5		
	3	0.10~17.0	0~6		
	4	0.10~20.0	0~7		
	5	0.10~23.0	0~8		
해발 110m	1	해당없음			
	2	0.11~16.3	0~5		
	3	0.11~19.1	0~6		
	4	0.11~22.6	0~7		
	5	0.11~25.3	0~8		
해발 120m	1	해당없음			
	2	0.12~16.9	0~5		
	3	0.12~19.8	0~6		
	4	0.12~23.4	0~7		
	5	0.12~25.6	0~8		
해발 130m	1	해당없음			
	2	0.13~17.4	0~5		
	3	0.13~20.5	0~6		
	4	0.13~24.1	0~7		
	5	0.13~25.9	0~8		
해발 140m	1	해당없음			
	2	0.14~18.0	0~5		
	3	0.14~21.1	0~6		
	4	0.14~24.9	0~7		
	5	0.14~26.2	0~8		
해발 150m	1	해당없음			
	2	0.15~18.5	0~5		
	3	0.15~21.8	0~6		
	4	0.15~25.6	0~7		
	5	0.15~26.5	0~8		

레이더 설치 높이	물표형태	주 안테나		예비 안테나	
		탐지거리 (해리)	해면상태	탐지거리 (해리)	해면상태
해발 160m	1	해당없음		해당없음	
	2	0.16~19.1	0~5		
	3	0.16~22.5	0~6		
	4	0.16~26.4	0~7		
	5	0.16~26.8	0~8		
해발 170m	1	해당없음			
	2	0.17~19.6	0~5		
	3	0.17~23.2	0~6		
	4	0.17~27.1	0~7		
	5	0.17~27.1	0~8		
해발 180m	1	해당없음			
	2	0.18~16.6	0~5		
	3	0.18~19.9	0~6		
	4	0.18~27.1	0~7		
	5	0.18~26.6	0~8		
해발 190m	1	해당없음			
	2	0.19~13.5	0~5		
	3	0.19~16.5	0~6		
	4	0.19~27.1	0~7		
	5	0.19~26.2	0~8		
해발 200m	1	해당없음			
	2	0.20~10.5	0~5		
	3	0.20~13.2	0~6		
	4	0.20~27.1	0~7		
	5	0.20~25.7	0~8		
해발 210m	1	해당없음			
	2	0.21~7.4	0~5		
	3	0.21~9.8	0~6		
	4	0.21~27.1	0~7		
	5	0.21~25.3	0~8		
해발 220m	1	해당없음			
	2	0.22~4.4	0~5		
	3	0.22~6.5	0~6		
	4	0.22~27.1	0~7		
	5	0.22~24.8	0~8		
해발 230m	1	해당없음			
	2	0.23~4.4	0~5		
	3	0.23~6.6	0~6		
	4	0.23~26.9	0~7		
	5	0.23~25.0	0~8		

레이더 설치 높이	물표형태	주 안테나		예비 안테나	
		탐지거리 (해리)	해면상태	탐지거리 (해리)	해면상태
해발 240m	1	해당없음		해당없음	
	2	0.24~4.5	0~5		
	3	0.24~6.6	0~6		
	4	0.24~26.8	0~7		
	5	0.24~25.2	0~8		
해발 250m	1	해당없음			
	2	0.25~4.5	0~5		
	3	0.25~6.7	0~6		
	4	0.25~26.6	0~7		
	5	0.25~25.4	0~8		
해발 260m	1	해당없음			
	2	0.26~4.6	0~5		
	3	0.26~6.7	0~6		
	4	0.26~26.4	0~7		
	5	0.26~25.6	0~8		
해발 270m	1	해당없음			
	2	0.27~4.6	0~5		
	3	0.27~6.8	0~6		
	4	0.27~26.2	0~7		
	5	0.27~25.8	0~8		
해발 280m	1	해당없음			
	2	0.28~4.7	0~5		
	3	0.28~6.8	0~6		
	4	0.28~26.1	0~7		
	5	0.28~26.1	0~8		
해발 290m	1	해당없음			
	2	0.29~4.7	0~5		
	3	0.29~6.9	0~6		
	4	0.29~25.9	0~7		
	5	0.29~26.3	0~8		
해발 300m	1	해당없음			
	2	0.30~4.8	0~5		
	3	0.30~6.9	0~6		
	4	0.30~25.7	0~7		
	5	0.30~26.5	0~8		

(비고)

1. 비가 내리지 않는 쾌청한 날 기준임
2. 레이더 설치높이는 설치장소 지면의 해발고와 구조물(철탑 등)의 높이를 합산한 높이(m)를 말한다.

3. 해면상태의 파고 높이는 아래와 같다.

해면상태	평균파고(m)	최대파고(m)
0	0.0	0.0
1	0.1	0.2
2	0.3	0.5
3	0.7	1.2
4	1.3	2.2
5	2.0	3.3
6	2.9	4.8
7	3.9	6.5
8	5.1	8.5

4. 물표 형태는 아래 기준을 참조하여 유사한 물표를 탐지대상 선박으로 선정한다.

탐지 물표 형태	형상	레이더 반사면적	해발고
1	레이더 반사기가 없는 항행지원, 최소 4 m 길이의 선외 모터가 달린 소형 개방형 보트, 소형 고속선 등과 유사한 것들	1m ²	1m
2	소형 어선, 범선 및 스피드보트	3m ²	2m
3	레이더 반사기가 달린 항로표지	10m ²	3m
4	소형 강선, 어선 및 순찰선	100m ²	5m
5	소형 연안선 및 대형 트롤선	1,000m ²	8m
6	대형 연안선, 벌크선 및 화물선	10,000m ²	12m
7	컨테이너선 및 유조선	100,000m ²	18m

5. 레이더 설치높이가 300m를 초과하는 경우 레이더 설치업체로부터 탐지물표 형태별 탐지성능 시뮬레이션 자료를 제출 받아 활용할 수 있다.

6. 상기 표에도 불구하고 레이더 탐지구역이 육지에 둘러싸여 있는 등 최대 탐지거리 성능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목표 탐지구역을 정하고 그 구역 내에서 가장 원거리 지점을 향해하는 선박 또는 레이더 반사기탐지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거리·방위분해능 검사

(1) 일반 조건

- (가) 분해능 검사는 선박 2척 또는 1척의 선박과 고정된 레이더 반사기를 이용해야 하며, 검사에 이용되는 선박과 레이더 반사기를 탐지대상이라 한다.
- (나) 일정 간격을 두고 해상에 위치한 탐지대상이 관제화면에 2개 물표로 분리되어 전시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검사한다.
- (다) 탐지대상은 “나. 레이더 탐지거리 검사”의 탐지거리 기준표 비고 4의 탐지물표 형태 1~3번 중 하나에 해당하는 형태로 선정한다.

(2) 거리분해능 검사

- (가) 탐지대상은 선박교통 상황 및 해상 안전 등 현장 실정을 감안하여 레이더로부터 5해리 미만, 5~20해리, 또는 20해리 초과 등 3개 구간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위치하도록 한다.
- (나) 탐지대상 간 거리는 아래 표에 따른다.

레이더로부터 탐지대상까지의 거리	탐지대상 간 거리	
	주 안테나	예비 안테나
5해리 미만	20m	25m
5~20해리	60m	75m
20해리 초과	100m	해당없음

* 수신전계 강도: -6dB

(3) 방위분해능 검사

- (가) 탐지대상은 선박교통 상황 및 해상 안전 등 현장 실정을 감안하여 안전 수역에 위치하도록 한다.
- (나) 탐지대상 간 거리는 아래 계산식과 같이 계산하여 위치하도록 한다.

- 주 안테나

$$\text{탐지대상 간 거리} = \text{레이더로부터 거리(m)} \times \sin(\theta/2) \times 2$$

* 다만, 상기 계산식에 의한 거리가 20m 미만인 경우, 탐지대상 간 거리는 20m로 한다. ($\theta = 0.6^\circ$)

- 예비 안테나

$$\text{탐지대상 간 거리} = \text{레이더로부터 거리(m)} \times \sin(\theta/2) \times 2$$

* 다만, 상기 계산식에 의한 거리가 25m 미만인 경우, 탐지대상 간 거리는 25m로 한다. ($\theta = 1.0^\circ$)

라. 물표위치 정확도 검사

(1) 일반 조건

- (가) 물표위치 정확도 검사는 고정된 항로표지를 이용해야 한다.
- (나) 고정된 항로표지의 실제 위치와 관제화면의 레이더 영상의 위치를 비교하여 거리 및 방위가 오차 허용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검사한다.
- (2) 실제 위치는 해도(전자해도 포함)에서 레이더 위치로부터 고정된 항로표지까지의 거리 및 방위를 측정한다.

(3) 레이더 영상의 위치는 레이더 위치로부터 관제화면의 고정된 항로표지 물표의 레이더 영상 중심까지의 거리 및 방위를 측정한다.

(4) 오차 허용 범위

(가) 주 안테나

- 거리 정확도 오차 허용 범위(m) = 레이더로부터 거리(m) × 0.2%

* 다만, 상기 계산식에 의한 오차 허용 범위(m)가 10m 미만인 경우, 오차 허용 범위는 10m로 한다.

- 방위 정확도 오차 허용 범위(m) = 레이더로부터 거리(m) × $0.35^\circ \times (\pi/180^\circ)$

* 다만, 상기 계산식에 의한 오차 허용 범위(m)가 10m 미만인 경우, 오차 허용 범위는 10m로 한다.

(나) 예비 안테나

- 거리 정확도 오차 허용 범위(m) = 레이더로부터 거리(m) × 0.50%

* 다만, 상기 계산식에 의한 오차 허용 범위(m)가 15m 미만인 경우, 오차 허용 범위는 15m로 한다.

- 방위 정확도 오차 허용 범위(m) = 레이더로부터 거리(m) × $0.50^\circ \times (\pi/180^\circ)$

* 다만, 상기 계산식에 의한 오차 허용 범위(m)가 15m 미만인 경우, 오차 허용 범위는 15m로 한다.

■ 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3]

선박자동식별장치 기술기준(제7조 관련)

1. 일반 조건

- 가. 본 시설은 관제대상선박의 위치, 속도 등 정보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 나.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으로 개설허가 가능해야 하며, 적합인증을 받은 무선설비여야 한다.
- 다. 161.975MHz와 162.025MHz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야 한다.
- 라. 직접 또는 원격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 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4]

초단파 무선전화 기술기준(제7조 관련)

1. 일반 조건

- 가. 본 시설은 관제대상선박과 음성통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나.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으로 개설허가 가능해야 하며, 적합인증을 받은 무선설비여야 한다.
- 다.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별표 1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야 한다.
- 라. 직접 또는 원격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 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5]

무선전송 시스템 기술기준(제7조 관련)

1. 일반 조건

원격지의 레이더, 초단파 방향탐지 시스템 및 그 밖의 관제시설에서 획득한 정보를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최대한 양호한 신호를 전송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2. 기술규격

가. 주파수 범위

- (1) 8GHz: 8275.02~8343.33MHz(8426.634~8494.944MHz)
- (2) 18GHz: 18.58~18.60GHz(18.91~18.94 GHz) 또는 18.82~18.85 GHz(19.16~19.19GHz)

나. 송신출력

- (1) 8GHz 대역: +24dBm 이상
- (2) 18GHz 대역: +17dBm 이상

다. 수신감도

- (1) 8GHz 대역: -71dBm 이하
- (2) 18GHz 대역: -77dBm 이하

라. 주파수 안정도

- (1) 8GHz 대역: $\pm 10\text{ppm}$
- (2) 18GHz 대역: $\pm 10\text{ppm}$

마. 채널 밴드폭: 관계기관 허가조건

바. 전송방법: 양방향 협대역 디지털 전송 방식

사. 이중화: Hot/Stand-by 방식으로 구성

■ 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6]

초단파 방향탐지 시스템 기술기준(제7조 관련)

1. 일반 조건

가. 본 시스템은 교신 중인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선박교통관제 운영 시스템과 연동되어 관제화면에 방향표시선이 표시되어야한다.

나.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채널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오차수정이 용이해야 한다.

2. 기술규격

가. 주파수 범위: 156~162MHz

나. 주파수 선택방식: 전채널 버튼 조작 또는 프로그램 조작

다. 주파수 저장: 58채널 이상

라. 채널수: 10채널 이상

마. 주파수 간격: 25kHz

바. 정확도: 3° 이내

사. 수신감도: 5 μ V/m 이상

아. 응답속도: 400ms 이하

■ 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7]

초단파 자동방송 시스템 기술기준(제7조 관련)

1. 일반 조건

- 가. 단말기에 입력한 국문 또는 영문 문자(Text)를 음성 합성하여 초단파 무선전화를 통해 즉시 또는 원하는 시각에 방송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나. 방송채널과 방송간격(초 단위) 및 방송횟수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다. 호출채널에서 본 방송채널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할 수 있도록 호출방송과 본 방송 채널을 각각 설정할 수 있어야 하고, 호출 방송 문구와 본 방송 문구를 따로 입력할 수 있어야 하며, 호출방송이 끝나면 자동으로 채널 변경 및 본 방송을 송출할 수 있어야 한다.
- 라. 호출방송에서 안내방송 송출 시까지 대기 시간을 초 단위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마. 입력한 국문 또는 영문 문자를 저장하고 나중에 이를 불러내어 수정하고 원하는 파일명으로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 바. 방송 시각별로 방송 문구 저장파일명을 따로 저장하여 나중에 어떤 방송이 몇시에 몇회 방송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사. 방송 전 시험청취 할 수 있도록 단말기에서만 청취할 수 있는 시험방송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아. 자동방송장치에 연결되는 초단파 무선전화는 「전파법」에 따라 적합인증을 받은 무선설비여야 하며, 해상교통 관제센터에서 직접 또는 원격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 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일일점검 기록부

□ 점검장소:

□ 점검일시: 년 월 일

□ 점 검 자: (서명)

□ 확 인 자: (서명)

구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비고
선박교통관제 운영 시스템	- 레이더, AIS 등 관제정보 정상 전시 여부		
	- 재현장치 정상 재생 여부		
	- GPS 시간 일치 여부 (업무용 내부망 PC 시간과 일치여부)		
초단파 무선전화	- 초단파 무선전화 리모트기 정상 송수신 여부		
	- VHF-DSC 상태 확인		
초단파 자동방송 시스템	- 자동방송장치 정상 작동 여부		
그 밖의 관제시설	- 기상정보 정상 전시 여부		
	- 폐쇄회로 텔레비전(관제용, 보안용) 영상 정상 전시, 카메라 회전· 화면확대축소·초점 제어 가능 여부		
	- 원격감시제어장비 이상 알람 발생 여부		
	- Port-Mis, V-pass, 상황전파, 통합신고처리 시스템 등 기타 시스템 정상작동 여부		
* 특기사항			

※ 점검결과는 정상(○), 의심(△), 이상(×)로 표현

※ 해상교통관제관제센터별 실정에 따라 점검사항을 변경할 수 있음

■ 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2면)

구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비고
선박교통관제 운영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집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편집상태 기능 점검 - 시스템 상태 및 소프트웨어 점검 - 마스크 기능 점검 - 전자해도 편집 및 오버레이 기능 점검 - 데이터 송출 시험 점검 		
레이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테나 및 구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어오일점검 및 보충(이물질제거 포함) - 편파 점검 및 커플러 점검 - 기어회전상태 및 마모상태 점검 - 도파관 및 피더(Feeder) 점검(부식 및 결선상태 스위치변환 점검포함) - 접촉부위 크리닝 및 배선 점검(Rotating Pulse, 커넥터 점검 포함) - 디하드레이터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수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펄스별 주파수 측정 - 변조부 점검 - 송신부 점검 - 수신부 점검 - 입·출력부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모니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압부 및 휘선 포커스 점검 - 스위프(Sweep) 및 비디오 증폭기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이더 추적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세서 상태 점검 - 레이더 파라미터 점검 - 신호 입·출력 레벨 측정 - 각단 전원측정 점검(카드포함) - 케이블 및 커넥터 점검 		

■ 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3면)

구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비고
레이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격 제어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펄스 및 송수신기 절체시험 - 시스템 연동상태 점검 - 회전부 표시기점검 및 안테나 제어시험 - 송수신기 전환시험 및 아날로그 제어상태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이더 변·복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출력 신호(비디오, 트리거, 방위) 점검 		
선박자동 식별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상태 점검 - 송신부 점검 - 수신부 점검 - 변조부 점검 - 입·출력부 점검 - GPS 신호 수신 상태 점검 - 안테나 케이블 상태 점검 - 안테나 보정상태 및 탐지방향 점검 - 접지 연결 상태 점검 		
초단파 무선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테나 점검 - 회로 결선상태 점검 - 표시부 및 주파수선택기능 점검 - RF 모듈 점검 - 원격제어 점검 - 공중선출력 및 주파수 측정, 교정 - Duplex 공중선 결합기 점검 - 밴드패스필터 점검 - 주파수 프로그램 설정 및 점검 		
무선전송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테나 점검 - 전원부 측정 및 점검 - 내부 결선상태 점검(S/W 포함) - 패널 점검 - 대역폭 및 송신출력 측정 		

■ 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4면)

구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비 고
초단파 방향탐지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테나 점검 - AM, FM 절체시험 및 레벨점검 - 수신기와 제어프로세스카드 및 드라이버 전환 보드 점검 - AF 및 DF 출력 조정 점검 		
그 밖의 관제시설	폐쇄회로 텔레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메라 점검 - 팬/틸트 점검 - 컨트롤러 점검 - 저장장치 점검 		
	기상관측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향, 풍속, 기압, 온도, 습도, 시정계 점검 - 데이터로거 동작상태 점검 - 원격지 수신데이터 점검 		
	네트워크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버, PC 등 점검 - 라우터, 스위치, 허브 등 점검 		
* 특기사항				

※ 점검결과는 정상(○), 의심(△), 이상(×)로 표현

※ 해상교통관제관제센터별 실정에 따라 점검사항을 변경할 수 있음

■ 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유지보수 상세 기록부

구 분	유지보수 일시	유지보수 장소	시스템 및 장비 명칭	유지보수 내용	비 고

※ 구분은 점검, 조정, 정비로 기재

■ 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대장번호		관제시설 이력카드				
시스템명				장비명		
취 득	회 계 별	취득일자	자산번호	금액(원)	내용연수	비 고
제 원	제조사			일련번호		
	모델명			설치장소		
	인증확인서			세부제원		
	장비설명					
시공업체	업체명	사업명		연락처	설치일자	
장비사진						
특이사항 발생 일자	유지보수 일자	유지보수 업체	유지보수 금액	유지보수 내역	비고	

사진

[illegible]

VII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 177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 181 [별표 1] ~ [별표 7]
- 188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1. 1.] [해양경찰청훈령 제260호, 2021. 12. 28., 일부개정.]



해양경찰청(해상교통관제과), 032-835-278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이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이하 “선박교통관제사”라 한다)를 육성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 등 실습 장비 및 전문교수인력을 갖추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교육기관을 말한다.
2. “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교육을 말한다.
 - 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교육과 보수교육
 - 나. 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
 - 다. 현장직무교육 강사 양성교육
3. “직무교육”이란 제2호 외의 교육으로서,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선박교통관제사, 시설관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4. “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이란 관제팀장으로서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갖추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5. “현장직무교육(On The Job Training: OJT)”이란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현장직무교육 강사의 지도 아래 실무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 교육을 말한다.
6. “현장직무교육 강사 양성교육”이란 제5호에 따른 현장직무교육을 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규칙과의 관계) 선박교통관제사 교육과 직무교육에 관한 세부사항 및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 지정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해양경찰청장은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소속된 직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선박교통관제사 교육 및 직무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5조(전문교육기관 지정 심의위원회 구성) 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3항, 제5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 지정 심사 등을 위해 해양경찰청에 “전문교육기관 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내부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경비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내부위원: 해양경찰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외부위원: 선박교통관제 교육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상교통관제과 교육훈련계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은 의결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해양경찰청장에게 현장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신청기관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7조(현장점검) ① 해양경찰청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제6조제4항에 따른 현장점검 요청이 있는 경우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 지정 신청기관에 대하여 교육시설 현황 등 지정기준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을 할 경우 체계적인 점검을 위하여 점검반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반장과 점검반원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를 점검반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점검반 구성·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선박교통관제사 교육) ① 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은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와 국제항로표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ighthouse Authorities: IALA)에서 권고한 교육과정, 교육과목 및 교육기간 등을 표준으로 한다.

② 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제9조(기본교육 및 증서발급) ① 선박교통관제사 기본교육의 교과목은 별표 1과 같으며, 교육기간은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업무(이하 “선박교통관제업무”라 한다)를 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교육을 포함하여 30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제18조에 따른 평가기준을 통과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선박교통관제사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나누어 실시한 경우 최종 평가를 실시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해당 증서를 발급한다.

제10조(보수교육 및 증서발급) ① 선박교통관제사 보수교육의 교과목은 별표 2와 같으며, 교육기간은 이론과 실습교육을 포함하여 6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제18조에 따른 평가기준을 통과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교통관제사 보수교육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1조(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 및 증서발급) ①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교육”이란 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말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선박교통관제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선박교통관제사
2. 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관제팀장

③ 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의 교과목은 별표 3과 같으며, 교육기간은 선박교통관제업무에 관한 고급이론과 실습교육을 포함하여 6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제18조에 따른 평가기준을 통과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선임선박교통관제사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2조(현장직무교육 강사 양성교육 및 증서발급) 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업무 경력 5년 이상인 선박교통관제사에게 현장직무교육 강사 양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장직무교육 강사 양성교육의 교과목은 별표 4와 같으며, 교육기간은 3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제18조에 따른 평가기준을 통과한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직무교육 강사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3조(현장직무교육강사 지정) ① 센터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현장직무교육 강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현장직무교육 강사를 지정해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정통하며 최소한 3년 이상의 선박교통관제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을 현장직무교육 강사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현장직무교육 대상 및 교육기간)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선박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현장직무교육 강사로부터 현장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선박교통관제업무 수행을 위해 전입한 사람
2. 2년 이상 선박교통관제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선박교통관제사
- ② 현장직무교육 교과목은 별표 5와 같으며, 교육기간은 이론과 실습교육을 포함하여 총 105시간 이상으로 한다.
- ③ 해상교통관제센터로 전입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35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으면 제2항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최근 5년 이내 선박교통관제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제11조제4항에 따라 선임선박교통관제사 증서를 발급받은 사람

제15조(현장직무교육의 방법 및 기록유지) ① 현장직무교육 강사는 해상교통관제센터 자체실정에 따라 최적의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강의·토의·사례연구·실기실습 및 현장 견학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교육 및 평가를 해야 한다.

- ② 현장직무교육 강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현장직무교육일지를 작성하여 교육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6조(직무교육의 운영)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소속된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직무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관리자 직무교육: 센터장, 관제팀장 및 시설행정팀장을 대상으로 하는 별표 6에 따른 교육
2. 시설관리자 직무교육: 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표 7에 따른 교육
3.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 및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교육 평가) ① 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의 평가는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에서 별도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9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기본교육을 2개 이상의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에서 나누어 실시할 경우 평가점수는 각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한 교육 시간에 비례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 ③ 제15조제1항의 현장직무교육의 평가는 제18조의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제18조(평가 기준) 영 제11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선박교통관제사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생은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80%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2. 평가는 총 100% 기준으로 이론평가 50%, 실습평가(어학평가 포함) 30%, 교육참여도 평가 20%로 나눈다.
3. 평가결과 평균점수 60점 이상을 수료기준으로 한다.(다만, 40점 미만의 과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4. 불합격자는 전체과목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19조(선박교통관제사 증서기록부 발급 및 관리) 해양경찰청장은 제8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선박교통관제사 증서기록부를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선박교통관제사 증서기록부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20조(교육시간의 인정) 이 규칙에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평가가 있는 교육의 경우 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부처지정학습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직장훈련의 능력개발 집합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0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거나 이수 중인 사람은 이 규칙에 의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별표 / 서식

- [별표 1] 선박교통관제사 기본교육 교과목(제9조제1항 관련)
- [별표 2] 선박교통관제사 보수교육 교과목(제10조제1항 관련)
- [별표 3] 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 교과목(제11조제3항 관련)
- [별표 4] 현장직무교육 강사 양성교육 교과목(제12조제2항 관련)
- [별표 5] 현장직무교육 교과목(제14조제2항 관련)
- [별표 6] 관리자 직무교육 교과목(제16조제1항제1호 관련)
- [별표 7] 시설관리자 직무교육 교과목(제16조제1항제2호 관련)
- [별지 1] 선박교통관제사 증서
- [별지 2] 선박교통관제사 보수교육 증서
- [별지 3] 선임선박교통관제사 증서
- [별지 4] 선박교통관제사 현장직무교육 강사 증서
- [별지 5] 현장직무교육일지
- [별지 6] 선박교통관제사 증서기록부
- [별지 7] 선박교통관제사 증서기록부 발급대장

■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선박교통관제사 기본교육 교과목(제9조제1항 관련)

과 목	과 목 내 용
언어학	언어구조, 정보수집, 표준문장, 선박교통관제용 메시지 설계
교통관리학	법적요건, 권한과 책임, VTS 환경, 수로와 교통관리 이론, 교통 감시와 조직
관제설비학	통신, 레이더, 오디오, 비디오, 센서, 초단파 방향탐지 시스템(VHF-DF), 추적시스템, 장비 성능 감시, 기술 향상
항해학	해도작업, 충돌방지규칙, 항로표지, 항해설비(선박용), 선상지식, 항만운영 및 그 밖의 연관 서비스
통신 협조	일반통신기술, 통신, 기록관리
초단파(VHF) 무선통신	실습과 절차, VHF 전파시스템과 선박교통관제 전파설비의 운용, 수색 및 구조(SAR)를 포함한 통신절차
인간학	개인간 상호작용과 인간관계기술, 책임과 신뢰
비상관제	국내 및 국제규칙, 비상대응, 사고조치와 우선순위, 관계 기관과의 협조, 비상상황의 기록 활동, 비상상황에서의 안전통항유지, 내외부 비상상황

■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선박교통관제사 보수교육 교과목(제10조제1항 관련)

과 목	과 목 내 용
언어학	선박교통관제용 메시지 설계 및 적용
교통관리학	선박교통관제의 법적요건과 환경, 해상교통의 감시와 조직
관제설비학	레이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폐쇄회로용 텔레비전(CCTV) 등 각종 센서의 운용, 장비 성능 감시 및 유지
초단파(VHF) 무선통신	VHF 통신 및 선박교통관제 전파설비 운용, 수색 및 구조(SAR) 및 비상통신에 관한 절차
인간학	리더십, 의사소통 기술, 인간관계 기술 및 책임
비상관제	비상시 대응조치와 우선순위, 비상계획의 목적과 상세계획, 비상계획의 실행

■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 교과목(제11조제3항 관련)

과 목	과 목 내 용
항해학	선박교통관제에 사용되는 데이터, 해사 관련 기구, 교통·항만관리, 위험화물운반선 관리, 오염통제
관제설비학	장비와 시스템 운용, 유지보수 절차, 장비의 다중화
인간학	리더십, 의사소통 기술, 스트레스 관리
비상관제	비상계획의 상세와 목적, 비상계획의 실행, 사고 대응, 특수상황, 책임의 위임
관제행정학	교통관리 계획 및 구성, 해상교통관제센터 및 관제사 실적 관리, 보고서의 준비(내부 및 외부), 기록 유지
관제법학	국제법상의 선박교통관제 법적근거, 법적책임,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령

■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

현장직무교육 강사 양성교육 교과목(제12조제2항 관련)

과 목	과 목 내 용
관제센터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 교육강사의 기대, 청중·문화 기대의 다양성
교육생 특별프로그램 준비	학습 개념 및 모델에 관한 심화학습, 청중과 관련된 지도기술, 의사소통 기술
현장직무 교육의 진행	지도 및 발표, 개인 교습, 지속적인 멘토링
교육생 평가	서면 및 구두 평가, 실무능력 평가, 근접한 개인감독에 의한 현장직무의 전달
교육의 이수	교육생 및 교육강사로부터 피드백 획득, 선박교통관제 분야 지식 공유

■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별표 5]

현장직무교육 교과목(제14조제2항 관련)

과 목	과 목 내 용
선박교통관제 규정	선박교통관제 관련 국제협약·권고·지침, 국내법령 및 하위법령, 운영매뉴얼 및 관제절차, 통신호출·응답 및 비상주파수, 업무용 주파수의 활용 방법 등
지형학과 지리학	통항분리, 좁은수로, 항로 등 해상환경 특성, 정박지, 선석 등 항만 시설현황 및 특성 항로표지 등 항해지원설비의 현황 및 특성
기상학적인 특성	조석과 조류, 기후와 날씨
선박통항특성	선박통항밀도, 통항유형, 화물의 종류
관제시설 운영	선박통항·항만운영에 관한 항행안전정보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디브리핑을 활용한 선박통항량 및 해양사고내용 분석
당직책임	관제사와 선임관제사의 의무, 선박통항·항만운영 등 정보관리, 섹터별·근무조별 업무 인수인계 절차
선박교통관제 업무	관제구역내 선박통항관리 방법, 민원, 언론 등과의 업무처리 방법
특수환경	여객, 위험화물의 이동 등 선박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 요소, 비상 상황 대응능력
선박교통관제 지원 관련 업무	예선·도선 등 항만운영정보서비스 관련 업무, 해상에서의 수색과 구조업무, 기상관련 내용 등
비상절차	수색과 구조업무에서 관제센터의 역할, 비상시 보고 및 상황별 운영절차, 비상 통신망 운영
현장체험훈련	관제구역 내 항로 답사, 센터 및 레이더 사이트 시설물 현황 파악 및 현장답사 등

■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별표 6]

관리자 직무교육 교과목(제16조제1항제1호 관련)

과 목	과 목 내 용
조직운영	선박교통관제 목적 및 목표 설정, 운영에 관한 품질 관리 및 개선, 환경변화 대처 및 발전, 대내외 홍보방법 및 대응
관제법학	선박교통관제 관련 국제협약·권고·지침, 현행 국내법령 및 하위법령, 운영매뉴얼, 선박교통관제 법적책임 및 권한
자원관리	선박교통관제 인적자원·재정·기술 관리 및 조정, 관제사 교육훈련 관리, 관제사 업무수행능력 감시
비상상황	관제구역 비상절차 계획 및 개발, 표준운영절차 검토 및 개정, 사고발생시 증거제공 절차 준수 및 기록유지, 관계기관과의 협조
인간학	리더십, 의사소통기술, 인간관계 기술 및 책임, 직원 불만 및 갈등상황 대처,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관제설비학	선박교통관제 시스템 구성, 유지보수 절차, 장비오류 보고 및 수정, 기록유지 및 데이터 보호

■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별표 7]

시설관리자 직무교육 교과목(제16조제1항제2호 관련)

과 목	과 목 내 용
통신 기초	유선·무선통신 개론, 안테나·레이더 이론
선박교통관제 시스템 이해	무선전송 시스템(M/W) 이론,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이해, 정보통신보안
전파 관리	전파법, 전파 관리 정책, 측정장비 운용
네트워크 구축기술	네트워크 개념 및 장비기능, 네트워크 구축 방법, 네트워크 고장 진단
공사 계약	정보통신공사법, 국가계약법, 계약 실무, 정보통신공사 설계

■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선박교통관제사 증서

<p>IALA logo</p>	<h3>선박교통관제사 증서</h3> <h2>VTS Operator</h2> <h2>Course Certificate</h2>	<p>해양경찰청 로 고</p>
<p>아래사항을 증명함 <i>This is to certify that</i></p> <p>○ ○ ○</p>		
<p>선박교통관제사 기본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였음 <i>has successfully completed a</i></p> <p><i>V-103/1 VTS Operators Training Course</i></p>		
<p><i>Issued on behalf of</i> <i>Korea Coast Guard</i> <i>Republic of Korea</i></p>	<p><i>Course Certificate No:</i> <i>Awarded at</i> <i>Signature</i> <i>Date</i></p>	
<p>IALA 권고 V-103과 V-103/1 교육과정에 따라서 이 증서를 수여함 <i>This Course Certificate is awarded in accordance with IALA Recommendation V-103</i> <i>and Model Course V-103/1</i></p>		

210mm× 297mm[백상지(150g/㎡)]

■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서식]

선박교통관제사 보수교육 증서

<p>IALA logo</p>	<p>선박교통관제사 보수교육 증서</p> <p>VT S Operator Refresher</p> <p>Training</p> <p>Course Certificate</p>	<p>해양경찰청 로 고</p>		
<p>아래사항을 증명함</p> <p><i>This is to certify that</i></p> <p>○ ○ ○</p> <p>선박교통관제사 보수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였음</p> <p><i>has successfully completed a</i></p> <p><i>V-103/5 VT S Revalidation Process Course</i></p> <table style="width: 100%; margin-top: 20px;"><tr><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p><i>Issued on behalf of</i></p><p><i>Korea Coast Guard</i></p><p><i>Republic of Korea</i></p></td><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p><i>Course Certificate No:</i></p><p><i>Awarded at</i></p><p><i>Signature</i> <i>Date</i></p></td></tr></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IALA 권고 V-103과 V-103/5에 따라서 이 증서를 수여함</p> <p style="text-align: center;"><i>This Course Certificate is awarded in accordance with IALA Recommendation V-103</i></p> <p style="text-align: center;"><i>and Model Course V-103/5</i></p>			<p><i>Issued on behalf of</i></p> <p><i>Korea Coast Guard</i></p> <p><i>Republic of Korea</i></p>	<p><i>Course Certificate No:</i></p> <p><i>Awarded at</i></p> <p><i>Signature</i> <i>Date</i></p>
<p><i>Issued on behalf of</i></p> <p><i>Korea Coast Guard</i></p> <p><i>Republic of Korea</i></p>	<p><i>Course Certificate No:</i></p> <p><i>Awarded at</i></p> <p><i>Signature</i> <i>Date</i></p>			

210mm× 297mm[백상지(150g/㎡)]

■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선임선박교통관제사 증서

<p>IALA logo</p>	<p>선임선박교통관제사 증서</p> <p>VTs Supervisor</p> <p>Course Certificate</p>	<p>해양경찰청 로 고</p>		
<p>아래사항을 증명함</p> <p><i>This is to certify that</i></p> <p>○ ○ ○</p> <p>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였음</p> <p><i>has successfully completed a</i></p> <p><i>V-103/2 VTS Supervisor Training Course</i></p> <table style="width: 100%; margin-top: 20px;"><tr><td style="width: 50%;"><i>Issued on behalf of</i> <i>Korea Coast Guard</i> <i>Republic of Korea</i></td><td style="width: 50%;"><i>Course Certificate No.:</i> <i>Awarded at</i> <i>Signature</i> <i>Date</i></td></tr></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IALA 권고 V-103과 V-103/2 교육과정에 따라서 이 증서를 수여함</p> <p style="text-align: center;"><i>This Course Certificate is awarded in accordance with IALA Recommendation V-103</i> <i>and Model Course V-103/2</i></p>			<i>Issued on behalf of</i> <i>Korea Coast Guard</i> <i>Republic of Korea</i>	<i>Course Certificate No.:</i> <i>Awarded at</i> <i>Signature</i> <i>Date</i>
<i>Issued on behalf of</i> <i>Korea Coast Guard</i> <i>Republic of Korea</i>	<i>Course Certificate No.:</i> <i>Awarded at</i> <i>Signature</i> <i>Date</i>			

210mm× 297mm[백상지(150g/㎡)]

■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선박교통관제사 현장직무교육 강사 증서

IALA
logo

선박교통관제사 현장직무교육 강사 증서 VTS Operator On-the-Job Training Instructor Course Certificate

해양경찰청
로 고

아래사항을 증명함

This is to certify that



선박교통관제사 현장직무교육 강사 양성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였음

has successfully completed a

V-103/4 VTS Operator On-the-Job Training Instructor Course

*Issued on behalf of
Korea Coast Guard
Republic of Korea*

Course Certificate No:

Awarded at

Signature

Date

IALA 권고 V-103과 V-103/4 교육과정에 따라서 이 증서를 수여함
*This Course Certificate is awarded in accordance with IALA Recommendation V-103
and Model Course V-103/4*

210mm× 297mm[백상지(150g/㎡)]

■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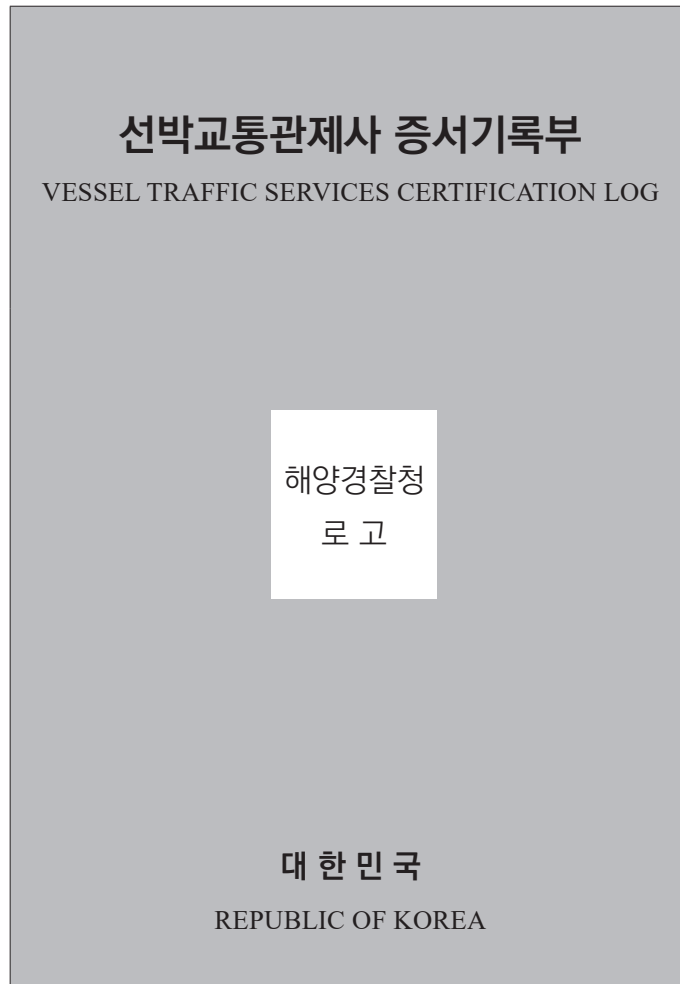
현장직무교육일지

소속 부서		직 급		성 명	
교육과정				(관제사, 선임관제사) 증서교부일	
교육기간 (시간)	현장직무교육 강사				
	소 속	직 급	성 명	확 인	
교과목	교육내용			담당강사	비고
선박교통관제 규정					
지형학과 지리학					
기상학적인 특성					
선박통항특성					
관제시설 운영					
당직책임					
선박교통관제 업무					
특수환경					
선박교통관제 지원 관련 업무					
비상절차					
현장체험훈련					

210mm× 297mm[백상지(150g/㎡)]

■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표지)



88mm x 125mm (특수용지 83g/㎡)

■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1면)

발급번호 :

Serial NO.

선박교통관제사 증서기록부

Vessel Traffic Services Certification Log

아래사항을 증명함

This is to certify that

IALA 권고 V-103 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이수하였음

has successfully completed an accredited course of basic

training in VTS in accordance with IALA Recommendation

V-103, as approved by Korea Coast Guard,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해 양 경 찰 청 장

Korea Coast Guard,

Republic of Korea.

88mm x 125mm (특수용지 83g/㎡)

■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2면)

증서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photo of holder

날 인 0 0 0(인)

88mm x 125mm (특수용지 83g/㎡)

■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3면)

선박교통관제사 기본교육 VTS Operators Training

훈련기관 : 과정기간 : 증서번호 : 해양경찰청장	공 인
--	-----

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 VTS Supervisor Training

훈련기관 : 과정기간 : 증서번호 : 해양경찰청장	공 인
--	-----

현장직무교육 강사 양성교육 VTSO OJT Instructor Training

훈련기관 : 과정기간 : 증서번호 : 해양경찰청장	공 인
--	-----

88mm x 125mm (특수용지 83g/㎡)

■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4면)

현장직무교육 On The Job Training

배 서 Endorsements

훈련기관 : 과정기간 : ○○해양경찰청장	공 인
----------------------------------	-----

배 서 Endorsements

훈련기관 : 과정기간 : ○○해양경찰청장	공 인
----------------------------------	-----

배 서 Endorsements

훈련기관 : 과정기간 : ○○해양경찰청장	공 인
----------------------------------	-----

88mm x 125mm (특수용지 83g/㎡)

■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7면)

증 서 갱 신 Revalidation
(선박교통관제사 보수교육)

훈련기관 :
과정기간 :
유효기간 :
증서번호 :

해양경찰청장

공 인

증 서 갱 신 Revalidation
(선박교통관제사 보수교육)

훈련기관 :
과정기간 :
유효기간 :
증서번호 :

해양경찰청장

공 인

증 서 갱 신 Revalidation
(선박교통관제사 보수교육)

훈련기관 :
과정기간 :
유효기간 :
증서번호 :

해양경찰청장

공 인

88mm x 125mm (특수용지 83g/㎡)

[illegible]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규정집(2022)

발 행 일 2022년 2월

발 행 처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TEL. 032-835-2685

디자인·제작 주식회사 아미고디자인
TEL. 02-517-5043
